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 '09.4. 변경사항 반영 -

2009. 4.

국 서 인 경	토 울 천	해 특 광 기	양 별 역	부 시 시 도
------------------	-------------	------------------	-------------	------------------

차 례

1. 계획수립의 개요	1
1.1 광역도시계획의 성격	1
1.2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의 배경	2
1.3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의 배경	3
1.4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의 범위	5
2. 현황 및 특성	8
2.1 현황	8
2.2 특성	10
2.3. 주요 정책과제	16
3. 계획의 목표와 전략	18
3.1 목표	18
3.2 전략	18
3.3 계획지표	20
4. 공간구조 구상	21
4.1 주요 정책과제	21
4.2 공간구조개편 구상	21
4.3 다핵화 추진전략	25
5. 부문별 계획	30
5.1 광역토지이용	30
5.2 녹지, 경관 및 여가	39
5.3 광역교통	50
5.4 광역공급 및 이용시설	60
5.5 방재	66
5.6 환경보전	68
6. 개발제한구역 조정방안	78
6.1 개발제한구역 조정의 기본방향	78
6.2 시도별 및 국책사업 해제총량 설정 및 활용방안	79
7. 집행 및 관리	83
7.1 광역도시계획 집행체제	83
7.2 광역도시계획의 관리	85
변경안 신·구 대비표	86
<참고> 기존(2007.7 승인) 개발제한구역 조정방안	103

표 차례

<표 1> 수도권의 강점, 약점, 기회요인 및 위협요인	15
<표 2> 수도권내 5개 지역 구분	32
<표 3> 보전용지 이외의 토지이용 구분	34
<표 4> 여가권역별 거점지역과 관광상품(예시)	49
<표 5> 수도권 간선도로망 계획노선 및 특성	55
<표 6> 수도권 간선철도망 계획노선 및 특성	57
<표 7> 해제가능총량의 종합	79
<표 8> 경기도 권역별 물량배분(안)	80
<표 9> 서민주택 권역별 배분계획(안)	80
<표 10> 서민주택 개발용지 용도별 면적 구성비 예시	82
<표 11> 개발제한구역 조정유형	86
<표 12>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조정기준총량 및 조정허용총량	88
<표 13> 시·군별 개발제한구역 조정 결과 종합	90
<표 14> 수도권 광역계획권내 국책사업	91
<표 15> 수도권 광역계획권내 지역현안사업	93
<표 16> 수도권 광역계획권내 일반조정가능지역	94

그림 차례

<그림 1> 수도권 광역계획권 범위	6
<그림 2> 수도권의 공간적 위상	10
<그림 3> 수도권내 직주근접 자족도시권 형성	25
<그림 4> 수도권 공간구조 골격구상도	29
<그림 5> 수도권 5개 지역 구분도	32
<그림 6> 광역녹지축 설정	42
<그림 7> 수도권 골격경관의 개념(예시)	45
<그림 8> 수도권 여가관광권역 설정	48
<그림 9>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간선도로망 계획구상(변경)	54
<그림 1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간선철도망 계획구상	56
<그림 11>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제1차) 분포도	95

1. 계획수립의 개요

1.1 광역도시계획의 성격

□ 광역도시계획제도의 도입

1.1.1 1991년 도시계획법 개정(1991년 12월 14일 법률 제4427호)으로 도입된 광역계획 제도의 결함을 2000년 1월 도시계획법 전면개정(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을 통해 보완하여 20년 장기의 광역도시계획 수립제도를 새로이 규정하였다.

1.1.2 광역도시계획은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행정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하여, 도시권 범위에 따라 해당 시장·군수, 시·도지사,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광역계획권의 공간구조와 기능분담, 녹지관리체계와 환경보전, 광역시설의 배치 등에 관하여 정책방향을 정하는 계획이다.

□ 광역도시계획의 위상

1.1.3 시·군에서 수립하는 도시기본계획은 당해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른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하도록 되어 있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②),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기본계획 또는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하도록 하고 있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①),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관리계획의 최상위 계획에 해당된다.

1.1.4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2호),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필요성 여부는 도시기본계획 수립권자가 판단한다.

□ 광역도시계획의 성격

1.1.5 광역도시계획은 전략계획, 정책계획, 지침계획의 성격을 지니는 계획으로 청사진적 계획으로 운용되어 온 종전의 광역개발계획, 도시기본계획과는 구분된다.

1.1.6 전략계획으로서 광역도시계획은 장기 미래상 제시보다는 광역계획권 차원의 주요 정책과제를 발굴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적 목표를 설정하며 목표달성을 위한 실천계획 제시의 역할을 수행한다.

※ 미래 개발수요에 대해서도 공간구조개편을 전제로 어느 곳을 우선적으로 개발하여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 차원의 원칙과 순위 등을 정하여 인구증가추세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토지이용 및 교통부문 등의 계획을 제시하게 된다.

1.1.7 정책계획으로서 광역도시계획은 전략적 목표 달성을 위해 각 정책주체가 추진할 실천계획과 시책을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1.1.8 지침계획으로서 광역도시계획은 광역적 차원에서 도시기본계획·도시계획 등의 하위계획 수립과 개별 개발사업 인·허가시 고려할 상위적 사항들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광역도시계획이 정하는 사항은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계획등의 하위계획에서 기본적인 취지를 검토하여 집행됨으로써 이들 계획에 대하여 지침(guideline)적 성격을 가지나, 직접적으로 개별적 개발행위나 토지이용행위를 구속하지는 않는다.

1.2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의 배경

□ 도시광역화 진행

1.2.1 1990년대에 들어와 서울 및 서울 인접지역 시·군의 인구성장은 정체하기 시작한 반면, 서울 반경 30km 외곽에 위치한 시·군의 인구성장률은 전반적으로 높아지면서 서울로의 통근권 범위(통근율 5% 이상)가 40km까지 확대되고, 경기도 시·군의 직주비율(job-housing balance)이 낮아지는 등 서울 중심 단핵공간구조가 보다 심화되고 있다.

1.2.2 1980~2000년의 20년동안 시가지 면적(지목상 해당 토지면적의 합)이 673km²에서 1,092km²로 1.6배 증가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도시계획구역 지정 개소수도 증가하고 도시계획구역 총면적도 확대되어 왔다.

※ 2000년 현재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된 면적은 수도권 전체면적의 31.7%인 3,725km²이며, 도시계획구역 밖에서 개발되는 준도시지역도 1994년 226km²에서 1999년 255km²로 29km² 증가하여 왔다.

□ 개발제한구역 조정과 광역도시계획수립

1.2.3 1999년 7월 확정 발표한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방안」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을 존치하기로 한 수도권 등 7개 대도시권의 경우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 후 개발제한구역을 조정하는 것으로 방침을 설정하였다.

※ 제도개선방안 연구과정에 자문역할을 한 영국의 TCPA(도시·농촌계획학회)는 광역도시계획수립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문제를 해결할 것을 건의하였다.

1.2.4 1999년 9월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관한 세부내용을 규정하는 건설교통부의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이 제정되고, 이에 근거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으나, 실제 계획수립을 진행하면서 지침보완이 필요하거나 일부 불합리하게 규정된 사항을 재검토하여 2001년 9월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을 부분 개정하였다.

□ 계획수립과정

1.2.5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 건설교통부장관과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경기도지사가 공동으로 입안하되, 계획수립 실무작업은 국책연구원인 국토연구원과 해당 시·도 연구원인 서울특별시정개발연구원, 인천발전연구원, 경기개발연구원이 공동으로 주관하여 수행하고 학계 및 전문연구기관 등이 특정분야별 연구에 참여하였다.

1.2.6 계획수립과정에서 법령이 규정하는 광역도시계획 협의회를 설치하여 수도권 광역계획권지정, 환경평가검증결과 처리, 개발제한구역 조정방안, 광역도시계획 진행 등과 관련된 협의 및 조정을 추진하여 왔다.

1.2.7 수도권광역도시계획은 법령이 규정하는 절차로 공청회개최, 시장·군수 의견청취, 시·도의회 의견청취,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이 승인하게 된다.

※ 수도권광역도시계획에 관한 공청회는 2002년 1월 22일에 개최하였으며, 시장·군수 의견청취는 2002년 2월에 수행한 바 있다.

1.3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의 배경

□ 수도권 지역경제활성화

1.3.1 「개발제한구역조정 및 관리계획」(2008.9)에 의해, 수도권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중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을 해제하여 산업·물류단지를 조성키로 결정하였다.

1.3.2 국정과제인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IT, BT, ET 등의 성장동력산업, R&D 및 의료산업의 거점을 육성하여 경제위기 이후 미래의 기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산업거점과 연계된 녹색형 주거지 조성, 녹색교통망 확충을 통해 정부의 재정지출 효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 서민 주거복지 확대

1.3.3 서민들의 자가보유 촉진을 위해서는 수요가 많은 곳에 저렴한 주택을 많이 공급할 필요가 있다. 수요가 많은 도심지는 높은 분양가로 서민들의 거주가 어렵고, 민간이 주로 추진하여 안정적 공급에도 애로가 있으며 도시 외곽의 신도시 개발은 직주분리, 교통수요 유발, 조성비용 과다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1.3.4 도시내 공급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서민주택을 도심 접근성이 우수하면서도 보전가치가 높지 않은 개발제한구역 중 일부를 해제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

□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관리 개선

1.3.5 개발제한구역 중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은 각종 불법 시설물이 난립하여 오히려 녹지를 훼손하고 도시환경을 크게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훼손된 녹지를 복구·정비하여 시민의 친환경적 여가공간을 확충할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1.3.6 개발제한구역으로 관리할 가치가 낮은 지역을 일부 활용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해제를 허용하는 한편 해제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정부의 개정 광역도시계획 수립지침(2008.11.3) 및 시책에 부응하여 기존의 광역도시계획을 변경

◆ 「개발제한구역조정 및 관리계획」(2008년 9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의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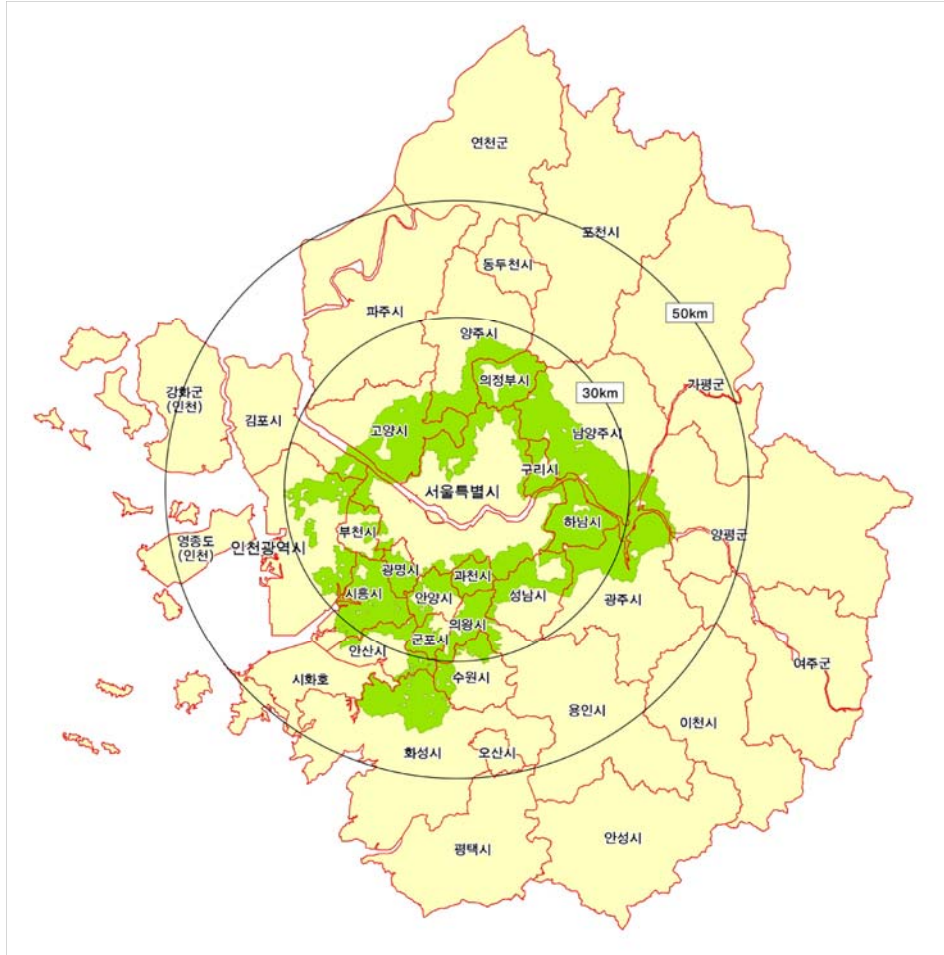
- (기본방향) 개발제한구역으로 계속 보전할 가치가 낮은 지역은 부분적으로 산업용지 등 도시용지로 해제·활용을 허용하되, 지가상승이나 환경훼손 등의 부작용은 방지하는 데에 중점을 둠
- (해제가능규모) 추가해제 가능규모는 기존 7대 대도시권별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해제예정총량의 10~30% 범위 내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정해지는 적정 규모로 한정(전국 추가해제 총규모 34~102km²).
 - 서민주택 건설 등을 위한 부지와 국정과제 추진지역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필요한 최소면적을 별도로 추가 인정
- (해제가능지역) 토지 특성상 개발제한구역으로 보존가치가 낮은 환경평가결과 3~5등급지로서, 그 면적규모가 20만m² 이상 원칙
 - 대규모 환경훼손이 수반되는 지역, 도시간 연담화가 우려되고 다른 지역과 갈등을 초래하는 지역, 지가관리 실패지역 등은 제척
- (개발방향) 해제되는 지역은 주변 자연환경에 조화되도록 친환경적으로 개발하고, 개발로 인한 혜택은 주로 서민 및 중소기업들에게 돌아가도록 유도
- (존치지역 관리강화) 대규모 구역 훼손의 주원인이 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개별 시설물 입지 허용을 최소화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훼손된 지역을 녹지 등으로 복구

1.4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의 범위

□ 수도권 광역계획권 지정

1.4.1 수도권 광역계획권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2000.9.1.)를 거쳐 수도권 전체를 범위로 하여 2000년 10월 결정되었다.

1.4.2 수도권 광역계획권에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전역과 경기도 31개 시·군을 모두 포함한 면적 11,704km²의 범위에 인구 2,135만인(2000년)이 거주하며,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1,541km²를 포함하고 있다.



<그림 1> 수도권 광역계획권 범위

※ 수도권 광역계획권 설정 자문연구는 중심도시와의 연계성(linkage), 주변지역의 도시적 특성(urban characteristics)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20개시 4개군을 범위로 하는 광역계획권(안)을 제안하여 이를 검토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2000.7.7)에 상정해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교동면·삼산면·서도면 제외, 옹진군 영흥면 포함),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안산시, 고양시, 과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파주시(진서면, 군내면, 장단면, 진동면 제외), 동두천시, 하남시, 용인시, 김포시, 오산시, 양주시, 화성시, 양평군(서종면·양서면·강하면에 한함) 등 23개시 3개군을 지정하는 것으로 심의하였으나, 경기도에서 이의를 제기하면서 재건의함에 따라 수도권 전체를 하나의 광역계획권으로 하는 안을 수용하여 2000년 9월 1일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도권 전체를 광역계획권으로 하는 것으로 재심의 지정하였다.

□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의 시간적 및 내용적 범위

1.4.3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 2000년을 기준년도로 하고, 2020년을 목표년도로 하여 광역계획권의 목표와 전략, 공간구조개편구상과 부문별계획으로서 광역토지이용, 여가공간·녹지관리, 환경보전, 방재, 광역교통, 광역공급·이용시설의 6개 부문과 개발제한구역 조정계획, 집행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1.4.4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은 「개발제한구역조정 및 관리계획」(2008.9)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추가해제총량을 설정하고 그 활용방안을 제시하며, 이에 따라 영향을 받는 광역계획권의 목표와 전략, 공간구조 및 부문별계획의 변경내용을 포함한다.

□ 수도권정비계획과의 관계

1.4.5 이로써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공간적 대상범위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근거한 수도권정비계획과 같게 되어 양 계획 간에 성격과 기능을 구분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다.

1.4.6 수도권정비계획은 국가가 직접 계획수립권자로 수립하는 계획이며,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 등의 3개 권역을 지정·운용하는 청사진적 규제계획이고, 법령을 통해 각 권역별로 인구집중유발시설을 포함한 개발행위를 차등규제하는 방법을 통해 계획을 집행한다.

1.4.7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 기본적으로 둘 이상 시·군의 행정구역을 범위로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광역도시계획의 하나이며, 다만 개발제한구역조정을 포함하는 2020년 광역도시계획의 특성상 국가(건설교통부장관)도 공동수립자로 참여하게 되었다. 계획기간이 20년 장기계획이라는 점과 전략계획, 정책계획, 지침계획이라는 점에서도 수도권정비계획과 구분된다.

2. 현황 및 특성

2.1 현황

□ 위치 및 행정구역

2.1.1 수도권은 한반도 중앙에 위치하여, 한반도내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 되어 왔다. 철도 및 자동차 교통이 발달되기 이전에는 수도권내에서 동서로 흐르는 한강이 중요한 내륙수로로 활용되었으며, 20세기 초 철도 및 간선도로망이 차례대로 개설되고, 1970년대 이후 고속도로 등이 건설되면서 근대적 교통망 체계를 비로소 갖추게 되었다.

2.1.2 수도권내 주핵도시 서울은 14세기말부터 우리나라 수도로 기능해 오고 있고, 향후에도 수도로서 위상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수도권내 입지한 국제항만과 공항 등으로 수도권은 한반도의 관문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1.3 수도권의 행정구역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로 크게 구분되고, 서울은 25구, 인천은 8구 2군, 경기도는 27시 4군으로 각각 구성되어 있으며, 수도권 총면적은 11,723.85㎢로 전국토의 11.8%를 차지한다.

□ 자연환경

2.1.4 2000년 현재 수도권의 자연지형은 전체 토지의 3/4이 표고 100m 이하이거나 경사도 10%이하의 구릉지와 평탄지로 되어 있으며, 표고 500m 이상의 고지대는 가평군, 양평군, 남양주, 광주권의 경기 북부 및 동부지역에 주로 분포되어 있다.

2.1.5 2000년 현재수도권내에는 국가하천 17개소, 지방 1급하천 5개소, 지방 2급하천 568개소의 590개 하천이 분포하고 있으며, 중심하천인 한강은 연장 150km, 폭 1km로 중앙부에서 서로부터 동으로 유하(流下)하고 있다.

2.1.6 1990년도 초반에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수도권의 녹지자연도는 대부분 2등급(41.7%)이며, 수도권 평균 녹지자연도 등급은 4.33으로 전국 평균 녹지자연도 5.10과 비슷한 수준에 있다.

□ 인구 및 가구수

2.1.7 수도권 인구는 1980년 1,323만인에서 2000년 2,135만인으로 1.6배 증가하여, 전국인구(4,614만인)의 46.3%를 차지하게 되었다. 수도권의 최근 5년간(1995~2000) 인구증가율은 2.7%로, 전국인구 증가율 1.3%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증가하였다.

2.1.8 2000년 현재 수도권 인구는 서울이 990만인(46.3%), 인천 248만인(11.6%), 경기 898만인(40.5%)으로 구성되어 있고, 경기도내 수원, 성남, 부천, 고양, 안양, 안산의 6개 시의 경우 각각 인구 50만인을 상회하고 있다.

2.1.9 2000년 현재 수도권의 총가구수는 655만 가구로 전국 가구수의 45.4%를 차지하며, 지난 5년동안(1995~2000) 가구수는 증가율 5.1%로 인구증가율의 2배 속도로 증가해 오고 있다. 가구당 인원수는 지난 20년(1980~2000)동안 4.5인에서 3.3인으로 감소해 오고 있다.

□ 토지이용

2.1.10 2000년 현재 토지피복분류에 의한 토지이용을 보면 산림지와 경작지가 각각 52.0%와 26.0%로 3/4 이상을 차지하며, 시가지는 9.0%, 기타의 초지 6.0%, 나지 3.0%, 수역 2.0%, 습지 1.0%로 되어있다. 지목상 시가지면적(대, 공장, 학교, 도로, 철도용지)은 1980년 673km²에서 2000년 1,092km²로 동 기간의 인구증가 배수와 같은 수준의 1.6배로 증대하여 왔다.

2.1.11 2000년 당시 수도권내 토지이용 및 개발행위는 국토이용관리법 및 도시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을 통해 주로 관리되고 있었다. 당시 수도권 전역의 토지 중 도시지역이 31.3%, 준도시지역이 2.2%, 준농림지역이 29.7%로 각각 지정되어 있고, 보전적 성격이 강한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이 각각 34.5%와 2.3%로 지정되어 있었다.

2.1.12 2000년 현재 도시계획구역은 3,743km²로 이중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에 따른 주거·상업·공업지역의 도시용지가 838km²로, 용도지역별로는 주거지역 645km², 상업지역 69km², 공업지역 124km²로 구성되어 있다.

□ 경제활동 및 교통

2.1.13 수도권 GRDP(지역내총생산액)는 지난 10년간 전국평균 이상으로 꾸준히 증가하여 전국대비 비중이 1995년 43.8%에서 2000년 현재 47.2%로 크게 늘어나 약 238조원(경상가격 기준)에 이르고 있다.

2.1.14 2000년 현재 수도권내 거주하는 취업자수는 848만명으로 전국 취업자수의 46.0%를 차지한다. 산업별 비중에 있어서는 1차 산업 취업자수가 전국대비 10.5%로 매우 낮은 반면, 2·3차 산업 취업자는 각각 52.2%, 51.0%로 높게 나타나고, 특히 부동산 및 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국제 및 외국기관 취업자수는 전국대비 비중이 매우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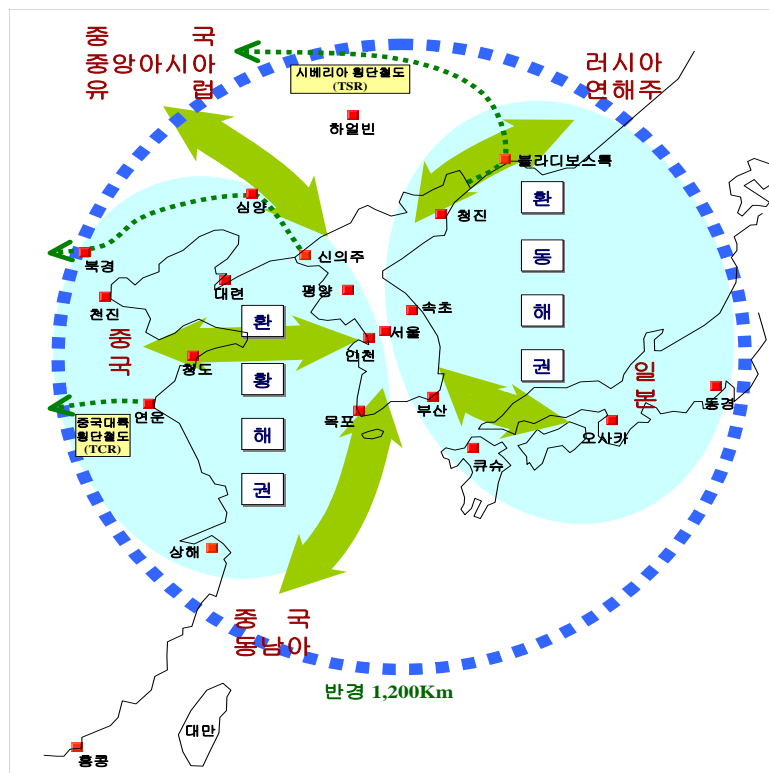
2.1.15 2000년 현재 각 시·군별 거주 취업자수에 대비한 일자리수 비율로 본 직주비율에 있어서는 서울이 1.13인데 반하여 인천의 0.89를 비롯하여 서울 주변의 광명(0.58), 군포(0.62), 의왕(0.67), 고양(0.68), 성남(0.71), 남양주(0.72), 의정부(0.73), 부천(0.79), 안양(0.81)등의 도시들에서 직주비율이 매우 낮게 나타난다.

2.1.16 서울 주변 시·군에서 발생하는 전체 출근통행 중에서 서울로 출근하는 비율은 1996년 24.3%에서 2002년 23.4%로 감소하였으나, 서울 주변 시·군 인구의 급증으로 인해 서울로 출근하는 통행량은 87만7천 통행에서 103만2천 통행으로 17.6%나 급증하였다. 특히 서울 주변의 신흥택지개발지 및 난개발 지역(용인, 김포, 광주, 구리, 양주, 남양주)은 자족시설 형성의 부족으로 서울시 의존도와 서울로의 유입 출근량이 모두 급격히 증가하여 서울 및 서울 주변지역 교통정체의 원인이 되고 있다.

2.2 특성

가. 공간적 위상

2.2.1 수도권은 초국경적 도시회랑(transnational urban corridor)을 형성하는 상해, 천진, 북경, 대련, 블라디보스톡, 평양, 서울, 인천, 부산, 후쿠오카, 오사카, 도쿄 등 동북아시아의 성장중심이 되는 대도시들의 거점지역에 해당하며, 서울을 중심으로 반경 1,200km 원을 그린 범위에는 동북아 주요도시들이 대부분 포함되고 그 범위내 인구가 세계인구의 25%에 달한다.



출처 : 국토연구원, 21세기 국토비전과 전략, 1998, p.84

<그림 2> 수도권의 공간적 위상

2.2.2 수도권은 한반도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로서 역사적 지위를 가지며, 지리적으로 전국 모든 곳으로 이동소요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중심에 있고, 활발한 산업생산 및 중추관리활동을 통해 한국의 경제성장 발전을 주도하고 있는 지역이다.

나. 역사적 특성

2.2.3 조선시대 초 태조 3년(1394년)에 풍수지리적 측면과 전국 각 지역으로 부터의 거리 및 수륙교통의 중심지적 위치를 감안하여 지금의 서울인 한양으로 천도가 이루어 지고, 조선시대 말의 1883년 인천항 개항을 통해 세계와의 교역과 문호개방으로 수도권 이 성장발전하는 데 새로운 원동력이 부여되었다.

2.2.4 경인선(1899년), 경부선(1905년), 경의선(1906년), 경원선(1914년), 수인선(1937년) 등의 철도가 차례대로 개통되고, 1930년대 이후에는 일제에 의한 공업위주 병참기지화 정책이 추진되면서 도시적 기능과 공간적 범위가 서울주변으로 확대하게 되었다.

2.2.5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산업화하기 시작한 1960년대부터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 하여 서울로의 인구집중이 가속화되고, 경인고속도로(1968년), 경부고속도로(1970년)가 건설되고 전철 및 지하철 시대가 열리기 시작한 1970년대에는 서울의 강남개발과 함께 생활권이 광역화되어 수도권 전체로 도시화가 확산되었다.

2.2.6 1980년대 후반 5개 신도시개발과 자동차보급의 확대로 광역도시화 현상은 가속 화되어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대도시권의 공간적 영역이 서울반경 35~40km에 이르게 되고, 2000년 현재 서울인구는 최정점의 1990년대 중반(1995년) 보다 33만인이 감소하 여 경기도 지역으로의 인구분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 여건변화 전망 및 잠재력 종합

□ 강점

2.2.7 동북아시아가 환태평양경제권과 대륙경제권을 연결하는 세계경제 중심지로 부상됨으로써 역내 중심부에 위치한 수도권의 역할이 크게 증대할 것이며, 특히 개방화를 통해 급격하게 성장해 오고 있는 중국과 향후 교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북한 과 교역량이 증가함에 따라 수도권의 성장 발전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2.2.8 한반도 발전축으로 자리매김된 환황해축 및 중부내륙축 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정치, 행정, 금융 등 각종 중추관리기능이 집중되어 있어 21세기에도 한반도 발전을 계 속 주도해 갈 것이다.

2.2.9 동북아 경제의 허브(hub)역할을 할 수 있는 인천국제공항과 항만, 국제전시장, 컨벤션센터 등 국제화 기반시설의 신설 및 정비로 국제경쟁력이 보다 강화된 미래지향적 대도시권으로 발전할 것이다.

2.2.10 남북한 교류확대에 따른 협력기반조성과 광역교통망체계 정비로 특히 접경지역이 위치한 수도권 북부지역이 교류·관광거점지역으로 부상되고, 접경지역 개발 및 보전과 교류협력사업을 연계시킨 평화벨트 조성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2.2.11 고급 인력 및 기술의 집적지로 지식정보화 기반이 양호한 수도권이 동북아 중심도시권으로 국제적 기능이 보장되고 기존의 중추관리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국제중추관리기능 및 지식기반산업의 입지여건이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예견된다.

2.2.12 수도로서 600년 역사를 지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내 도시의 다양한 역사·문화유산과 풍부한 해상 및 도서 관광자원은 수도권 주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증대에 부응하여 여가 및 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가치가 증폭될 것이다.

□ 기회의요인

2.2.13 지식기반화와 함께 국가간의 자유로운 자본이동으로 특징지워지는 세계화시대에 있어 국가경쟁력은 도시권 경쟁력에 의해 좌우될 것이며, 이에 따라 국제경쟁력 기반을 갖추고 있는 수도권을 세계수준의 첨단도시지역으로 자리매김(positioning)함으로써 국가경쟁력 제고의 선도적 기능과 역할을 부여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2.2.14 수도권은 남북협력으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지역이며, 특히 북부지역은 남북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고 통일의 충격을 완충적으로 흡수하는 등 통일시대 한반도의 새로운 변화를 주도해나갈 전략적 요충지로서의 기능과 역할이 재정립될 것으로 전망된다.

2.2.15 탈제조업화와 고차 서비스산업으로의 전환등 도시산업구조의 개편과 지식이 중요한 자원으로 투입되는 지식기반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수도권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이 요구된다.

2.2.16 198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된 수도권 도시의 교외화·광역화 현상은 앞으로도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도·농통합형 생활양식이 점차 보편화될 것이다. 또한 정보화가 진행되면서 수도권내 각 지역별 거주민들은 서울에의 획일적 의존성을 벗어나 지역고유의 다양한 사회문화와 삶의 양식을 창출하려는 욕구를 보다 강하게 가지게 될 것이다.

2.2.17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입이 감소하고 실질 주택보급률이 제고됨에 따라 과거 고속성장기에 있어 택지·주택, 산업단지 등의 물량공급에 초점을 맞춘 성장추구적·개발지향적 사고보다는 질적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QOL) 제고에 초점을 맞춘 성장관리적·환경지향적 사고로 전환될 것이다.

2.2.18 행정중심복합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 국토재편 및 수도권 과밀방지를 위한 정부 정책으로 인해, 향후 수도권 정책방향이 기존의 집중억제 기초에서 계획적 관리로 전환될 예정이므로 수도권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이 강력하게 추진될 수 있다.

2.2.19 개발제한구역의 추가해제방침이 결정됨에 따라 수도권 산업경쟁력 강화, 서민주택공급 확대, 주민생활 편의성 제고 등을 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추가적인 토지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

라. 약점과 위협요인

□ 약점

2.2.20 경기도 지역내 택지개발중심의 산발적 도시확산을 통한 광역화는 일극중심형 서울의존적 공간구조로 인해 장거리 통근통행 발생을 누적시키고, 교통정체를 심화시키고 있는 한편, 경기도 시·군 상호간의 기능적 연계성은 미약한 상태에 있다.

2.2.21 도시개발압력에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성장관리 체제가 미비되어, 과밀과 무질서한 도시개발을 확산시키고 기반시설부족과 교통혼잡, 자연환경훼손 및 환경오염등의 도시문제를 광역화하여 사회적 비용을 증대시키고 있다.

2.2.22 수도권내 도시개발은 신규 토지개발에 중점을 둔 반면, 기성시가지는 상대적으로 방치되어 급속히 노후·불량화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재건축, 재개발이 무질서하게 진행되면서 기반시설부족과 경관파괴로 기성시가지내 도시환경이 열악해지고 있다.

2.2.23 도시민들이 일상생활환경 주변에서 쉽게 접근·이용할 수 있는 녹지 및 오픈스페이스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광역여가공간으로 이용가능한 대규모 녹지 및 오픈스페이스가 수도권 외곽 일부에 편중 분포하여 주말 나들이 통행집중과 교통체증으로 주말 여가활동을 쾌적하게 보내기가 어렵게 되어있다.

□ 위협요인

2.2.24 1997년부터 “제2차 수도권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수도권 인구집중을 규제해 오고 있으나, 수도권 인구집중도는 1995년 45.3%에서 2000년 46.3%로 오히려 0.1% 증가하고

있다. 한편, 제 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에서도 2020년의 수도권 인구비율을 전국인구의 40% 수준으로 유지하고자 하고 있으며, 새로이 수립된 제 3차 수도권정비계획에서도 전입억제 및 전출유도로 2010년대 초반에는 인구가 증가추세에서 감소추세로 전환해가기 위한 관련 정책 및 추진시책을 강구하고 있다. 따라서 수도권으로부터 인구 및 기능분산이라는 국가정책추진에 따라 수도권 개발잠재력이 약화될 가능성도 있다.

2.2.25 우리나라는 용도지역제를 중심으로 토지이용을 관리해오고 있어 용도지역 변경에 따라 개별 토지가격에 대한 기대가치가 크게 달라진다. 특정 토지에 대한 용도지역변경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거나 위치 등이 사전에 제시될 경우에도 해당 토지소유자 등에 우발이익이나 손실을 안겨 사회적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다. 이러한 현행 토지이용관리제도의 미비점을 전제로 부적절한 계획으로 인한 자멸적(self-destruction) 요인을 배제하고, 광역도시계획의 성격과 기능에 걸맞은 계획내용으로 자충적(self-fulfillment)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정책(bundles of policies)중심의 계획으로 본 계획을 수립·운영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

2.2.26 무질서한 도시확산방지와 도시주변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30여 년 동안 유지해 온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 대하여 1999년 7월에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방안이 확정됨에 따라 집단취락 등은 우선해제하고, 보전가치가 낮은 토지는 조정가능지역으로 설정하여 개발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될 경우 해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조정할 지역(조정가능지역)을 설정하는 방법 등의 개발제한구역 조정방안을 마련하고 조정가능지역에 대한 광역적 차원의 관리방안을 제시함이 필요하다.

2.2.27 시·군·구 및 시·도의 행정구역단위별 지역이기주의에 따라 쓰레기 매립 및 소각 시설 등 기피시설 입지를 둘러싼 님비(Nimby) 및 핼피(Pimfy) 현상 등이 발생하고 있으나, 시·도 광역행정에 의하여 해소되지 않는 지자체간 갈등을 해소하는 지자체간 수평적 협력체계구축이 미약하다. 지방자치시대에 수도권 광역계획권내 지자체들간에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계획을 실천해가는 체제구축이 필요하다.

2.2.28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개발로 인해 기존 기반시설 용량의 부족이 발생할 수 있고, 녹지잠식 및 녹지축 훼손이 발생하여 환경수준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표 1> 수도권 강점, 약점, 기회요인 및 위협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경제의 주요중심인 동북아의 중심도시권 • 중추관리기능의 집중과 한반도 발전축에 위치 • 공항, 항만, 국제전시장, 컨벤션센터 등 국제교류기반 양호 • 고급 인력 및 기술의 집적지로서 지식정보화 기반 양호 • 다양하고 풍부한 문화·역사·관광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극중심형 서울의존적 공간구조 및 수도권내 지역간 기능연계 미약 • 도시권 확대 및 과밀화로 교통, 환경 등 도시문제의 광역화 및 도시서비스 수요 급증 • 기성시가지의 노후불량화 및 재활용 미흡 • 녹지 및 오픈스페이스로의 낮은 접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의 탈국경화로 도시권경쟁력의 비중 증가 • 남북교류 확대 및 동북아 경제권의 성장 • 산업구조개편과 지식기반산업 시대의 도래 • 광역화, 정보화, 지방화에 따른 삶의 다양성 추구 • 쾌적한 환경, 지속가능한 발전 등 삶의 질에 대한 인식 제고 • 수도권 국제경쟁력 제고 전략 추진 • 개발제한구역 조정 등 수도권 규제 합리화를 통해 신규 산업·물류용지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 집중억제정책의 지속으로 물적 개발잠재력 억압 • 용도지역제하의 경직된 토지이용관리제도를 전제로 한 광역토지이용계획 • 개발제한구역 조정과 광역도시계획의 연계 • 지자체간 수평적 협력관계 구축의 미약 • 개발제한구역 추가해제에 따른 기반시설 부담증가, 녹지훼손 등 우려

마. 미래상

2.2.27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에서 서울은 세계일류도시, 인천은 물류중심·경제자유도시, 경기도는 지식산업중심지역으로 각각 미래상을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도권은 중추관리기능 및 경제활동이 집중되고, 지식정보화 및 국제교류기반이 여타 지역에 비해 양호하며, 지경학적으로 동북아 및 남북교류의 중추적 위치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대도시권으로의 발전을 지향한다.

2.2.28 또한 수도권은 기존의 자연환경을 잘 보전하면서 이와 잘 조화되는 개발과 지역내 균형발전을 통해 수도권 주민 각자가 향상된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미래를 지향한다.

2.2.29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건설과 더불어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가 추진된다면 서울의 세계도시화, 인천의 동북아 물류중심도시화 및 경기의 지식기반산업중심지화 전략이 강력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2.3. 주요 정책과제

□ 수도권 위상강화와 공간구조 재편

2.3.1 세계경제질서 변화에 대응하고 동북아 중심도시권으로 발전해가기 위해서는 수도권에 지식기반산업 및 국제중추관리기능이 입지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확대하고 국제화 기반시설을 신설·확충하여야 한다.

2.3.2 남북화해 및 경제협력 진전에 따른 남북교류 활성화에 대비하고 세계와의 교류 속에 21세기 한반도 발전을 주도해가기 위하여 북한지역 및 중국·러시아·유럽대륙과의 물류교통적 측면의 연계강화를 고려한 수도권 개발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3.3 서울 중심의 단핵집중적 공간구조를 시정하고 수도권내 균형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수도권 공간구조를 다핵분산형으로 재편하고, 방사집중형 교통망을 격자 또는 순환망 중심의 격자순환형 간선교통망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 광역적 차원의 성장관리와 도시개발

2.3.4 공간구조 개편전략과 분산형 집중개발(decentralized concentration development) 및 쾌적한 직주근접형 토지이용을 전제로 도시개발의 공공성 확보와 개별 도시개발에 대해 광역적 차원의 질서를 부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2.3.5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방안」(1999.7)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와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을 조정·관리해 왔다. 금번 계획변경으로 인해 추가 해제되는 지역도 수도권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서민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새로이 마련된 「개발제한구역조정 및 관리계획」(2008.9)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조정·관리하여야 한다.

2.3.6 광역적으로 설치하여 서비스를 공급함이 보다 효율적인 시설에 대한 원활한 설치 및 운용을 위하여 지자체간 협력 및 국가지원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2.3.7 기존의 계획들이 실천수단의 부재로 도상계획(paper plan)에 머무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광역도시계획으로 광역지자체인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의 3자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본 계획의 실천성을 위해서는 수직적·수평적 광역행정협력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 자연환경보전과 녹색성장 지원체제 구축

2.3.8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IT, BT, ET 등의 차세대 성장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도시개발시에는 에너지절약형 공간구조, 그린홈 등의 방식이 적용된 녹색주거지 조성을 추진해야 한다.

2.3.9 환경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지역과 그 영향지역이 공간적으로 불일치하여 환경오염 및 훼손에 광역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광역적·종합적 차원의 환경관리정책이 마련되어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2.3.10 자연환경과 조화되는 도시개발과 일상생활공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과밀개발을 지양하고, 녹지공간확충 및 접근성을 제고하며, 철도·지하철·경전철·버스등 녹색교통위주의 대중교통을 활성화하여 대기오염 발생을 저감시킴과 동시에 혼잡비용도 줄여나가야 한다.

2.3.11 자연환경자원과 역사·문화자원을 잘 보전하고 이를 여가시간 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 따른 수도권 주민의 여가활동에 부응하기 위한 광역여가자원으로 적절히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계획의 목표와 전략

3.1 목표

- 3.1.1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한다.
- 3.1.2 수도권의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한다.
- 3.1.3 수도권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한다.

3.2 전략

3.2.1 선진국형 지식경제체제를 구축하여 동북아의 중심도시로 육성한다.

- 1) 지식기반사업과 신재생에너지 및 관련 R&D 산업의 입지여건을 개선하고 국제비즈니스 기반을 확충하여 수도권을 저탄소 녹색성장의 거점으로 육성한다.
- 2) 국토의 타지역과의 연계협력을 통하여 수도권 성장의 효과가 효율적으로 파급될 수 있는 상생발전체제를 구축한다.
- 3) 동북아시아 국제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을 위해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육성을 통하여 수도권의 국제기능을 강화한다.

3.2.2 수도권 공간구조를 다핵공간구조로 하고, 지역별로 자족도시권을 형성한다.

- 1) 서울 외곽에 거점도시를 육성하여 단핵집중의 수도권 공간구조를 다핵공간구조로 개편하고, 지역별 다핵화와 연계된 산업배치를 통하여 거점도시 중심의 자족생활권을 형성한다.
- 2) 거점도시간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여 상호 기능을 보완하고, 거점도시와 인접 배후지역간의 연계를 강화한다.
- 3) 향후의 도시개발예정지역은 개발축과 교통축, 거점도시와 배후지역을 고려하여 개발규모 및 개발밀도를 설정하고, 간선교통시설 및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확충과 연계하여 ‘선계획, 후개발’ 원칙에 따라 개발을 추진한다.

3.2.3 공간구조구상과 도시성장관리를 고려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역을 설정한다.

- 1) 개발제한구역 조정은 개발제한구역 토지의 환경평가와 공간구조상의 개발축, 녹지축 여부 및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한 해당 도시의 도시발전 제약정도를 고려하여 조정한다.

- 2) 개발제한구역이 과도하게 지정되어 시대적 여건변화에 따른 적합한 도시기능 확보가 어려운 시·군은 개발제한구역 추가해제를 통해 도시내 자족기능 확보 및 공간구조 개선에 활용한다.
- 3)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역의 도시개발을 계획적으로 관리한다.

3.2.4 광역 생태녹지축을 구성하고, 녹지 및 여가공간과 연결되는 생태여가·관광벨트를 구축한다.

- 1) 수도권의 자연생태계 보전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산림 및 수계 중심으로 생태녹지축을 구성하여 도시내 녹지체계와의 연결을 도모한다. 생태녹지축은 자연지형·지세, 수계, 해안 등의 분포 위치와 녹지상태, 면적(面的) 규모 및 선적(線的) 연결성을 지니는 체계로 구성하여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도시성장의 물리적 형태를 제어한다.
- 2) 서해안 및 한강 등의 수변공간, 비무장지대의 자연생태지역, 수도권 동부의 산악지대 등을 연결하는 생태여가관광벨트를 구축하여 여가자원에 대한 수도권 주민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여가행태 다양화에 대응한다.

3.2.5 효율적이며 친환경적인 대중교통중심의 광역교통체계를 구축한다.

- 1) 교통비용 경감과 교통혼잡 감소 및 화석연료에 따른 대기오염 최소화를 위하여, 지하철, 철도, 경전철등 저공해 대중교통수단 중심의 기간교통망 체계를 구축한다.
- 2) 고속도로 등의 도로교통망 체계는 기간교통망 체계를 보완하는 형태로 구축한다.

3.2.6 광역시설 서비스를 협력적으로 공급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 1) 서비스권역을 고려하여 광역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위치에 물류·유통시설과 상·하수도, 폐기물처리등의 공급처리시설이 입지하도록 지자체간의 협력을 유도한다.
- 2) 광역시설의 효율적 설치와 안정적 관리를 위한 기구를 설치한다.

3.2.7 광역적 차원에서의 대기질·수질·생태계를 보전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 1) 대기오염저감과 하천·연안 수질보전등 시·도차원의 환경관리를 광역적 차원에서 보완한다.
- 2) 생태적으로 민감한 갯벌, 습지 등의 관리방안을 광역적 차원에서 보완하고, 훼손생태계에 대한 복원 및 정비체제를 구축한다.

3.3 계획지표

□ 인구

3.3.1 통계청 장래인구 특별추계에 따른 우리나라 전국인구 추세는 2005년 4,829만명이며 점차 증가하여 2020년 4,995만명으로, 정점에 도달한 이후 감소하여 2030년 4,932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수도권 인구는 2030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660만명에 이르고, 수도권 인구의 전국비중이 2000년 46.3%에서 2020년 52.3%, 2030년 53.9%까지 증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3.3.2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서는 2020년 수도권 인구의 전국비중을 40% 수준으로 낮추어 유지하는 것으로 정책지표를 설정하였으며, 제 2차 수도권정비계획에서도 2011년 수도권 인구의 전국비중을 45.2%로 제시한 바 있고, 제 3차 수도권정비계획에서는 2020년 수도권 인구를 전국비중 47.5% 수준인 2,375만인으로 설정하고 있다. 한편, 시·군별로 수립되어 있는 도시기본계획상의 2020년경 인구지표를 수도권 전체로 집계하면 총 3,026만인에 달하여 상위계획인 국토종합계획이나 수도권정비계획과 많은 차이가 있다.

3.3.3 인구지표는 해당 계획에서 어떠한 의미로 자리매김 되느냐에 따라 쓰임새가 다르며, 양 상위계획에서와 같이 인구지표가 앞으로 달성해야 할 정책목표 자체로 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수도권광역도시계획에서의 인구지표는 반드시 달성해야 할 정책목표 자체가 아니라 개발우선순위가 높은 지역 일원이 먼저 개발되도록 유도해 가면서 자연 추세 또는 정책적 노력의 결과로 나타나는 인구를 수용한다는 전제하에 인구성장 시나리오의 하나로 자리매김한다.

3.3.4 이와 같은 여건하에 2020년 수도권광역도시계획에서는 수도권의 목표인구를 제 3차 수도권정비계획에서 제시한 2375만명 이하가 되도록 유도하고, 관리인구로 설정된 2740만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련계획 등을 관리한다.

□ 가구수 및 주택수

3.3.5 수도권의 가구수는 현재 655만 가구(일반가구¹⁾ 기준)로 가구당 평균 가구원수가 3.26인이나 앞으로 핵가족화와 1인가구 급증으로 2020년에는 1990년대 중반의 일본 도쿄(東京) 대도시권 수준에 해당하는 가구당 2.64인까지 감소하여 총가구수는 990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

3.3.6 주택보급률 계획지표는 추정에 의한 예측지표가 아닌 목표로 활용되는 계획지표로서 현재 수도권의 여건 및 관련계획을 감안하였을 때, “주택종합계획(2013~2012)” 및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115%로 설정한다.

1) 일반가구는 혈연가구에 비혈연가구, 1인가구, 외국인가구를 포함한다.

4. 공간구조 구상

4.1 주요 정책과제

□ 서울의존형 단핵공간구조의 개편과 자족도시권 형성

4.1.1 서울집중형 단핵공간구조를 개편하여 수도권내 균형발전과 서울 주변도시들의 서울로의 통행집중을 완화하여야 한다.

4.1.2 기존의 경부축 중심의 개발을 지양하고 서·남부축, 동·북부축 등에 적절한 기능과 시설을 유치하여 다핵분산형 공간구조 실현하여야 한다.

4.1.3 서울외곽 거점도시들의 도시기능과 시설을 강화하여 지식산업의 집적을 유도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자족도시권을 형성하여 서울 의존도를 완화시켜가야 한다.

□ 환경보전과 친환경적 도시개발

4.1.4 개별 지자체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광역적 환경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4.1.5 지역이기주의에 편승하여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개발사업에 대처하여야 한다.

4.1.6 고밀도 시가지개발을 지양하고 거주환경의 질을 감안한 적정 밀도수준의 도시개발을 유도하여야 한다.

4.1.7 환경보전과 공간구조개편 전략에 바탕을 두고 개발수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 개발제한구역 등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경쟁력 강화

4.1.8 도시내의 재개발, 산업용지 구조조정, 한계토지의 효율적 활용 등을 통해 추가적인 도시용지수요에 우선적으로 대응하고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소요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4.1.9 서민주택·산업·물류용지의 공급확대를 위하여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1.10 기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복구 및 친환경적 활용방안 마련하여야 한다.

□ 남북통일과 세계화시대에 대응하는 공간구조 개편

4.1.11 남북교류협력의 증대와 통일한반도 실현에 대비하여 경의축, 경원축 등을 중심으로 교류기반을 강화하여야 한다.

4.1.12 개방국토를 전제로 동북아시아 도시성장축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강화하여야 한다.

4.1.13 수도권 전체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도시간 기능분담 및 연계를 도모하여야 한다.

4.2 공간구조개편 구상

가. 수도권 거점도시 육성

4.2.1 수도권의 주핵도시 서울은 중추관리기능을 집적시키되, 현재의 도심부, 영동, 영등포지역의 중심체계에서 서울도심, 용산, 영등포, 상암(수색), 영동, 청량리(왕십리) 등을 포함하는 다심체계로 개편유도한다.

4.2.2 서울의 서부거점지역(영등포, 상암)과 동부거점지역(영동, 청량리)을 수도권 관통의 남북방향 주축과 연결하는 주요 결절점으로 설정하고, 서울도심·거점지역·인천(국제공항)을 연결하는 지역을 국제기능축으로 설정한다.

4.2.3 인천, 수원, 고양은 서울 도심기점 30km권 외곽지역에 위치한 1차 거점도시로 육성하여 인천은 국제교역·정보도시로, 수원은 수도권 남부거점도시로서의 기능을 각각 제고한다.

4.2.4 남북축상의 40km권 외곽의 파주, 동두천, 평택을 2차 거점도시로 육성하여, 파주와 동두천은 남북협력의 거점으로, 평택은 임해물류 거점도시로서의 기능을 각각 제고한다.

4.2.5 남북방향 주축에서 벗어나는 남양주, 이천은 지역중심도시로서 전원 및 여가중심의 친환경적인 도시 및 생활권내 서비스 중심지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나. 교통축 중심의 개발축 설정

□ 주축

4.2.6 서울의 동서 거점지역을 주요 결절점으로 하여 남북 방향 2개축을 각각 설정하되, 제1축은 기존의 경의축·서해안축을 근간으로 하고, 제2축은 기존의 경원축·경부축을 근간으로 한다.

4.2.7 내륙지역과 인천(국제공항)을 연결하는 동서방향의 2개축을 각각 설정하되, 제1축은 서울의 도심·거점지역을 관통하는 경인·경춘축을 근간으로 하고, 제2축은 인천·수원·여주의 수인·영동축을 근간으로 한다.

□ 부축

4.2.8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남북축 보조기능의 순환축으로 설정한다.

4.2.9 남북방향으로 강화-평택, 철원-용인-세종(제2경부고속도로), 철원-여주(중부내륙고속도로)의 3개 보조축을 설정한다.

4.2.10 동서방향으로 강화-김포-포천축, 안중-평택-제천축의 2개 보조축을 설정한다.

4.2.11 거점도시간을 연결하는 순환축을 외곽에 추가로 설정한다.

다. 녹지축 설정

4.2.12 비무장지대, 광덕산, 북한산, 팔당지역, 관악산, 남산, 삼봉산, 서운산 일대 등 8개 지역을 녹지거점으로 확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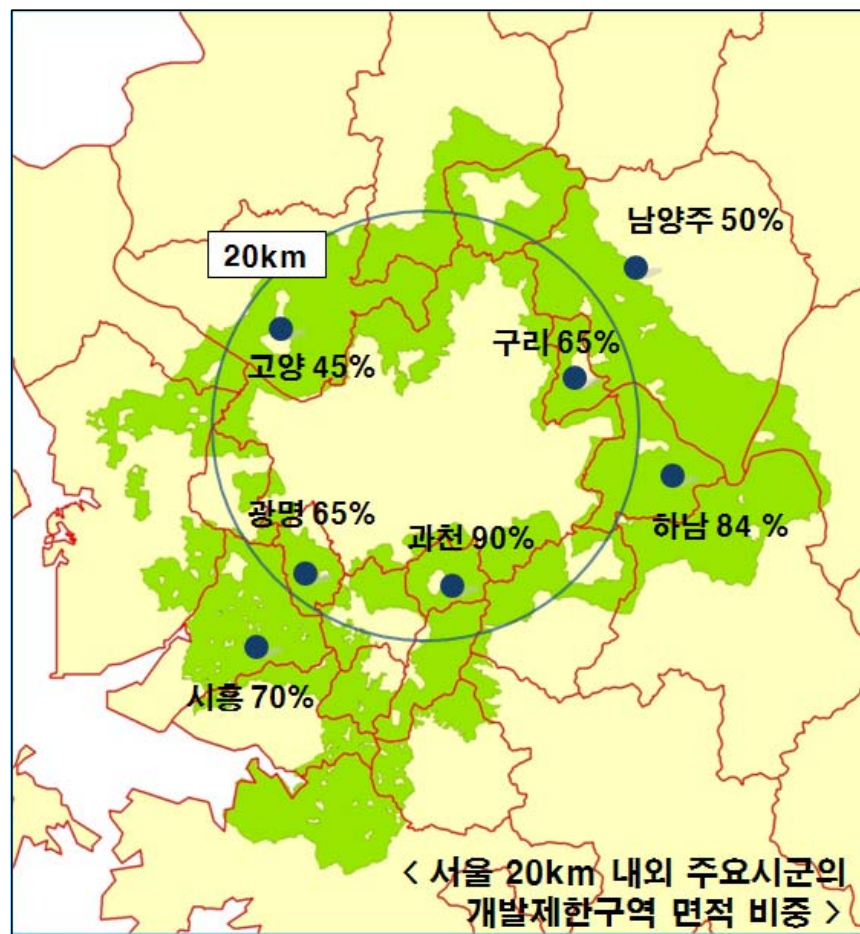
4.2.13 8개 녹지거점 사이에 중요녹지가 집중분포한 지역을 축선방향으로 연결하여 1개의 남북축(광덕산-서운산축)과 4개의 동서축(비무장지대-광덕산축, 북한산축, 관악산축, 삼봉산축) 등 5개의 주녹지축을 설정하되, 4개의 동서녹지축은 수도권 서부의 개발지역을 둘러싸면서 켜기형 및 환상형 녹지축으로 구축한다.

4.2.14 한강축과 갯벌이 발달한 서해연안축을 별도의 수역보전을 위한 녹지축으로 설정한다.

4.2.15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역 검토시 다핵화 추진과 경인축, 경수축상의 시가지 연담화 방지를 위한 녹지체계 형성을 전제로 하고, 도시 간의 연담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권역별 개발제한구역 최소 폭을 5km 이상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공간구조 보강 :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공간구조

- 개발제한구역 해제시에는 경부축 중심의 개발을 지양하고, 동·북부축, 서·남부축을 중심으로 필요한 도시기능 배치 유도
- 서울 반경 20km 내외의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도시용지로 전환 활용
- 개발제한구역이 과다하게 지정되어 자족기능확보가 어려운 시군에 한하여 우선적으로 여건변화에 맞는 도시기능 확충
 - 도시자족기능 강화, 서민주택공급, 산업·물류단지 공급, 녹지의 활용도 제고 등에 우선적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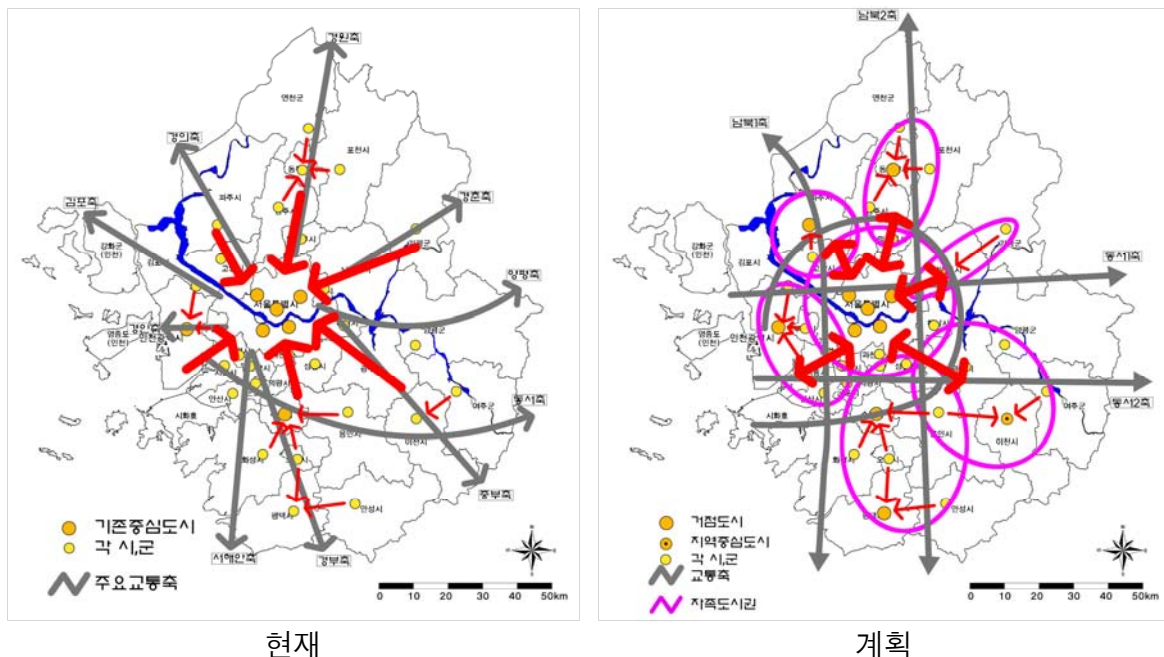
4.3 다핵화 추진전략

가. 거점도시 중심의 다핵화

4.3.1 서울로의 통행집중을 완화할 수 있는 위치(서울로부터 35km권 이상)의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인접한 도시들과 상호연계성을 높이고 산업 및 서비스기능을 보완하는 자족도시권을 형성한다.

4.3.2 수도권내 주요 산업클러스터를 기반으로 하여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지식산업집적지를 계획적으로 조성하며, 이와 상호 연계된 지식산업집적지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4.3.3 거점도시 일원의 원거리 개발을 우선 지원하되, 신규 도시개발은 중·저밀도 수준으로 환경친화적 개발을 추진하며, 도시연담화를 지양하고 도시기반시설과 연동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그림 3> 수도권내 직주근접 자족도시권 형성

4.3.4 현재의 서울지향적 방사형 교통축은 남북 및 동서축을 중심으로 한 다핵격자·순환형 광역교통망체계로 개편하고, 국가간선철도·광역철도·도시철도간 연계망 구축을 통해 대중교통이용을 활성화한다.

4.3.5 광주산맥, 차령산맥, 북한산-관악산 등과 연결되는 광역적 녹지축과 서해안 및 한강수계의 해양·하천생태 녹지체계의 보전을 반영하여 교통축 및 개발축을 형성한다.

나. 권역별 다핵화

□ 수도권 동북권역

4.3.6 2차 거점도시인 동두천시를 중심으로 동두천시에 인접한 의정부시, 양주시, 연천군, 포천시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연계보완형 자족도시권을 형성한다. 동두천시는 경원축상 북한의 동부공업지역과 연계한 남북교류거점지역으로 물류 및 조립제조업 중심 도시로 육성하고, 의정부시, 양주시, 연천군, 포천시 등 배후지역과의 연계를 강화한다.

4.3.7 남양주시를 지역의 생활 및 문화중심도시로 육성하여 동북지역에서 서울로의 집중을 완화하고, 인근지역의 구리시와 가평군을 배후도시로 하여 상호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공간구조로 유도한다.

4.3.8 서울의 동북권은 기성시가지의 대대적 정비를 통해 인접 구리시와 의정부시 등 배후 지역의 생활중심지로 육성하고, 서울 외곽 거점도시인 동두천시와 남양주시와의 연계를 강화한다.

□ 수도권 서북권역

4.3.9 거점도시 파주시를 남북교류의 거점지역으로 설정하여 환경친화적으로 육성하되, 남북교류활성에 따른 거점도시로의 인구이동 수용여건을 구비하면서 인근 고양시와의 연계를 강화한 자족도시권을 형성하여 서울 의존도를 완화한다. 파주시는 경의축상 북한의 서부공업 및 농업지역과 연계한 남북교류거점지역으로 IT 중심의 지식기반산업 및 물류산업으로 특화하고, 배후도시인 고양시와의 연계를 강화한다.

4.3.10 서울의 서북권은 상암 DMC(Digital Media City), 서울월드컵경기장, 고양 국제전시장 및 국제숙박단지 등의 건설을 계기로 인천국제공항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국제업무기능 및 첨단신산업을 유치하여, 남북통일에 대비한 상업, 업무, 문화기능 중심으로 육성한다.

4.3.11 김포시는 한강과 서해를 잇는 경인운하를 활용 서울·인천·부천·고양·파주와 연계된 물류, 문화, 관광, 레저 기능을 유치하고 산재된 공장들의 계획입지 및 영상, 항공 산업 성장을 유도하되 하천, 수변공간 등의 자연환경을 고려 친환경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한다.

4.3.12 다핵화전략으로 서울특별시내의 균형발전 및 다심체계를 유도할 뿐만 아니라, 고양시와 파주시의 자족여건을 보완하여 서울로의 과도한 통근량을 완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성장을 유도한다.

□ 수도권 서남권역

4.3.13 1차 거점도시 인천광역시를 국제교류관문으로 설정하여 서울과 연결하는 국제교류 중심축으로 육성하되, 인근지역의 안양·광명·김포·부천·시흥·안산시의 산업지역과 연계를 강화하여 서울 서남권에 집중된 통행을 분산하고 수도권의 지식산업벨트를 형성한다.

- 1) 인천경제자유구역(영종지구, 송도지구, 청라지구)의 성공적 조성을 통하여,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을 위한 국제물류, 수송, 정보, 금융 및 첨단기술 수용의 거점역할을 부여한다.
- 2) 대부도, 시화간척지 등의 서해연안지역과 용유·무의지구 및 강화군내 해양, 역사, 문화, 전적유적 등을 연계하여 국제적인 입해관광·레저단지로 조성한다.

4.3.14 서울의 서남권은 여의도의 업무지역, 영등포일대의 도시형 산업기반 및 유통물류기반을 강화하고, 대규모 이전적지의 주거용도로의 전환을 제어하여 주공혼재에 따른 외부효과를 줄이며 도시형 산업기반을 활성화한다.

- 1) 구로구, 금천구, 강서구의 준공업지역은 주변의 수도권 서남부 공업벨트지역과 연계한 첨단 도시형 제조업 및 연구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비한다.
- 2) 마곡등 대규모 미개발지역은 개별 필지별 개발방식은 지양하고 중장기발전전략하에 단계적인 개발을 유도한다.

4.3.15 서울 인접도시들의 산업지역은 각 도시들의 특화산업을 바탕으로 지식산업벨트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서울과 역할분담을 통하여 경인축의 기능분담체계 및 산업연계를 강화한다.

4.3.16 시흥시를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지역중심도시로 육성하고, 인근의 인천광역시, 안산시 및 화성시와 상호연계하여 경기만 환황해권 친환경 해양녹색성장 거점으로 육성한다.

4.3.17 경기만지역의 해양환경 및 갯벌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서해연안축을 설정하여 계획적으로 관리한다.

□ 수도권 동남권역

4.3.18 교통결절지인 이천시를 지역중심도시로 육성하여 인접한 용인시, 광주시, 양평군, 여주군과 상호연계된 자족도시권 형성을 유도한다.

- 1) 현재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비금속제품 제조업 및 1차산업으로 특화된 이천시의 첨단정보통신사업 및 관련 연구기능을 육성하고, 이천시, 여주군, 광주시를 연계하는 도예관광벨트 조성을 통해 도자기산업을 집중·육성한다.

2) 인천시를 여주군, 광주시, 안성시의 배후지역 중심도시로 발전시키고 용인시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서울 동남권으로의 통행집중을 분산하며, 철도중심의 대중교통수단을 확충하여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한다.

4.3.19 서울과 연접한 도시인 과천시, 성남시, 하남시는 필요시 개발사업은 추진하되 서울로의 연담화를 제어할 수 있는 켜기형 녹지축을 구축하고 도시기반시설과 연동하여 단계별로 추진한다.

4.3.20 성남 분당과 용인 서북부를 따라 남진하고 있는 도시연담화를 차단하고, 이 지역에 대한 광역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예견되는 추가적인 도시개발에 대하여 계획적으로 대처한다.

4.3.21 서울의 동남권은 부도심으로서 기능을 강화하며, 첨단업무지역 및 벤처산업집적 지역으로서 특성을 유지, 강화하고, 성남 판교 등과 연계하여 국제경쟁력을 갖도록 육성한다.

□ 수도권 남부권역

4.3.22 1차 거점도시 수원과 2차 거점도시 평택을 중심으로 인근의 용인시, 화성시, 오산시, 안성시, 성남시, 의왕시와 도시기능을 상호분담·보완하여 수도권 남부지역의 자족도시권 형성을 유도한다.

4.3.23 수원시는 교육·행정분야, 전자계열산업 관련업무 및 상업·유통기능을 강화하여 경기 남부지역 지식기반산업벨트의 중심도시로 육성하고 인접지역의 활동거점으로 발전시켜 서울로 유입되는 통행을 분산한다.

4.3.24 평택시는 평택항 및 아산만 공업단지와 연계된 제조업, 상업, 업무, 유통기능을 육성, 강화하고 연접한 오산시, 용인시, 화성시, 안성시 등의 배후 생활중심지로 발전하도록 유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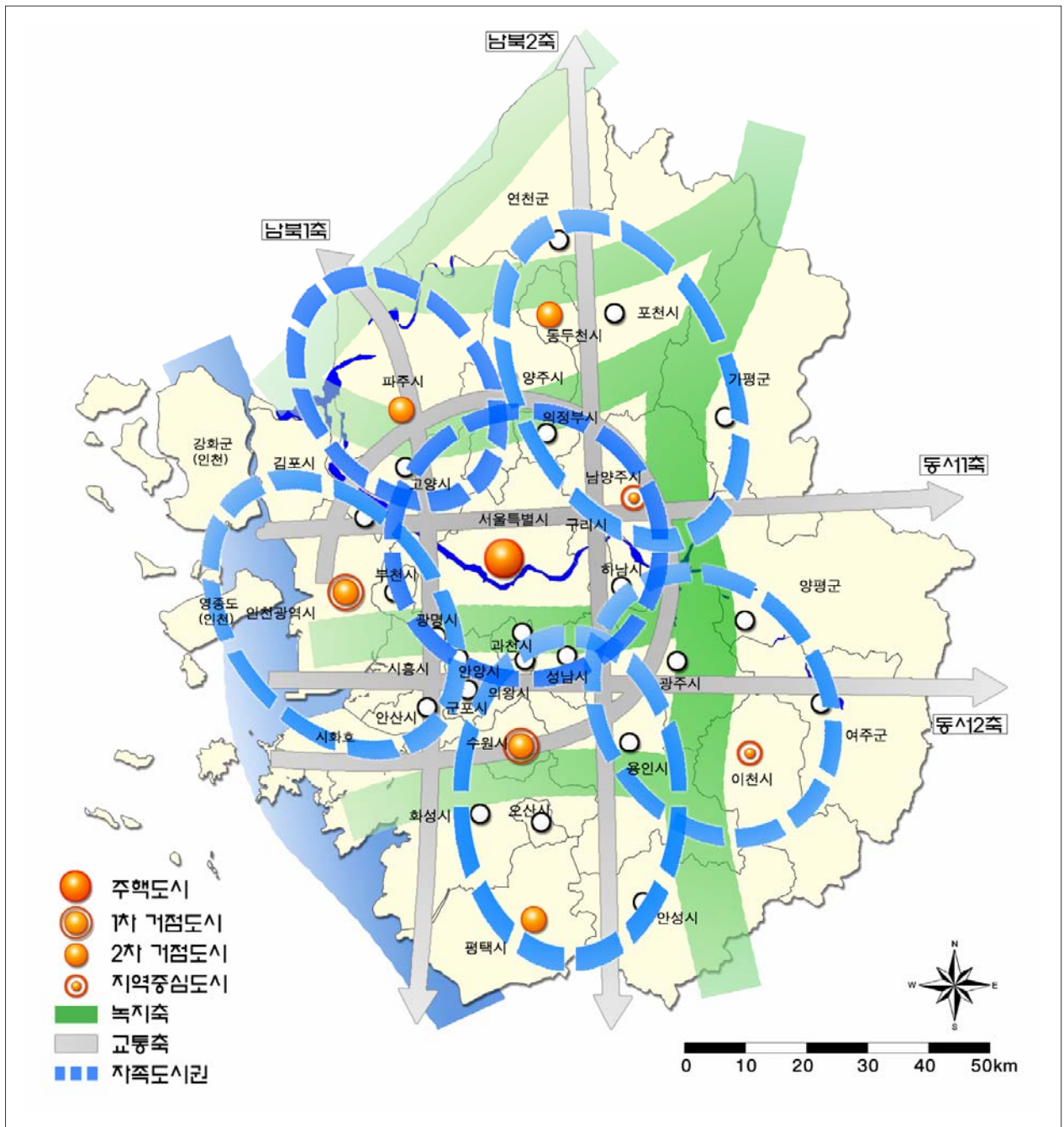
4.3.25 평택항을 인천항과 함께 서해안의 대중국 교두보의 하나로서 육성하기 위해 컨테이너 처리시설 등 물류유통기능을 확충하고, 향후 조성될 서남선 철도와 연계하여 배후도시를 계획적으로 개발한다.

□ 중추관리권역

4.3.26 서울 사대문안 도심부가 경제적인 활력을 유지하면서도 수도권 및 국가의 얼굴로서 도심특유의 역사·문화적 매력을 유지해가도록 도시정비를 추진한다.

1) 지식기반형 전략산업 유치를 통해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며, 도심 정주민구의 정착유도로 공동화없는 도심 커뮤니티를 육성한다.

- 2) 600년 고도로서 도시경관을 살리는 스카이라인을 형성하고, 도심부의 풍부한 역사 문화환경을 적극 활용하여 도심정체성을 강화한다.
- 3) 인사동, 가회동 등 도심특성을 살리는 지역의 보전 및 수복형 재개발사업을 유도한다.



<그림 4> 수도권 공간구조 골격구상도

5. 부문별 계획

5.1 광역토지이용

가. 현황 및 문제점

□ 광역적 차원의 도시성장관리 미흡

5.1.1 서울로 출퇴근 인구의 주택공급을 위한 택지개발이 1990년대 초반 이후 서울 반경 35km권으로 확대되는 한편, 기존의 개발축인 경인축과 경수축에 개발이 가중되고 경부축 간선도로를 따라서는 45km권까지 택지개발이 확산되고 있다.

5.1.2 1993년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에 의한 준도시·준농림지역의 규제완화로 도시지역 밖에서 소규모 주택지개발, 공장·축사·창고등이 난립함으로써 광역교통시설 부족과 도시공간구조 왜곡을 초래하였다.

5.1.3 광역적 차원의 토지이용관리 정책이 부재한 가운데 수도권정비계획에 의한 권역별 특정용도의 입지규제 및 개별 사업법에 따른 토지이용규제 등 미시적 차원의 토지이용관리로 지역특성을 살리지 못한 특정축 중심의 불균형개발이 심화되어 왔다.

□ 시가화지역의 과밀개발

5.1.4 시가지가 지나치게 고밀도로 개발되어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에 한계가 있다. 시가화지역을 도시지역내 주거·상업·공업의 용도지역으로 보면, 2000년 현재 서울특별시 시가화지역의 인구밀도는 294인/ha에 달하며, 서울특별시 주변의 하남시, 광명시, 구리시, 성남시, 고양시, 의정부시 등의 시가화지역은 서울특별시보다 더 고밀이며, 부천시, 안양시, 군포시, 과천시 등도 250인/ha 이상에 달한다.

5.1.5 1990년 이후 2000년 현재까지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 주변을 포함하는 중부지역의 시가화지역 인구밀도는 303인/ha를 유지하여 남부, 북부, 동부, 서부지역의 약 1.2배에서 2.7배에 이르고 있으며, 남부지역도 점차 고밀화되는 추세에 있다.

5.1.6 기성시가지 내부는 도로, 주차장, 공원녹지 등 도시기반시설이 미비된 가운데 단독주택이 다세대·다가구 주택으로 개축되거나 고밀도 아파트로 재건축됨으로써 기존 시가지내 주거환경 악화가 심화되고 있다.

□ 자연환경 훼손 및 관리지역 난개발

5.1.7 수도권 지역의 녹지자연도는 대부분 2등급이며(41.70%), 평균 녹지자연도는 4.33등급으로 전국 평균 녹지자연도 5.1보다 낮으며, 양호한 식생상태로 분류되는 녹지자연도 8등급이상 지역의 비율이 약 11.62%로 그나마 대부분이 수도권 동북부에 편중되어 있다.

5.1.8 인천광역시, 김포시, 안산시, 시흥시, 부천시, 광명시 등의 수도권 서부지역은 8등급 산림이 거의 없이 개발되었으며, 최고등급으로 7등급 녹지가 점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5.1.9 1990년대초 준농림지역(현재의 관리지역) 규제완화로 도시지역 외곽에 위치한 용인시, 광주시, 남양주시, 양주시, 고양시, 김포시, 화성시 등의 준농림지역에 아파트가 산발적으로 개발되고 공장이 무질서하게 입지하면서 공간구조 왜곡과 더불어 광역교통 시설에 대한 교통혼잡이 심화되었고, 도시지역 외곽 국도변에 음식점, 모텔 등이 난립하여 자연경관을 크게 훼손하였다.

나. 핵심과제

(토지-T1) 공간구조개편에 부응하는 지역별 도시성장관리의 강화

(토지-T2) 자연환경보전 우선의 계획적 토지이용관리체계의 구축

(토지-T3) 지역특성별 도시개발 및 정비 추진

다. 전략 및 실천계획

□ (토지-T1-S1) 중부지역 등 5개 지역 구분을 통해 토지이용 및 정비방향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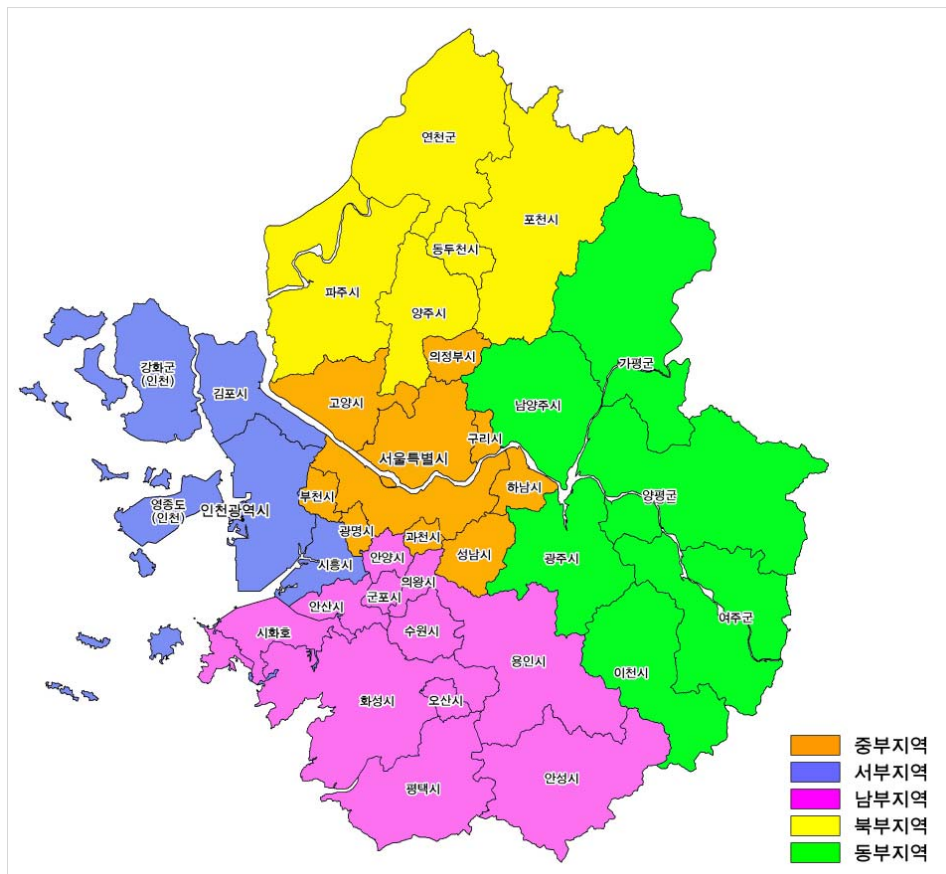
5.1.10 서울과의 연결성, 거점도시 분포, 자연지형 및 토지이용특성에 의하여 <표 2> 및 <그림 5>와 같이 수도권 전역을 중부지역, 북부지역, 남부지역, 동부지역, 서부지역의 5개지역으로 구분하여 각 지역별 토지이용 및 정비방향을 정한다.

5.1.11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할 의무가 있는 시장·군수는 본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취지, 공간구조 개편구상, 지역별 개발 및 정비전략, 토지용지별 개발 및 보전지침 등에 따라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한다.

5.1.12 경기도는 인접 광역자치체인 서울시 및 인천시와 협의하에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서 제시하는 4개 지역별 개발 및 정비전략을 보다 구체화하는 지역별 계획관리지침(중추관리지역 제외)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각 시군별 도시기본계획 수립·심의 시 도시화예정용지의 개발을 조정하도록 한다..

<표 2> 수도권내 5개 지역 구분

구 분	시 · 군	거점도시
중부지역	서울, 고양, 의정부, 구리, 하남, 성남, 부천, 광명, 과천	주핵도시(서울)
서부지역	인천, 김포, 시흥	1차거점도시(인천)
남부지역	수원, 안양, 의왕, 군포, 안산, 용인, 오산, 화성, 평택, 안성	1차거점도시(수원) 2차거점도시(평택)
북부지역	파주, 연천, 동두천, 양주, 포천	2차거점도시(파주, 동두천)
동부지역	가평, 남양주, 양평, 광주, 이천, 여주	3차거점도시(남양주, 이천)



<그림 5> 수도권 5개 지역 구분도

□ (토지-T1-S2) 중부지역은 현재 인구규모 수준에서 도시성장관리

5.1.13 중부지역은 현재 과밀한 상황이며 또한 인구감소세를 보이므로 중부지역의 2020년 인구규모는 2000년 현재의 1,337만인 이하로 유지하도록 한다.

5.1.14 중부지역의 도시용지 인구밀도는 250인/ha 수준 이하로 유도하여 과밀에 따른 혼잡과 도시기반시설 과부하를 개선해간다.

□ (토지-T1-S3) 서부·남부·북부·동부지역도 차별화된 개발밀도로 성장관리

5.1.15 4개 지역의 도시성장은 2020년 수도권 관리인구 2,740만인 중 2000년 현재 중부지역 인구(1,337만인)를 제외한 1,403만인을 전망기준으로 하여 현재 인구비중과 추세인구(시군단위의 도시기본계획·장기발전계획에서의 검토인구) 및 개발축을 고려하여 관리한다.

5.1.16 4개 지역은 보다 쾌적한 밀도 수준하의 도시성장으로 관리해가기 위하여 서부지역·남부지역·북부지역은 150인/ha 내외로, 동부지역은 100인/ha 내외의 개발밀도로 시가지 개발 및 정비를 추진한다.

□ (토지-T2-S1) 보전용지를 우선적으로 설정하여 도시성장을 관리

5.1.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생산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생산녹지지역·보전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상의 개발제한구역, 도시공원법상의 도시자연공원, 기타 농업진흥지역, 농업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자연공원으로 지정된 토지는 원칙적으로 보전용지로 설정한다.

5.1.18 자연녹지지역이나 관리지역 중에서 하천 및 습지, 임상도 3영급 이상, 녹지자연도 8등급 이상, 경사도 25% 이상 등 자연환경적 기준에 의해 보전가치가 높은 토지는 보전용지로 설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상업·공업용지와 시가화에 정용지는 보전용지에서 제외한다.

5.1.19 보전용지는 광역도시계획 목표년도(2020년)까지 보전중심으로 관리해간다

□ (토지-T2-S2) 보전용지 이외의 토지이용 구분

5.1.20 보전용지 이외의 토지는 기지정된 용도지역을 중심으로 <표 3>과 같이 도시용지, 도시화예정용지, 기타용지로 구분하여 토지이용을 관리해간다.

<표 3> 보전용지 이외의 토지이용 구분

토지이용범주	해당 용도지역 등
도시용지	용도지역상 주거·상업·공업지역
도시화예정용지	장래 도시용지로 이용할 지역, 개발제한구역 중 해제대상지역
기타용지	자연녹지지역 및 관리지역 등으로서 계획적 관리가 필요하거나 토지특성에 따라 보전용도로 이용될 지역

□ (토지-T2-S3) 도시용지의 통합관리 및 효율적 이용

5.1.21 도시용지는 2003년 말 현재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900km² (수도권 면적의 7.7%)와 기존 도시화예정용지 650km² 및 추가해제되는 개발제한구역 등을 향후 20년간 도시용지로 관리해 간다.

5.1.22 1인당 주택연상면적은 현재의 평균 20m²수준에서 33m²(10평)로 제고하고, 도시용지내 인구밀도는 현재(240인/ha)에서 170인/ha내외로 저밀화를 유도한다.

5.1.23 기개발지의 개발밀도를 저감시키면서 신·구시가지간 도시기반시설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저이용지를 개발·정비하여 시가지이용 효율화를 유도한다.

5.1.24 기존 시가지내 공공시설 확충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역으로 이전가능한 시설을 선별하여 이전하고, 이전적지에 공공시설 설치를 도모한다.

5.1.25 준공업지역내 도시형산업을 보호하고 공장 이전적지에 대한 고밀도 아파트 단지개발을 제어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토지이용관리를 강화한다.

5.1.26 전략적 불가피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도시용지내 미개발지는 도시화예정용지보다 우선하여 개발한다.

5.1.27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역은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서민주택공급,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물류용지 공급, 기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생활 편의성 제고 등에 우선적으로 활용한다.

□ (토지-T2-S4) 도시화예정용지의 단계적 개발체계 확립

5.1.28 도시화예정용지는 장래 주로 도시용지로 이용할 지역으로 도시기본계획에서 주거·상업·공업용지로 설정되어 있으나 아직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 기수립된 도시기본계획상의 시가화예정용지,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통해 활용할 가능성이 있는 토지,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관련된 개발계획 대상지로 설정한다.

5.1.29 현재 수립중이거나 수립예정의 도시기본계획에서의 도시용지 예정지는 본 계획에 부합하는 경우 도시화예정용지(신규시가화용지 및 시가화예정용지)로 포함할 수 있다.

5.1.30 공간구조상 개발축에 위치한 대규모의 도시화예정용지는 기반시설설치계획을 포함한 중장기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도시용지로 활용하고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설정하여 운용한다.

5.1.31 거점도시의 도시화예정용지를 우선적으로 개발하되, 거점도시 중심부는 150~200인/ha, 거점도시 외곽부는 100~150인/ha, 교외지역은 50~100인/ha로 개발밀도를 차등화하여 장래 개발수요의 입지를 유도하고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개발을 유도한다.

5.1.32 공간구조상 개발축에 위치하면서 철도 등의 대중교통 결절점에 위치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개발하고, 부차적으로 고속도로 결절점상의 도시화예정용지를 개발한다.

5.1.33 철도역세권을 우선적으로 개발하되, 동부, 북부지역은 서울반경 20km 외곽, 서부·남부지역은 서울 반경 30km 외곽의 주요 대중교통결절점이 있는 역세권이 우선적으로 개발되도록 유도한다.

5.1.34 거점도시 이외 지역의 도시화예정용지는 150인/ha이하의 시가화지역 밀도로 토지이용을 관리하나, 대중교통결절점이나 철도역세권에서의 개발밀도는 150~200인/ha로 상향조정하여 개발집중을 유도한다.

5.1.35 거점도시 및 그 주변의 대규모 군사시설 반환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역은 고용기능 유치를 중심으로 하는 개발을 추진하여 자족도시권 형성을 도모한다.

5.1.36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역의 개발시기는 광역지자체에서 조정하고 임대주택단지를 건설할 경우에는 입주계층의 통근통행권별 수요 특성을 반영하여 개발한다.

5.1.37 도시화용지에서의 대단위 개발은 본 계획이 제시하는 광역녹지축과 조화·연계되는 도시녹지체계 구상 하에, 그 개발부지 외부에서의 연접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녹지대를 확보하여야 한다.

□ (토지-T2-S5) 기타용지의 지정을 통한 토지관리의 유연성 제고

5.1.38 보전용지, 도시용지, 도시화예정용지 이외의 토지는 단기적인 개발수요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유보적 성격인 기타용지로 설정하여 자연환경보전을 우선으로 관리하되, 토지특성에 따라 환경기준에 부합한 토지의 경우 도시화예정용지를 대체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한다.

5.1.39 향후 도시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광역도시계획의 공간구조개편에 부합하는 개발구상으로 도시화예정용지 총량을 유지하는 경우 기타용지의 도시화예정용지로의 전환을 허용한다.

5.1.40 해당 시·군별 도시화예정용지에 여유가 있음에도 기타용지를 우선적으로 도시용지로 전환할 경우, 해당 양만큼 도시화예정용지에서 도시용지로의 전환 규모를 축소하도록 하고 광역도시계획의 취지와 광역지자체의 성장관리지침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발을 유도한다.

□ (토지-T3-S1) 중부지역의 개발 및 정비전략

5.1.41 서울은 기성시가지의 혼잡을 완화하여 수도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과밀완화를 전제로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여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과부하를 방지하며, 녹지축과 연계된 도시내 녹지체계를 구축한다.

5.1.42 서울은 한강수변 및 북한산-남산-관악산으로 이어지는 주녹지축을 보전하며, 주요 녹지축과 개발제한구역을 도시내 주요 녹지(공원, 구릉, 하천 등)와 연계시킨다.

5.1.43 중부지역내 도시들은 시가지내부에 주녹지축과 보조녹지축에 연계되는 녹지체계를 구축하여 도시환경의 쾌적성을 도모한다.

5.1.44 개발제한구역 중 훼손정도가 심각하고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별하여 서민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거용지 및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물류용지 등으로 활용하되, 개발시 녹지축 보전을 중시한다.

5.1.45 과천은 수도권 중부지역의 여가·레저·쇼핑·첨단 R&D·문화기능 보완토록 하고, 저탄소 녹색주거단지로 계획하여 관악산과 청계산의 녹지축 보전을 우선한다.

5.1.46 하남은 무계획적이고 개별 입지된 시설물로 인해 난개발 되고 훼손된 지역을 활용하여 서울의 물류기능이 계획적으로 흡수될 수 있도록 상업형 물류유통 거점기능을 강화하되, 녹지축의 체계적인 정비 및 한강 수변공간을 계획적으로 정비한다.

5.1.47 부천·광명은 뉴타운 사업과 연계하여 인접지역의 순환재개발을 유도한다.

□ (토지-T3-S2) 서부지역의 개발 및 정비전략

5.1.48 김포·강화 연안생태계에서 시흥북부와 광명서부로 연결되는 서부지역 주요 녹지축의 보전을 위하여, 인천 내륙지역을 관통하는 녹지를 보전형 녹지축으로 설정하여 관리한다.

5.1.49 경인운하 주변지역은 화물·여객터미널 및 배후연계 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토지이용을 계획하되 수변공간의 생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되도록 한다.

5.1.50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시키기 위해 인천 구도심과 항만일대, 경인고속도로와 경인전철 연변 등의 기성시가지는 주요 녹지축과 연계되는 도시내 녹지체계를 구축하면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계획적으로 정비한다.

5.1.51 송도지구, 영종지구, 청라지구 등의 인천경제자유구역은 국가정책차원의 개발계획을 통하여 충분한 기반시설을 확보한다.

5.1.52 인천과 김포 및 시흥의 연담화 방지를 위해 매립지의 농업적 토지이용을 보호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역인 시흥 폐염전의 개발계획수립시에 서해연안 시화 폐염전과 시흥 기성시가지 남부, 그리고 중부지역 광명서부로 이어지는 광활한 녹지체계의 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5.1.53 시흥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농업적 토지이용과 산재된 도시지역의 도시적 토지이용간의 조화를 도모하고, 개발제한구역내 농업경영환경을 훼손하는 도시적 토지이용을 차단한다.

5.1.54 이 지역의 개발제한구역내 무계획적으로 입지된 물류창고, 소규모 제조형 공장 등을 계획적 입지로 유도하여 개발제한구역내 농업경영환경을 훼손하는 도시적 토지이용을 차단하고, 서남부지역의 공업형 물류·유통 거점지역으로 계획하여 인근 지역의 안산, 서울 구로, 수원, 인천의 산업배후지원 기능을 강화하되 토취장, 폐기물 재활용 공간 등으로 훼손된 지역은 체계적으로 정비한다.

5.1.55 개발제한구역내 축사의 창고용도 활용 등 부적격한 토지이용은 대부분 산업 및 물류용지 공급의 부족에 따른 것이므로 계획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있으며,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역의 활용은 이를 계획적으로 수용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 (토지-T3-S3) 남부지역의 개발 및 정비전략

5.1.56 도시기본계획상 충분한 개발예정용지(시가화예정용지)가 설정되어 있고 개발제한구역 조정면적이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녹지축상에 설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관리지역에 대한 개발을 최대한 억제한다.

5.1.57 도시내 대규모 미개발지를 보유한 수원은 동남방면(수원 영통과 화성 동탄)으로 전개되는 주거위주의 택지개발을 가급적 억제하고 기성시가지 정비를 통해 행정, 금융, 연구개발 등의 고차서비스기능을 강화한다.

5.1.58 거점도시 평택과 화성 및 안성은 평택호, 남양호, 화옹호의 수질과 연동하여 면밀한 성장관리를 하며, 연안 생태계로부터 내륙 농경지로 이어지는 생태축을 보전하면서 평택항 및 자유무역지역을 개발한다.

5.1.59 수원동부와 용인서부의 연담화를 더 이상 진전시키지 않도록 하고, 수원동남부

와 화성동북부를 지나는 주녹지축에 대한 계획적 관리를 통해 성남분당으로부터 오산동부에 이르는 연담화 추세를 차단한다.

5.1.60 화성은 서해안고속도로축을 따라 평택서부 안중과의 연담화가 우려되므로 도시개발규모의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에서 계획하되, 관리지역내 개별입지 공장의 집단화 계획을 포함하여 원격개발을 방지한다.

5.1.61 안양, 군포, 의왕은 신구시가지의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기성시가지를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주녹지축 및 보조녹지축과 연결되는 도시내 녹지체계를 형성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 (토지-T3-S4) 북부지역의 개발 및 정비전략

5.1.62 파주의 거점도시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파주 교하, 운정 택지개발사업을 저밀 친환경적으로 검토하고, 금촌-문산으로 이어지는 경의축에 개발을 집중한다.

5.1.63 동두천은 지형적 특성과 주한미군 주둔으로 거점도시로서 개발을 추진하기에는 개발규모의 경제성 확보가 어려우므로, 주요 교통축이 교차하는 양주북부의 회천과 연담 개발하여 남북교류에 따른 물류거점기능을 제고한다.

5.1.64 양주남부의 3호선 국도우회도로를 따라 전개될 우려가 있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은 통제하도록 하며, 양주의 회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주거위주의 고밀 택지개발도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제어한다.

5.1.65 안보관광자원과 환경생태자원이 풍부한 연천, 포천 등은 경원선을 중심으로 산재된 개발을 집중하여 관광자원을 유효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신천-포천천-영평천의 수질을 감안하여 소규모 무등록공장의 집단화를 추진한다.

□ (토지-T3-S5) 동부지역의 개발 및 정비전략

5.1.66 목표년도의 토지수요를 감안할 때, 개발예정용지가 부족할 수도 있는 지역이므로 기존 도시의 확장이나 주요 교통결절지를 중심으로 도시화예정용지를 일부 추가 확보할 가능성을 부여하나 환경에 대한 개발의 영향은 최소화하도록 한다.

5.1.67 삶의 질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수도권 도시교외화 현상을 반영하여 동부지역은 예술과 문화, 전문지식인의 주거 및 휴양지로서 그리고 수도권 시민의 여가지로서의 기능을 보다 강화한다.

5.1.68 지역조건을 감안하여 대규모의 거점도시 개발보다는 중규모 클러스터(cluster)형 개발로 네트워크 형성과 저토지 소비형 개발방식을 적용한다.

5.1.69 남양주는 서울에 인접한 지역거점도시로 개발하되, 현재 추진되고 있는 택지개발지구와 도시여건이 열악한 기존 시가지의 계획적인 정비가 연계될 수 있도록 하며,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역은 기반시설, 자연환경, 경관 등을 고려하여 저밀도 친환경적으로 개발한다.

5.1.70 하남·광주·이천지역은 개별적으로 입지해 있는 물류창고, 소규모 공장 등의 계획적 입지를 유도하여 물류·유통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비한다.

5.2 녹지, 경관 및 여가

가. 녹지관리

1) 현황 및 문제점

□ 주택, 위락시설 등 도시개발로 인한 산림면적의 감소

5.2.1 2000년 현재 수도권 산림면적은 5,806km²로 1980년 6,271km² 보다 성남시 면적의 3배에 해당하는 465km²가 감소하였다. 산림면적의 감소와 함께 인구증가로 인해 수도권 주민 한사람이 향유할 수 있는 산림면적은 1980년에 436m²에서 2000년에 261m²로 감소하고, 특히, 경기도 주민 1인당 산림면적은 같은 기간 1,230m²에서 570m²로 감소하였다.

5.2.2 훼손되는 산림 중에서 골프장, 콘도미니엄, 스키장 등 위락시설 개발로 인한 면적이 상당하며, 골프장의 경우 2000년 현재 전국 87개소 중 46.0%에 해당하는 40개소(44.69km²)가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다.

5.2.3 고속도로·국도 등 간선도로망에 의한 녹지축 단절과 파편화된 고립 녹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야생생물종의 이동방해 및 종감소가 초래되고 있다.

□ 낮은 녹지자연도 및 녹지의 단절로 인한 녹지의 생태적 기능 약화

5.2.4 양호한 식생상태로 분류되는 녹지자연도 8등급이상 지역의 비율은 약 10.7%이나 서울, 인천에는 남아 있지 않고, 8등급이상 자연림의 경우 가평, 포천, 동두천, 의정부, 남양주, 양평, 광주 등 수도권 동북부에 치우쳐 있으나, 최근 개발압력이 높아지면 서 산림잠식으로 인해 등급악화가 우려된다.

5.2.5 택지개발 및 도로 등의 건설로 인한 녹지축 단절과 녹지축 선상 방향(녹지축의 끝부분부터 산록부위로 개발이 이루어짐)으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 생태계 서식처가 훼손되거나 단절되고, 급경사면이 발생하여 재해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5.2.6 수도권 서부 및 남부지역은 택지·도로·공단·항만 등의 개발로 인하여 녹지가 많이 사라졌으며, 잔존녹지 또한 점·선적 형태로 존재하여 복원과 보전이 시급한 실정이다.

□ 산림분포의 불균형으로 인한 대기정화 효과의 미약

5.2.7 산림이 경기도는 동부지역, 서울특별시는 남부와 북부, 인천은 강화와 옹진군에 치우쳐 있어, 도시민들에게 산림의 기능과 효과를 골고루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5.2.8 서울과 인천지역 산림의 정화효과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20-30% 수준에 불과하나, 경기도 산림의 정화효과는 90%이상으로 높아 수도권 대기오염정화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산림이 주로 경기도 북동부에 집중적으로 분포하여 서부지역 도시에서의 대기정화효과는 미약하다.

□ 공원·녹지 부족 및 접근성 악화

5.2.9 도시민 1인당 도시공원면적은 8.24㎡(1990년)에서 9.42㎡(2000년)로 증가하여 도시공원법상의 1인당공원면적 기준인 6㎡/인(도시계획구역내)을 상회하였다. 그러나 도시자연공원·묘지공원을 제외하고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공원·근린공원의 면적은 2000년 3.78㎡에 불과하다.

5.2.10 공원용지의 상당부분이 구릉지 입지, 재원부족 등의 이유로 장기미집행 상태이며 공원간 연계성도 부족하다.

5.2.11 근린공원은 접근성이 불량하거나 녹지가 희박한 인공시설 위주이고 그나마 공원 고유의 특성이 없이 획일적이거나 노후화되어 있다.

2) 핵심과제

(녹지-T1) 광역녹지축의 설정과 녹지의 연계성 강화

(녹지-T2) 도시내 녹지창출과 광역녹지축과의 연계

(녹지-T3) 도시녹지관리체계 구축

3) 전략 및 실천계획

□ (녹지-T1-S1) 주녹지축과 도시내부 녹지를 연결하는 부녹지축의 설정

5.2.12 주녹지축과 연계되면서 지역별로 분포된 중요녹지와 확대녹지를 연결하는 11개 부녹지축을 통하여 도시 내부 녹지체계를 형성하는 골격을 설정한다.

5.2.13 서울, 인천, 안양, 수원 등 수도권 서부지역에서는 도심지 외곽부 녹지를 주녹지축과 연계하면서 필요시 일부 시가지로 축선이 통과하는 부녹지축을 형성할 수 있도록 녹지를 추가적으로 확보하여 보전한다.

5.2.14 녹지축과 녹지축사이의 농지도 생태서식처로 통합하여 관리한다.

□ (녹지-T1-S2) 광역녹지축의 적극적인 연결과 관리

5.2.15 도시화에정용지를 도시용지로 전환하여 개발하거나 광역교통시설을 설치할 경우 광역녹지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녹지축이 단절되지 않도록 토지이용계획 및 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한다.

5.2.16 5개 주녹지축과 11개 부녹지축이 지나가는 축선 방향에 도시개발 등으로 녹지축이 단절되었거나 단절될 위험에 처한 39개소에 녹지창출지점을 설정하여 신규 녹지를 창출하거나 녹지를 복원하여 녹지의 생태적 기능을 발휘하도록 한다.

5.2.17 골프장, 관광위락시설, 택지개발 및 도로개설시 절개면 발생을 엄격히 통제하고, 녹지축 보전을 위해 도로·철도 건설시 터널공법 등 환경친화적 기법의 활용을 장려한다.

□ (녹지-T2-S1) 기존 산림과 공원녹지의 연결 강화

5.2.18 각종 개발계획 수립시 도시외곽 산림 및 이와 연결된 구릉지 산림과 시가지내 잔존산림을 연결하는 지점에 공원 및 비오톱 조성을 위한 보전용지를 설정하여 녹지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한다.

5.2.19 중앙공원 등 주요 공원의 녹지량을 확충하여 녹지거점화를 도모하고 외곽 녹지축과의 연계를 강화한다.

□ (녹지-T2-S2) 도시내 녹지량 확충과 공원 조성 확대

5.2.20 시·군별로 도시녹화량 배증(倍增) 사업을 추진한다.

5.2.21 시가지내 비오톱을 조성하고 잔존 습지를 보전하며 창출한다.

5.2.22 녹지축과 연계된 도시하천의 복개를 금지하고 복개된 하천은 복원을 추진한다.

□ (녹지-T3-S1)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의 의무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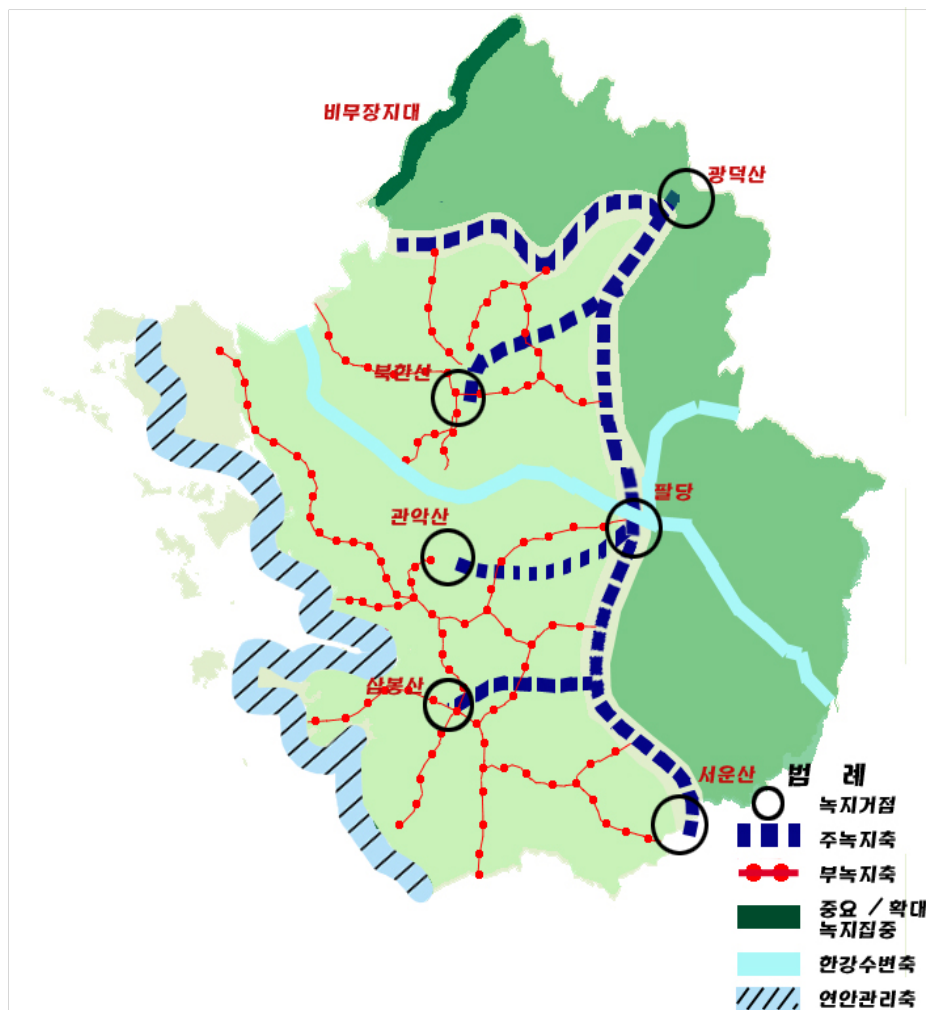
5.2.23 관련법 개정과 조례 제정을 통해 장기적인 공원-녹지 조성목표를 제시하는 공원 녹지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여 녹지 네트워크의 형성과 계획적인 공원녹지 조성을 추진 한다.

5.2.24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녹지축 보전과 생태계 서식처의 기능보강을 위한 도시생태계조사 및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 (녹지-T3-S2) 녹지보전 및 확충을 위한 기준강화

5.2.25 장기미집행 공원의 조속한 조성과 소공원의 조성 확대를 통해 시민 1인당 공원 조성면적을 12㎡로 각각 확대한다.

5.2.26 도시내 녹지보전과 지속적인 관리, 녹화량 확충등을 위한 조례제정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그림 6> 광역녹지축 설정

나. 경관관리

1) 현황 및 문제점

□ 동고서저와 동산서야의 지형지세

5.2.27 수도권은 동고서저의 자연지형을 토대로 임진강을 수계로 한 파주들판, 강원도에 인접한 내륙의 산악지대, 한강수계를 포함하는 경기남부의 비옥한 평야, 해안선 변화가 많고 풍부한 갯벌과 섬들로 구성된 서해안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지니고 있다.

5.2.28 동부로부터 뻗은 산맥이 서해연안에서는 완만한 구릉지나 저지로 이어지며, 표고 100m 이하 평지가 1/2정도를 차지한다. 평지의 반 이상은 경작지와 초지로 이용되고, 나머지의 절반 정도가 수역이거나 주거지등 시가지로 되어 있다.

□ 자연경관·농촌경관의 감소와 도시경관의 조악화

5.2.29 도시지역의 평면적 확산으로 농경지와 낮은 구릉지의 자연경관이 택지개발, 관광단지개발, 도시기반시설 설치 등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창고 및 공장시설, 도시민 행락시설과 나홀로 아파트 등이 농촌지역 일원에 무질서하게 입지하여 전통적 농촌경관이 조악한 수준의 도시경관으로 바뀌고 있다.

5.2.30 남북방향의 주요 도로축과 더불어 도시회랑이 수도권 전역에 확산됨으로써 도시경관의 비중이 커지고 있으나, 개별단위의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행과 무질서하게 입지하는 초고층 아파트 등의 건설로 도시 스카이라인에 혼란이 초래되고 있으며 지역고유의 경관적 특성이 상실되어 있다.

2) 핵심과제

(경관-T1) 자연경관의 보전과 관리체제 강화

(경관-T2) 지역특성을 반영한 개성있는 경관 창출

3) 전략 및 실천계획

□ (경관-T1-S1) 자연경관 우수지역의 보전을 강화

5.2.31 시·군 단위별로 산림, 계곡, 하천, 호수 등 우수한 경관자원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자연경관지구나 수변경관지구로 지정하고, 이들 경관지구에 대하여 조례를 통해 수목의 벌채, 토석의 채취, 토지형질의 변경 등 현상변경행위와 지목변경행위에 대하여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원형훼손을 방지한다.

5.2.32 독특하고 희귀한 식생, 8등급이상 수림·호수·소택지·습지· 숲 등의 야생동식물 서식지, 특별히 생태적으로 가치있는 지형 및 식생등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자연보호와 생물종서식지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생태계보존지구를 지정한다. 비무장지대내 8등급이상의 우수림, 희귀식물 및 동물상, 람사협약 등록습지(RAMSAR SITE)로 지정가능한 사천주변의 우량습지, 초평도 습초지, 희귀조류 집단서식지, 철새도래지 등은 우선적으로 조사하여 생태계보존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해간다.

□ (경관-T1-S2) 시각축 경관의 종합적 관리 및 활용 강화

5.2.33 경관적으로나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남한강과 북한강의 합수지점, 한강과 서해가 만나는 하구, 서해안 갯벌을 자연공원이나 생태계보존지구로 지정하여 수변지형, 강변수림대, 습지, 조류 및 어패류 서식처를 보존하고, 환경교육장으로 활용한다.

5.2.34 하천 및 연안의 자연경관을 보전하고 수변경관에 대한 일반시민의 조망권을 보호하며, 한강(북한강,남한강), 임진강, 한탄강 등 주요하천을 하천경관과 주변 역사·문화·생태유산이 연계된 보행·자전거·승마중심의 수변경관탐방로로 구축하여 수도권 여가문화를 진작하고 교육장으로 활용한다.

5.2.35 하천연변의 녹지대 및 습지의 보존과 복원을 도모하고, 인공호안 및 토목구조물 경관을 개선하는 자연친화형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하천경관관리계획을 수립한다.

5.2.36 지역별 특색있는 도로경관을 설정하여 관리하며, 지역관광자원과 연계된 경관도로 구축을 도모한다.

□ (경관-T1-S3)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도시개발기법의 도입과 적용

5.2.37 도시개발시 3차원 시뮬레이션기법을 활용한 주변 자연경관의 변화를 예측하여 경관대책을 마련하고, 조망점에서 주요 경관축으로 조망되는 산, 계곡, 호수 등의 우수한 자연경관자원을 훼손시키지 못하도록 한다.

5.2.38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임지가 우세한 평야지대의 도시개발에 대해서도 평야경관 보호를 위한 경관심의를 강화하며, 연면적 일정규모이상의 도시개발 및 도로·철도건설 등 대규모 토목공사에 대한 경관평가기준을 강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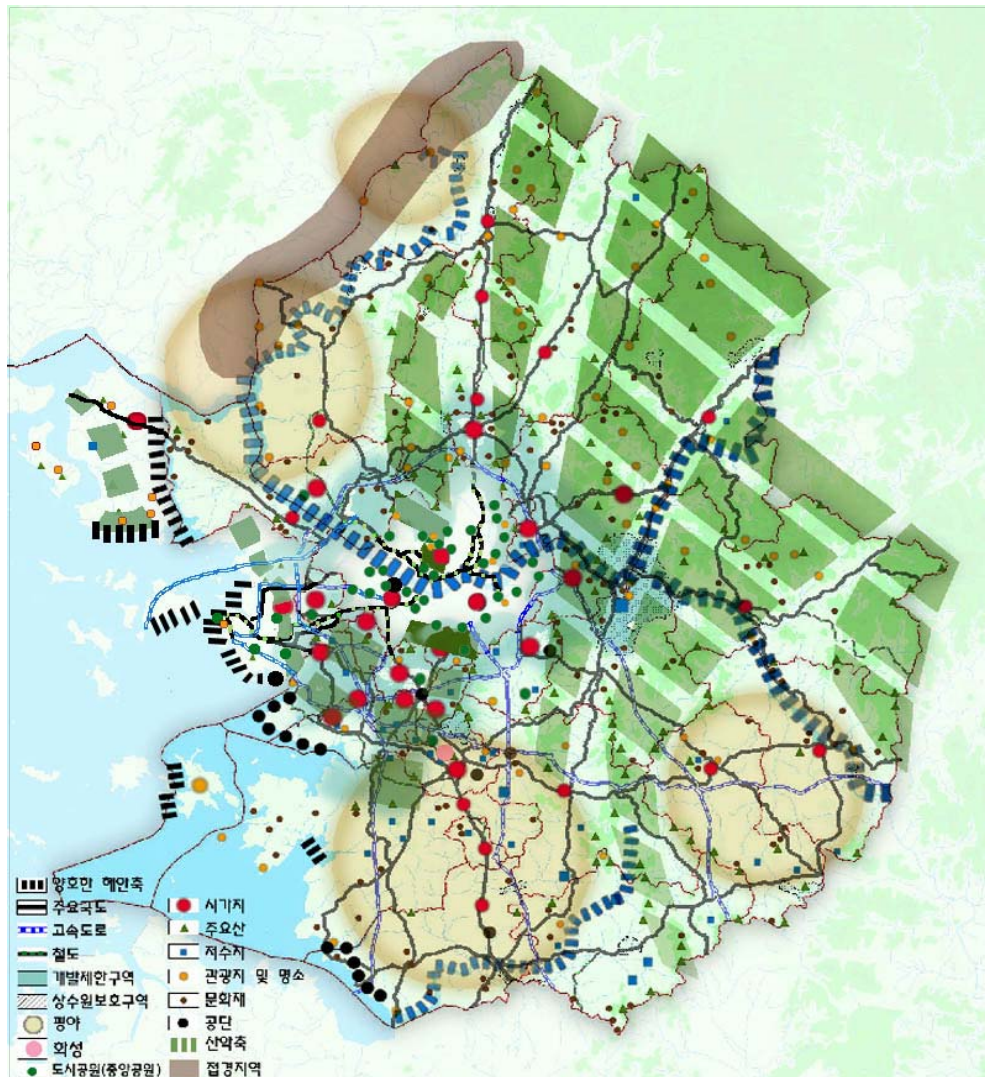
5.2.39 도로·철도등으로부터 가시권내의 지형 및 산림경관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시권내의 토취장, 채석장 허가를 금지하고, 가시권내 산복도로의 노출과 급경사지 도로 개설등을 방지하기 위한 자연친화형 도로설계를 도모한다.

□ (경관-T2-S1) 개성있는 농촌 및 도시경관의 보전과 형성

5.2.40 특색있는 자연·역사·문화 경관요소를 발굴하여 지역의 고유한 경관으로 보존,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정지역을 경관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한다.

5.2.41 자연형 농경지 및 우량농지, 취락지, 과수원, 목장 및 목초지, 특산물경작지 등 농촌경관적 특색이 우세한 지역을 발굴하여 농촌경관 보전을 위한 경관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 농촌의 목가적 풍경을 살리고 지역 고유의 농촌경관을 창출하며 쾌적한 생활공간 조성을 위한 농촌취락지에 대한 경관개선사업을 실시한다.

5.2.42 지역의 자연환경적 특성을 반영한 도시경관특화방침을 수립하며, 개발에 따른 도시경관 및 지역 스카이라인 변화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예측하고 제어한다.



<그림 7> 수도권 골격경관의 개념(예시)

□ (경관-T2-S2) 경관요소별 관리와 경관기본계획 수립

5.2.43 구릉지 일원을 개발하거나 건축물 건축시 기존의 경사지 지형을 최대한 활용하며, 주변 녹화를 통해 산사면 녹지의 연속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5.2.44 도시내 하천, 호수 및 저수지는 지역의 어메니티 및 이미지 향상에 기여하는 친수공간으로 조성하여 공공의 접근성을 강화한다.

5.2.45 주요 역사경관자원에 대하여 상징성 고양을 위한 주변 건축물 높이 제한 등의 도시계획적 수법을 강구하여 주변 경관을 정비하며, 이와 연계하여 역사탐방로등을 조성한다.

5.2.46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별·요소별 경관특성에 따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도시(군)기본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에 반영한다.

다. 여가

1) 현황 및 문제점

□ 여가수요에 대비한 시설의 부족 및 소규모 영세성

5.2.47 수도권에서는 10만㎡ 이상 관광지개발사업이 규제됨에 따라 강원도 등 타지역으로 이동에 의한 교통량이 많고, 국도변이나 경관이 수려한 수변지역 등에 소규모 시설들이 무질서하게 입지하여 자연환경 및 지역경관이 훼손되고 있다.

5.2.48 일정기간 이상 체류하는 리조트 시설이 부족하며, 서울랜드, 에버랜드 등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관광산업으로서의 체계적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소규모로 집객능력이 낮아 여가관광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 여가자원의 지역적 편재와 낮은 접근성

5.2.49 수도권내 국가·지방지정 문화재는 주로 남부권에 다수 분포되어 여가공간 및 교육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5.2.50 동부지역은 자연자원이 풍부하나, 자연보전권역, 상수원특별대책 등 토지이용에 대한 규제가 많아 소규모 여가공간만이 입지가 가능하여 제대로 정비된 여가공간이 부족하다.

5.2.51 서부지역은 서해를 중심으로 한 해양 및 연안자원은 풍부하나, 그동안 국가단위의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대부분의 자원이 훼손되어 여가공간으로서의 매력이 저하되어 왔다.

□ 관광지로서의 매력과 개발잠재력 미약

5.2.52 대부분의 소도시들이 아파트 위주로 개발되어 지역특성이 반영된 도시경관을 찾아보기 어려우며, 여간공간 및 시설들도 차별성이 거의 없어 관광지로서의 매력도가 낮다.

5.2.53 높은 지가로 인해 대규모 리조트 시설에 대한 개발 투자가 어렵고, 수도권외의 중복 토지이용규제로 외국자본유치등에 의한 전략적 개발추진이 어렵다.

2) 핵심과제

(여가-T1) 여가·관광권역의 설정과 관광벨트 구축

(여가-T2) 지역별·지자체별 관광상품 개발

(여가-T3) 여가관광공간의 확충 및 정비와 관리

3) 전략 및 실천계획

□ (여가-T1-S1) 여가·관광권역의 설정과 관광벨트 구축

5.2.54 여가·관광자원의 분포와 공간구조를 고려하여 수도권의 여가관광권역을 남북협력과 DMZ의 생태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안보생태권, 서해안의 갯벌·수산물 그리고 인천국제공항과 연계된 용유·무의도 등 서해안 도서자원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해양권, 역사문화자원과 해양관광자원을 연계한 강화역사문화권, 서해안 산업단지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교육권, 수도로서의 역사성과 업무행정의 중심지 등을 자원으로 하는 대도시문화권, 수변 및 산림자원을 활용하는 수변산악권, 수원화성과 세종대왕릉 등을 자원으로 하는 역사문화권, 서울 인접도시의 주말여가공간을 기반으로 하는 도시근교권의 8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여가·관광을 진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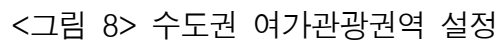
5.2.55 각 여가관광권역별 거점으로 파주·동두천(안보생태권), 인천·시흥(국제해양권), 강화(강화역사문화권), 구로·시흥·안산(산업교육권), 서울(대도시문화권), 남양주·가평·양평(수변산악권), 수원·이천(역사문화권), 서울인접도시(도시근교권)를 설정하여 육성한다.

5.2.56 여가·관광권역 상호간 및 관광거점 상호간 그리고 권역내 시·군을 연결하는 관광벨트를 구축하여 여가·관광수요 및 공급에 있어서 승수효과를 높이고, 지역내 과다한 이동교통 발생량을 줄인다.

□ (여가-T2-S1) 지역별·지자체별 관광상품 개발

5.2.57 지역특성을 바탕으로 지역별 이미지 개선과 고유 관광상품 개발을 포함하는 관광거점 개발전략을 수립하고, 축제 및 이벤트등 여가·관광 특화프로그램을 도시별로 개발하여 지역고유의 여가문화를 증진한다.

5.2.59 농·산·어촌지역의 자연환경, 특산물, 전통문화를 종합적으로 개발하여 도시민의 여가수요 충족, 농외소득 증대, 환경보전을 조화롭게 추구할 수 있도록 농촌민박 및 체험형 관광 지원네트워크를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구축한다.



<표 4> 여가권역별 거점지역과 관광상품(예시)

여가공간권역 (거점지역)	관 광 상 품
안보생태권 (파주,동두천)	50년간 분단의 아픔과 그로 인한 우리나라 안보관광지역 생물자원 및 생태관광지로서의 DMZ 의 중요성 부각 (국가적 관심) 남북화해 분위기로 인해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지역 자연적, 문화적 이미지를 보유한 임진강, 하계 물놀이 장소인 한탄강 이색적인 경관인 동두천 관광특구, 소요산 국민관광지, 먹을거리인 장단콩, 김포쌀 등과 수도권 최대의 근린공원인 호수공원
국제해양권 (인천)	먹을거리인 서해안의 수산물 서해안의 갯벌과 생태자원, 체험관광의 명소(시화호 및 주변간석지 등) 항만과 섬의 경관(영종도, 영흥도, 대부도, 제부도 등) 인천국제공항 인천 항만
강화역사문화권 (강화)	고려궁지, 용흥궁, 고인돌 등 역사문화자원 강화도 남단갯벌 연미정, 갑곶돈대, 초지진, 전등사등의 강화팔경 화문석, 인삼, 순무 등 강화특산물
산업교육권 (구로,안산)	구로디지털단지, 안산공단, 시흥공단, 반월공단과 같은 국가공단
대도시문화권 (서울)	수도로서의 다양한 도시생활 공간과 이벤트 역사, 교육, 업무의 중심지
수변산악권 (남양주)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로 높은 Amenity 한강과 팔당호, 미사리 등 수변 레크레이션 지역 가평 대성리, 포천 산정호수, 백운계곡 등 관광지 (산과 계곡) 산채, 은행나무로 유명한 용문산 수도권 최고의 하계 물놀이 장소인 계곡들 명지산 자연생태계보전지역, 유명산의 자연휴양림
역사문화권 (수원,이천)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 문화자산인 용주사와 독산성, 미리내성지 불거리와 살거리인 이천, 여주, 광주 도자기 문화관광부 지정 문화상징 Best10 불고기 (수원갈비) 안성포도, 여주의 금사참외와 고구마 문화관광부 지정 문화상징 Best10 한글 (세종대왕릉) 에버랜드, 많은 골프장 등과 같은 레저시설 이색적인 경관인 송탄 관광특구, 이천의 온천, 여주의 신록사
도시근교권 (서울인접도시)	개발제한구역, 근교의 다양한 높이의 산림 경기도 유일의 도립공원이면서 역사자원인 남한산성

□ (여가-T3-S1) 여가관광공간의 확충

5.2.60 수도권 서부지역의 수변공간 및 매립지를 활용하여 수도권 남부지역에 편중된 테마파크의 균형배치를 도모하고 서해 도서자원을 활용하여 휴양단지를 건설하되 펜션 건설 등에 대한 기준을 정립하여 도서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한다.

5.2.61 수도권 동부 및 북부지역내에서 여가공간으로 활용성이 높고 선별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자연 및 도시공원, 자연휴식지 등으로 지정하여 여가활동을 체계적으로 수용하고, 그 외 지역은 보전 위주로 관리한다. 현재의 자연보전권역은 관광산업의 잠재력이 높은 곳이므로 외자유치 및 독자 아이টে으로 가능할 경우 시·군별로 한 개소 정도를 전략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관광지로 한다.

5.2.62 접경지역내 비무장지대등 생태적 가치가 높은 자연자원이 풍부한 지역을 최대한 보전하며, 동식물 자원등 생태적 자원을 관광자원화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 (여가-T3-S2) 여가공간의 정비 및 관리

5.2.63 서해안 갯벌, 임진강이나 한강의 하구 및 한탄강, 자연발생 유원지 등의 우수한 자연자원을 평가하여 보전할 곳은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이용을 제한하고, 이용이 필요한 지역은 자연공원으로 지정하거나 일정 규모 이하의 지역에 대해서는 자연환경보전법상의 자연휴식지로 지정하여 관리한다.

5.2.64 광역녹지축 및 도시내 녹지축을 도보, 조깅, 자전거타기등의 근린형·순환형 여가공간으로 조성하고 일반시민의 접근성을 제고한다.

5.2.65 기존 유원지 및 수도권 외곽의 자연휴식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설에 대한 허가지침을 정비한다.

5.3 광역교통

가. 현황 및 문제점

□ 시·도간 유출입 통행의 증가와 높은 승용차 의존율

5.3.1 2002년 기준으로 시·도간 통행량 중에서 서울과 경기-인천간의 유출입 통행량(수도권내 총목적통행의 11.6%)이 수도권내 통행의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목적별로 살펴보면 귀가통행을 제외할 경우 공통적으로 출근목적의 통행이 총 유출입 통행량의 약 46.3%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업무통행, 개인업무통행의 순으로 분포하고 있다.

5.3.2 2002년 기준으로 수도권 유출입통행의 수단별 분포를 보면 승용차 부담률이 모두 34%이상(지하철 환승포함, 도보제외 기준)을 차지하고 있으며 서울·인천간 통행은 경인선 등의 영향으로 지하철 부담률이 높은 편이나, 인천·경기간 통행은 승용차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 광역도로망 체계의 연계성 부족과 낮은 효율성

5.3.3 수도권 광역도로망은 방사형을 이루고 있고, 우회도로가 부족하여 통과교통 유발, 통행 장거리화, 통행시간 증가 등으로 효율성이 낮으며, 주요 간선도로는 시·도별로 계획이 수립되고 건설됨에 따라 도로의 연결성 및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

5.3.4 수도권 교통체계를 통합하고 효율적인 광역교통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가 공동으로 설립하여 운영중인 수도권교통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법적·제도적 보완 및 재원확보가 필요하다.

□ 광역철도망의 확충 미흡

5.3.5 서울특별시 제 1기 및 제 2기 지하철, 인천광역시 지하철, 수도권 전철 운행구간의 총 구간거리는 2004년 12월 현재 493.8km, 정차장 수는 총 390개이고, 광역전철의 경우 경인선(구로~인천) 복복선 전철화 사업(구로~부평간 복복선 전철화 1998년 완공)과 경의선, 경원선, 경춘선 복선전철사업과 분당선연장, 신분당선, 신안선선 건설이 추진 중에 있다.

5.3.6 수도권 광역도시철도망은 선진외국의 주요도시와 비교하여 볼 때 시설연장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고 수송분담률 또한 낮으며, 광역철도망이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있지 않아 수단간 연계, 노선간 환승, 운행효율성(간선과 지선 운행, 완행과 급행 운행 등) 측면에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 주요 교통축의 도로혼잡 가중 및 도시철도 부담률 저하

5.3.7 자동차의 급속한 증가와 도로위주의 교통망 구축으로 수도권 주요 간선도로축을 따라 개발이 점차 확산되고 있으며 도로혼잡이 가중되고 있다.

5.3.8 수도권의 도시광역화, 자가용 보유율 증가, 교통수요 증가 등은 선진외국의 수준에 비추어 볼 때 소득증대와 함께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보여지며, 수도권 대중교통체계구축을 소홀히 한다면 승용차 부담률의 증가 등 교통혼잡은 계속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5.3.9 수도권의 주요 교통축별 교통량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교통량이 1995년부터 1999년까지 연평균 약 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 1) 특히, 김포축과 성남-광주간 내륙축의 연평균 교통량 증가율이 각각 12.1%, 12.7% 로서 높은 증가추이를 보이며 이는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인구증가에 기인한다.
- 2) 반면에, 수도권 지하철 및 전철 1일 평균 수송량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1996년부터 1999년사이 전체적으로 약 1.3% 감소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지하철의 경우 1.4%, 수도권 전철의 경우 1.0% 감소하고 있다.

□ 종합환승체계 미비 및 환승주차장 환승율 저조

5.3.10 서울특별시내 환승센터는 역, 버스정류장, 환승주차장 등을 설치한 단순 환승역의 형태로 수단간 환승에 대한 종합적, 유기적 연계체계가 미흡하다.

5.3.11 서울외곽지역 환승주차장 환승률은 매우 저조한 편으로 본래 목적인 차량의 도심진입 억제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서울특별시내의 경우도 환승목적이 아닌 단순주차나 1시간 이하의 단시간주차 비율이 높다.

□ 터미널 시설 접근성 저하 및 주변교통혼잡

5.3.12 서울특별시내 고속터미널과 센트럴시티를 제외한 대부분의 터미널은 대중교통으로부터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안고 있으며, 고속터미널과 센트럴시티, 동서울터미널 등은 교통유발량이 과다하여 교통체증을 발생시키고 있다.

5.3.13 경기 일부지역은 버스터미널 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기존시설이 낙후하여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곳이 있다.

□ 종합화물운송체계 구축 소홀 및 낮은 운송효율성

5.3.14 도로교통의 혼잡심화, 소량 배송수요 증대에 따른 소형화물차량의 증가 등으로 교통체증이 심화되어 화물차량의 평균 통행속도가 감소하고 운행효율을 저하시켜 전체적인 물류수송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5.3.15 수도권 물동량에 비하여 물류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며, 시설부지 가능성 또한 부족하고 고지가이므로 부지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5.3.16 대규모 물류거점과 물류간선 네트워크간 수송체계 및 타 교통수단과의 연계수송체계가 미흡하여 운송효율성이 낮다.

□ 국제공항·항만 등 국제교류기반시설의 배후기능 부족

5.3.17 공항, 항만 등 국제교류기반시설의 수요가 향후 경제성장, 소득증대, 대중국 교역증가 등에 따라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인천국제공항은 배후지 개발이 미흡하며, 인천항은 컨테이너 처리용량 부족 등으로 시설수요증가에 충분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나. 핵심과제

(교통-T1) 대중교통중심의 효율적인 광역교통체계 구축

(교통-T2) 토지이용과 연계 강화 및 환경친화적 교통시설 확충

(교통-T3) 공항·항만시설의 확충 및 정비

다. 전략 및 실천계획

□ (교통-T1-S1) 다핵분산형 공간체계에 부합하는 광역교통망 체계 구축

5.3.18 수도권 광역교통체계는 정시성, 신속성이 양호한 도시철도 중심으로 하되, 도시 간 연결기능은 전철이, 도시내 집산기능은 지하철이 근간이 되는 대중교통체계 중심의 광역교통체계를 구축한다.

5.3.19 경부고속철도등의 고속·간선철도와 수도권순환선 등의 광역철도망, 그리고 도시철도간 연계를 통해 광역철도망을 구축한다.

5.3.20 장기적으로 서울외곽과 거점도시간 대중교통이용률 제고를 위해 수도권내 간선 광역철도망과 지선철도, 지하철, 경전철간의 연계를 강화한다.

5.3.21 각 5개의 남북축 및 동서축과 2개의 순환축으로 이루어지는 광역도로망을 구축한다.

5.3.22 대도시내의 순환도로망, 지역중심도시를 연결하는 연계도로망, 혼잡지역 우회도로, 입체교차로 등을 건설하여 병목구간을 해소한다.

□ (교통-T1-S2) 대중교통시설의 확충과 운행체계의 개선

5.3.23 도시철도는 신규노선 건설과 함께 기존노선을 직결하는 단거리 노선을 건설하여 우회구간 및 통행시간을 단축하고 이용편의를 증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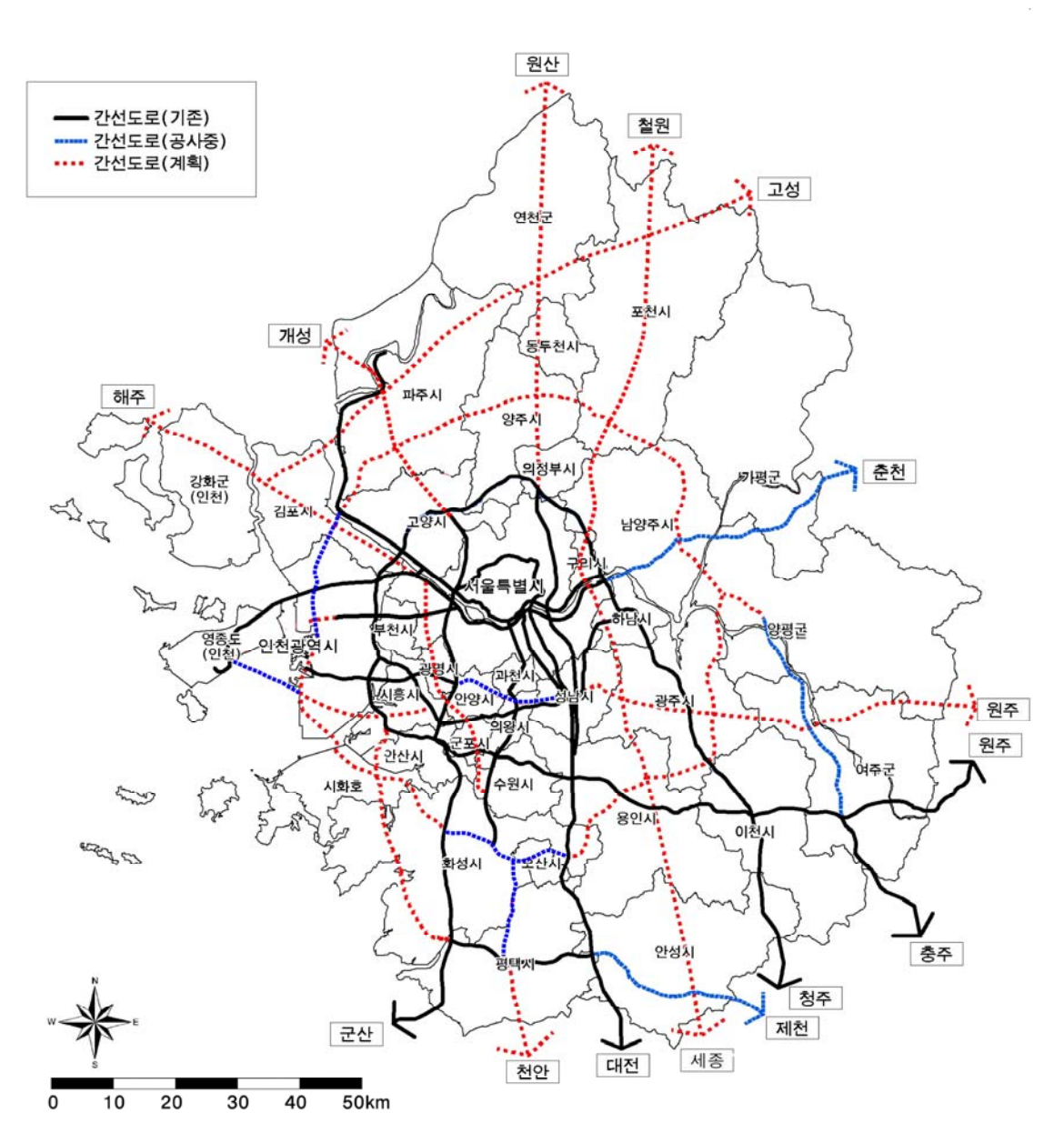
5.3.24 거점도시 역과 주요도시의 중심역을 바로 연결하는 급행열차를 운행한다.

5.3.25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다양한 경전철 시스템의 도입 등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교통체계를 지향하며, 지자체의 자원부족을 극복하기 위하여 민자유치, 민관합작 등 다양한 자원조달방안을 강구한다.

5.3.26 도시철도의 역세권 관리, 환승주차장 등 연계교통시설의 정비, 환승주차장 설치, 보행편의시설 개선 등 연계환승과 관련된 서비스 개선에 적극 투자하여 이용자 편의 중심의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한다.

5.3.27 버스노선체계는 도시철도 확충 등 향후 교통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간선망과 지선망으로 이원화함으로써 간선버스는 도시철도와의 경합노선을 최소화하여 도시철도 서비스 취약지역에 중점적으로 공급하고, 지선버스는 도시철도역을 중심으로 인근생활권을 순환운행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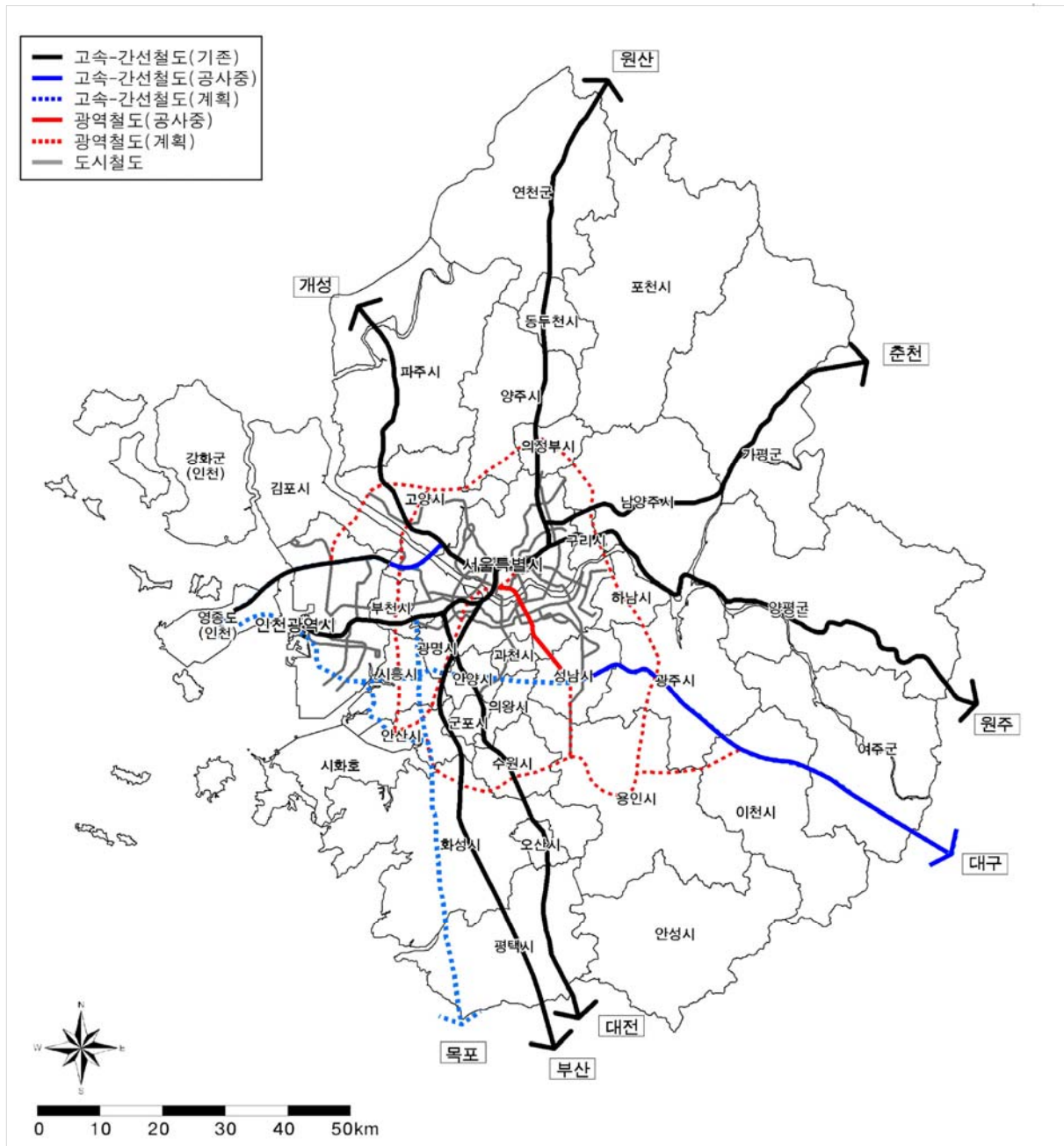
5.3.28 지하철과 버스의 중간규모의 교통수요를 처리하고, 정시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BRT(Bus Rapid Transit, 간선급행버스), GRT(Guided Rapid Transit, 유도고속차량) 등 새로운 대중교통수단을 도입한다.



<그림 9>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간선도로망 계획구상(변경)

<표 5> 수도권 간선도로망 계획노선 및 특성

구분	노선명	주요 경유지	노 선 특 성	비 고
남 북 축	① 강화-평택	강화-김포-서울외곽-안산- 평택 (서해안고속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국 간선망 남북 1축 서해안지역 연결 고속도로 (시흥-평택간 민자고속도로 포함) 인천국제공항-김포-파주간 동서2축 과 연결 	
	② 문산-천안	파주-고양-광명-수원-평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국 간선망 남북 2축 광명-수원-평택간 연계 및 서해안, 경부축 보완노선 	수원-평택 보완
	③ 연천-대전	연천-의정부-성남-오산 (경부고속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국 간선망 남북 3축 경부고속도로 	
	④ 철원-세종	철원-포천-남양주-광주-용인 (제2경부고속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국 간선망 남북 3축과 중부고속 도로축을 보완하며, 남양주-광주- 용인지역 통행축 보완 구리-용인-안성-세종 노선 신설 	남북축 보완
	⑤ 철원-충주	철원-포천-양평-여주 (중부내륙고속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국 간선망 남북 4축 여주-구미간 중부내륙과 연계 	
동 서 축	㉗ 강화-고성	김포-파주-연천-포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국 간선망 동서 1축 경기, 강원 북부지역 연계 	
	㉘ 인천-춘천	부천-서울강변북로-구리- 양평(경인, 서울-춘천간 고속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국 간선망 동서 2축 경인고속도로, 서울-춘천간 고속도 로의 동서간 연계 	
	㉙ 인천-원주	안산-신갈-이천 (영동고속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국 간선망 동서 3축 인천국제공항-송도지구-시화지구간 을 직결 제2경인고속도로(인천-광명-안양-성 남-광주-원주)와 제2영동선 연결 	고속도로, 인천국제공 항 연계
	㉚ 안중-제천	안중-평택-안성-제천 (안중-평택간 고속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국 간선도로망 동서 4축 서해안, 경부고속도로 연계 및 아 산만권 연결 	
순 환 축	제2순환	서울외곽순환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제3순환	인천-김포-파주-남양주- 광주-용인-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경기북부, 남부지역 고속도로 계획 노선을 동서축·남북축으로 연계 보완하며, 생활권간 연결 강화 	



<그림 1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간선철도망 계획구상

<표 6> 수도권 간선철도망 계획노선 및 특성

구 분	노 선 명	경유지 및 계획노선 특성	비고
고속·간선 철도	①경부고속철도	· 서울(광명역)-천안·아산-대전-대구-부산	일부 개통
	②서남선 철도	· 수도권 서부와 아산만권 산업지대 연결	
	③인천국제공항철도	· 인천국제공항과 서울역 연결	일부 개통
	④중부내륙선	· 성남(분당)-광주-이천-여주-문경	
	⑤제2공항철도	· 인천국제공항-인천-광명(경부고속철도)-판교 · 개항단계에서 기존철도로 환승하고, 수도권 서남부지역 인천국제공항과 고속철도역간 연계 강화를 위한 장기구상	교통시설간 연계
	⑥ 방사형 노선	· 경인선, 경부선, 경의선, 중앙선, 경춘선, 경원선, 수인선 등 복선전철화 사업	
광역철도망	⑦수도권 순환선	· 지역간철도와 도시철도 노선 연계 강화 · 수도권내 주요 생활권 중심도시를 직결 · 도로교통수요 전환을 위한 대중교통체계 구축	지역간철도 보완
	⑧신분당선	· 용산-강남-정자-광교-호매실(수도권순환선) · 중부내륙선과 수도권 남부지역 연계	지역간철도 보완
	⑨신안산선	· 안산-광명역-여의도-청량리	지역간철도 보완
	⑩인천(인천국제공항)-고양 (경의선)-의정부(경원선) 연계	· 인천국제공항, 경기북부지역 연계, 남북교 류 강화를 위한 장기구상	지역간철도 보완
도시철도간 연계	도시철도간	· 서울특별시 7호선, 인천광역시 1·2호선 등	
	도시철도와 간선철도	· 인천광역시 2호선, 인천국제공항선, 경인 선, 수도권 순환선 연계	

□ (교통-T1-S3) 이용자 중심의 종합환승체계 구축

5.3.29 도심 유입교통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자가용-대중교통수단, 도로-철도간 연계를 가능하게 하는 종합환승시설을 간선교통망의 결절지점 및 주요 교통로상에 확충하여 공간, 시설, 동선 등을 합리적으로 연결하는 환승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

5.3.30 대중교통수단간 요금체계의 통합, 환승할인제도, 자유이용권 제도 등을 도입하여 대중교통 이용편의 및 환승편의를 증진하도록 한다.

5.3.31 낙후된 터미널시설을 확충하고 정비하며 교통수단간, 지역간 교통연계를 위한 정보안내체계를 개선하여 지역환승센터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 (교통-T1-S4) 수도권 종합화물수송체계의 구축

5.3.32 대규모 물류시설과 간선도로간 네트워크 연계를 강화하여 원활한 수송을 유도한다.

5.3.33 도로, 철도, 항만, 공항의 연계 강화 및 필요시 화물차 전용(우선)도로 도입 등 화물 흐름을 고려한 수도권내 화물수송체계를 구축한다.

□ (교통-T2-S1) 친환경적 교통체계 구축

5.3.34 교통계획은 대기오염, 소음, 진동, 도시경관 저해, 생태계 단절을 고려하되 녹지축이나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에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며, 녹지축 횡단시에는 터널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5.3.35 교통혼잡 및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버스, 화물차 등의 청정연료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배기가스 배출량이 적은 차량의 진입만을 허용하는 특별교통관리지구의 지정을 확대한다.

5.3.36 교외 농촌지역에서의 국도 및 지방도 확충은 자연경관 훼손 및 생태계 단절을 방지하여 4차선이상 확충시 주변 절개지 발생과 자연경관에 대한 영향평가를 강화한다.

5.3.37 자전거 교통수송분담율을 10%로 제고하고, 한강 및 한강 지천을 자전거도로로 연결하는 자전거 코스를 개발한다. 일정 폭 이상의 보도에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확보하고 산업단지일원에서 차도축소를 통한 자전거전용도로 설치를 확대 한다. 또한 자전거 이용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자전거도로 정비방안을 강구한다.

□ (교통-T2-S2) 교통수요관리정책의 강화

5.3.38 혼잡통행료, 도로사용료, 도심 주차료 인상 등 경제적 규제수단을 통해 도로교통수요를 억제한다.

5.3.39 도로용량 조정을 통하여 버스우선차로, 보행자와 자전거이용자를 위한 공간을 확보한다.

□ (교통-T2-S3) 토지이용계획과 교통계획간의 정합성 유지 강화

5.3.40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특별법상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의무를 엄격하게 적용하여 교통량 유발이 큰 대규모 택지, 산업단지, 유통단지, 여가·관광시설 등 도시개발사업시 광역교통시설의 적정공급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시설공급의 시기를 사업준공과 일치시키도록 하며, 이에 대한 심의 및 승인절차를 강화한다.

5.3.41 대중교통 시설 및 결절점(환승역, 환승센터, 전철역 등) 주변토지를 우선적으로 개발(TOD, Transit Oriented Development)하고, 개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 (교통-T2-S4) 종합적인 광역교통행정체계의 구축

5.3.42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가 공동으로 수도권 교통조사를 시행하되, 통계청의 주택·인구 센서스 조사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시점에 국가교통조사와 연계하여 수행하며 이에 기초하여 광역교통계획을 수립한다.

5.3.43 신교통수단 도입, 과학적 교통관리시스템 구축 등 첨단화, 정보화된 지능형 교통체계(ITS,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를 구축한다.

5.3.44 도로시설간 연계기능 및 순환기능 향상과 교통시설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광역교통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5.3.45 수도권교통조합의 기능을 강화하여 대중교통서비스의 공공성과 효율성 확보, 광역교통시설의 지속적 유지·관리, 권역내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기반조성, 수도권 광역교통시설사업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간 합리적 분담방안 합의 등을 수행토록 한다.

□ (교통-T3-S1) 동북아 국제교역기능의 강화를 위한 공항·항만시설의 확충

5.3.46 인천국제공항을 동북아의 중심공항으로 육성하고, 평택항만 및 인천항만의 정비·시설확충으로 연안화물, 수출입 화물 및 컨테이너 처리의 복합항만기능을 강화한다.

5.3.47 인천국제공항 배후지역인 영종도 일원과 인천항 배후지역에 자유무역지역을 조성하며, 공항, 항만, 통신 등의 첨단복합기능을 수용한다.

5.3.48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인천 서부지역 및 인천국제공항 주변지역의 남북간 간선교통망을 확충하여 동북아 국제교역기능을 강화한다.

□ (교통-T3-S2) 남북통일에 대비하여 간선교통시설의 확충

5.3.49 남북교역 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남북축을 잇는 고속도로 및 철도를 확충한다.

5.3.50 경기 북부의 점진적 도시화를 전제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남북연결 간선교통체계를 구축하고, 광역교통계획을 수립한다.

5.4 광역공급 및 이용시설

가. 현황 및 문제점

□ 광역서비스의 장기적 안정적 공급의 한계

5.4.1 광역시설을 용수공급시설, 하수종말처리장, 폐기물처리시설의 광역공급시설과 운동장시설, 물류시설, 정보통신시설의 광역이용시설로 구분하여 광역시설계획을 검토한다. 이중 공공이 대부분 공급하게 되는 용수공급, 하수종말처리, 폐기물처리의 광역시설은 시설확충을 위한 재원이 부족하여 광역서비스가 적기에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고 있다.

5.4.2 용수공급과 관련하여 양호한 수질과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기 위한 상수원보호구역의 신규 및 확대지정이나 폐기물처리시설등의 부지확보가 관계 지자체 및 인접 지자체간에 갈등만 야기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도 반발하여 적기에 공급되지 못하고 있다.

- 1) 잠실상류~팔당댐간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서울특별시가 요청하였으나, 경기도 해당지역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 2) 서울 구로구와 광명시, 서울 송파구와 성남시, 서울 강서구와 부천시·인천 계양구 등이 서로 소각시설 건설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 비효율적인 광역시설 공급 및 이용체계

5.4.3 광역공급시설의 하수종말처리장, 폐기물처리시설, 지방상수도과 광역이용시설의 운동장은 개별 지자체 단위로 계획하고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인접 지자체와의 공동설치 및 활용을 통해 규모경제를 살리는 효율적 시설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다.

- 1) 환경기초시설이 개별 지자체 단위로 소규모의 산재된 형태로 운용되어 환경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며, 요금 현실화율도 낮아 비효율적이며 재원확보도 어렵다.
- 2) 종합운동장 또는 일반운동장등 대규모 운동장 시설도 대부분 지자체별로 확보하기 때문에 시설의 활용도가 낮고 시설별 특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5.4.4 광역이용시설의 물류시설은 민간이 운영하는 영세한 규모가 대부분이어서 시설 간 연계성이 떨어지며, 화물터미널의 경우 단순 알선대기소나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공항과 항만을 연계시키면서 국제물류기능과 국내유통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복합기능의 국제물류거점시설이 부족하다.

□ 서비스공급의 지역격차 발생

5.4.5 지자체의 재정능력에 따라 용수공급, 하수처리 및 폐기물처리 서비스 수준에 지역격차를 발생시키고 있다.

5.4.6 하수도 보급률의 꾸준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하류지역 수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한강 상류지역 하수도보급률은 50%내외의 낮은 수준에 있다.

5.4.7 광역이용시설중 물류시설은 대부분 민간이 설치함으로써 지역간 서비스공급 수준이 상이하며, 정보통신시설은 국가가 주요 정책을 제시하고 각종 정보화 지원사업을 통해 주도하고 있으나, 통신사업 자체를 민간회사에서 시행하고 있어 시설공급 및 이용에 지역간 격차가 발생하게 된다.

나. 핵심과제

☐ (시설-T1) 미래를 대비한 충분한 광역시설 확보

☐ (시설-T2) 광역시설 설치 및 운영체계의 효율화

☐ (시설-T3) 광역시설 서비스 공급의 지역간 형평성 제고

다. 전략 및 실천계획

1) 용수공급시설

☐ (시설-용수-T1-S1) 안정적 생활용수 공급을 위한 상수원의 확충 및 보호

5.4.8 향후 용수수요에 대비하여 한탄강·임진강 등지에 신규 상수원 확보 타당성을 검토하고, 팔당호등 기존 상수원별 수질관리대책을 마련한다.

☐ (시설-용수-T2-S1) 물수요 관리정책의 강화

5.4.9 각 시·군 단위별로 운영되는 상수도사업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생활권별, 수계별로 통합하여 광역화를 추진한다.

5.4.10 물값 현실화를 통해 물절약을 유도하여 자원낭비를 방지하는 동시에, 용수공급 시설의 보수 및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한다.

5.4.11 물수요를 절감하기 위하여 중수도 설치를 의무화하며, 이에 필요한 설계기준 및 지침 등을 마련한다.

□ (시설-용수-T2-S2) 수혜자부담원칙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5.4.12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피해를 직접적으로 보상하고, 지역주민의 편의 증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강화하여 부의 외부효과를 적극적으로 내재화하되, 소요비용 분담에 있어서 수혜자부담원칙의 적용을 강화한다.

5.4.13 상수원보호구역내 수질보전을 위해 필요한 고도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물공급 수혜자들에게 분담시킨다.

□ (시설-용수-T3-S1) 지역간 상수공급 격차의 해소

5.4.14 지역별 용수공급 격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주요 수계와 광역상수도간의 연계, 지방상수도의 광역화 또는 광역상수도의 소규모화, 지방상수도와 광역상수도의 연계를 강화한다.

5.4.15 용수공급시설이 부족한 비도시지역을 우선사업지역으로 선정하여 수도권 모든 지역에 고르게 서비스될 수 있도록 한다.

□ (시설-용수-T3-S2) 신규 도시개발지역과 기존시가지간 상수배정의 형평성 확보

5.4.16 대규모 개발에 따른 신규 용수수요 발생과 기존시가지의 용수수요 증가에 대하여 용수배분원칙과 기준을 설정하여 합리적으로 대처한다.

2) 하수종말처리장

□ (시설-하수-T1-S1) 소규모 하수처리장의 증설

5.4.17 농촌지역 특히, 한강 상류지역의 하수처리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소규모 하수처리장 증설을 추진한다.

□ (시설-하수-T2-S1) 지역특성을 고려한 광역적 하수처리체계의 구축

5.4.18 대도시 및 인접지역, 공동수계지역 등 광역적인 하수처리가 가능한 지역에서는 하수도관망 및 하수처리시설의 공동설치 및 이용을 유도함으로써 하수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5.4.19 광역적 하수처리체계를 구축하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국고를 지원하거나, 국고지원비율을 인상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 (시설-하수-T2-S2) 수혜자부담원칙에 의한 하수처리비용 분담방안의 강화

5.4.20 하수처리장이 입지한 지역주민에게 발생하는 피해는 각종 지원사업을 통하여 보상하되, 소요비용은 수혜지역의 주민이 부담하도록 한다.

5.4.21 상류지역에 설치되는 하수종말처리장의 설치비용에 대하여 실질적 수혜자인 하류지역 주민, 오염원인자로서의 상류지역 주민, 그리고 정부간에 공정한 분담을 할 수 있는 합리적인 분담방안을 마련한다.

□ (시설-하수-T2-S3) 하수도사용료의 현실화

5.4.22 하수도시설의 보수 및 확충계획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하수도사용료를 현실화하여 원활한 시설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 (시설-하수-T3-S1) 한강 상류지역 및 비도시지역의 하수처리율 제고

5.4.23 수도권 용수공급의 원류인 한강 상류지역과 상대적으로 하수도보급률이 낮은 비도시지역의 하수처리율을 높이기 위해 하수처리시설의 확충 및 신설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3) 폐기물처리시설

□ (시설-폐기물-T1-S1) 생활폐기물 처리방식의 개선

5.4.24 기술 고도화 등을 통한 환경오염 저감을 전제로 소각시설을 확충하여 소각처리율을 25%, 재활용률을 50%로 제고함으로써 매립발생량 최소화를 유도한다.

□ (시설-폐기물-T1-S2) 적정 규모의 소각시설 확충

5.4.25 환경적으로 위해한 소규모 소각시설을 폐쇄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적정규모의 시설을 설치하여 소각에 따르는 환경오염을 저감하며, 폐열 이용 등을 통해 자원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 (시설-폐기물-T2-S1) 협력적·보완적 폐기물처리체계의 구축

5.4.26 비위생적인 매립지와 소규모 소각시설이 산재하여 발생하는 환경오염문제를 완화하고,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용이하게 확보하며, 건설·운영비를 절감하는 등 폐기물처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기존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서는 공동이용을 촉진하고 새로 설치할 경우에는 지자체간 협력을 통해 광역적으로 시설설치를 유도한다.

5.4.27 지자체간의 폐기물처리시설의 공동설치 및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광역이동에 따른 2차 오염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폐기물처리권역을 구분하여 권역별로 매립·소각·재활용시설을 설치하되, 공동활용을 전제로 한 시설설치에 대하여 국고지원 비율을 상향조정한다.

5.4.28 기존시설의 처리용량을 인접 지자체와 상호 교환하여 활용하거나, 인접 지자체에 제공하는 경우 운영비나 시설확충비용에 대한 중앙정부차원의 지원제도를 신설하여 시설활용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킨다.

5.4.29 폐기물처리시설이 대형화될 경우 폐기물처리를 위한 광역이동으로 인한 운송비 증가와 이에 따른 처리비 상승 및 2차 오염 등의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

5.4.30 광역시설처리용량과 수요간의 과부족 지역을 사전에 예측하여 공동활용을 추진하고, 개발사업추진시 주변 광역시설 현황을 파악하여 계획할 수 있도록 시설별 관련자료를 수집·저장, 검색 및 분석할 수 있는 광역시설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 (시설-폐기물-T2-S2) 폐기물처리요금의 현실화

5.4.31 폐기물처리시설의 확충 및 환경친화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재원확보와 폐기물 발생 저감을 위해 종량제봉투값 등 폐기물처리요금을 현실화한다.

□ (시설-폐기물-T3-S1) 비도시지역의 환경친화적 폐기물처리체계 구축

5.4.32 비도시지역의 폐기물수거권역을 확대하고 비위생적인 소규모 매립장 및 소각시설을 폐쇄하여 폐기물수거 서비스 수준을 제고한다.

4) 운동장시설

□ (시설-운동장-T2-S1) 기존 운동장의 특화를 통한 지자체간 보완적 이용

5.4.33 개별 운동장 단위로 기능이나 시설에 대한 특화를 통해 지자체간에 공동 활용함으로써 활용도를 제고하고, 주민에게 다양한 여가서비스를 제공한다.

5.4.34 인접 시·군 주민에게도 운동장시설을 개방하여 생활체육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5) 물류시설

□ (시설-물류-T1-S1) 물류거점시설의 설치

5.4.35 수도권 내에서 발생하는 수출입화물의 처리와 인천국제공항과 항만을 연계하는 국제물류거점시설을 공항 및 항만인접지역에 설치한다.

5.4.36 기존의 부곡화물터미널을 확충하고, 의왕내륙화물기지의 확장 한계성을 보완키 위해 수도권 남부지역(수원이남)을 제2컨테이너기지로 개발하여 사용할 계획이며, 또한

주요 산업단지 지역에는 화물을 수송할 수 있는 집배송시설등의 물류시설을 설치한다.

5.4.37 간선교통망의 결절지역, 간선철도망의 주요역, 도로와 철도의 결절지역 등 물류요충지에 대규모 물류·유통단지를 건설하고 지역단위로 거점 물류유통단지를 조성하되, 물류거점지역에는 물류 및 지원시설 외에 대규모 점포, 전문상가 등의 상가시설과 공원·녹지를 조성하여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

5.4.38 환경친화적 지하물류시스템을 위하여 석유류의 안전한 수송을 위한 파이프라인 수송망체계를 확립하고 지하공간을 활용한 폐기물, 소화물 운송시스템을 구축한다. 화물수송 합리화와 도시내 교통혼잡 완화를 위한 도시내 물류시설을 체계적으로 배치하고 물류기반시설을 확충한다.

□ (시설-물류-T2-S1) 체계적인 종합물류체계의 구축

5.4.39 수도권 전체의 물류관련시설의 위계를 재정립하여, 기능과 규모별로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물류를 관리하며, 유통시설과 교통시설 그리고 물류정보망이 연계된 종합물류체계를 구축한다.

5.4.40 현재의 영세한 민간시설을 업종단위로 통합 또는 공유화하여 규모경제 및 시설간 연계성 확보를 통해 효율성을 제고한다.

6) 정보통신시설

□ (시설-정보-T1-S1) 광역적 지역정보센터의 설치 운영

5.4.41 광역적으로 지역정보를 수집, 관리할 수 있는 인접지자체간의 지역정보센터와 수도권 차원의 광역정보센터를 설치하여 수도권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 (시설-정보-T3-S1) 행정전산망체계를 활용한 비도시지역에 대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5.4.42 정보통신시설을 단기적으로 보급하기 어려운 도서 및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행정전산망을 활용한 지역단위 정보공유공간을 확보하고 이를 개방하여 지역주민에게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5.5 방재

가. 현황 및 문제점

- 임진강 유역 등의 반복적 수해발생과 방재를 고려하지 않은 도시개발 확산으로 인한 빈번한 재해발생 및 피해규모의 대형화

5.5.1 지난 10년간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가 임진강 하구의 경기북부, 안성천 수계의 경기남부에 발생하여 왔으며, 1990년대 후반 이후에는 중랑천 일대 및 동두천, 의정부, 파주등 수도권 북부지역에 연평균 강우량의 70-80%에 해당하는 국지성 집중호우가 발생하여 많은 인명 및 재산피해를 초래하였다.

5.5.2 도시지역은 기존의 비시가지 지역과는 달리 우수의 토양침수율이 낮은 불투수층의 비율이 높아 하천의 유입유량이 증가하며 침투시간 유출율이 급속히 증가하여 재해발생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5.5.3 재해발생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난개발 및 토지의 고밀이용화 등으로 홍수, 침수, 산사태 등의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 사전예방적 종합적 방재대책의 부재

5.5.4 도시개발사업 시행시 방재대책 미비등 재해발생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감소시키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

5.5.5 미흡한 방재예방투자로 오히려 사후 복구비용이 막대하게 소요되며, 비효율적 투자가 반복되고 방재관련 정보도 축적되지 못하고 있다.

5.5.6 단편적·실적위주의 치수대책에서 광역적 차원의 유역별 종합치수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나. 핵심과제

(방재-T1) 일상생활 위주의 종합적 방재대책으로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방재-T2) 광역적 수방재체계의 구축

다. 전략 및 실천계획

□ (방재-T1-S1) 재해위험도에 따른 지역관리와 광역적 방재정보전달체계 구축

5.5.7 사전예측을 통한 재해예방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형, 지질, 토양, 지반, 수문 등에 관한 기초조사를 시행하여 이를 토대로 방재정보전달체계를 구축한다.

5.5.8 홍수 등 재해가 빈발한 지역에 대하여 재해발생시 기상조건, 지형, 피해범위 및 규모 등에 관한 종합정보를 구축하고 이를 시·군·구 방재계획에서 재해예방 및 예측자료로 활용한다.

5.5.9 재해위험도를 신규 개발지역의 토지이용계획에 반영하고, 기개발지역중 재해위험도가 높은 지역 및 반복 재해발생지역은 특별관리한다.

5.5.10 반복적 재해발생지역에 대한 예방조치를 강구하고,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보다는 개량복구가 이루어지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재정지원을 확대한다.

5.5.11 수도권 전역을 범위로 광역적 차원의 방재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수도권광역방재센터의 설립을 적극 검토한다.

□ (방재-T1-S2) 방재를 고려한 토지이용지침의 수립

5.5.12 저지대, 상습침수지구 등은 개발대상에서 제외하고, 도시개발로 인한 재해가능성 예측 및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방, 우수지, 저류시설등 방재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며, 홍수시 하천으로 한꺼번에 유입되는 유량을 감소시키기 위해 투수성 토지이용을 유도하거나 충분한 녹지를 확보하게 한다.

5.5.13 농촌지역에서는 홍수발생시 농지의 우수지 기능을 강화하고, 홍수발생시 축산폐수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토지이용체계를 구축하게 한다.

5.5.14 산지는 홍수피해 저감을 위한 유역별 산림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산사태 가능성을 고려하여 임도를 개설하며, 도시개발시 재해발생을 고려하여 과도한 산지개발을 억제한다.

5.5.15 하천정비, 제방, 우수지 등 점, 선적 방재시설 위주의 배치에서 탈피하여 지구 및 지역단위의 면적(面的)인 방재시설 및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한다.

5.5.16 토지이용 형태별로 수용가능한 방재 위험성을 설정하고, 위험물을 분산수용하며, 대규모 사고시 피난을 고려한 방재완충지대를 설정한다.

□ (방재-T1-S3) 오픈스페이스 및 시설을 활용한 방재대책의 마련

5.5.17 도로, 주차장, 공지, 녹지 등의 오픈스페이스와 시설은 재해시 피난장소이자, 재해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므로 도시개발시 충분하게 확보한다.

5.5.18 비상시 멀리 피난하지 않더라도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일정 폭원 이상의 도로 등 완충기능을 가진 오픈스페이스를 충분하게 확보한다.

□ (방재-T2-S1) 주요하천 및 지천의 광역적 관리를 위한 수방재지침의 수립

5.5.19 하천수의 도시지역 범람을 방지하기 위해 하천의 제방정비사업 및 하천유역정비사업, 상류측의 댐과 저수지의 방류조절, 홍수시 소하천의 유로변경등을 고려한 대책을 수립한다.

5.5.20 도시지역 배수체계의 역류방지를 위해 도시방재시설 및 우수유출 저감시설의 지정기준과 설계기준을 재검토하고, 소하천 홍수조절을 위한 개발사업으로서의 저류(貯溜) 네트워크 체계와 재해위험지구 등에서의 도시하수체계에 대한 강제배수체계를 구축한다.

□ (방재-T2-S2) 친환경적 우수관리시스템의 도입

5.5.21 도시화예정용지 개발시 종전의 물함유 기능을 유지하고 집중호우때 발생가능한 우수유출량을 감소시켜 도시관거 및 하천에 미치는 부하를 최소화하며, 개발로 인한 환경파괴의 문제를 극소화시킬 수 있도록 잔디도랑, 투수구덩이, 투수·저류연못, 투수구덩이·자갈층 조합시설, 투수조 등 친환경적 우수관리 시스템을 적극 도입한다.

5.5.22 친환경적 우수관리시스템 도입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상에 구체적인 지침 및 규제내용을 제시하고,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에 친환경적인 우수관리 시스템을 도시계획시설로 포함한다.

5.5.23 도시개발에 따른 불투수층 증가로 인한 우수유출량 증대 및 침투유출량 증대 등 수해위험성에 대비하기 위하여 광역저류시설, 침투시설 등 우수유출 저감시설을 확충한다.

5.6 환경보전

가. 현황 및 문제점

1) 대기질

□ 대기오염현상의 광역화 가속

5.6.1 서울 도심부 및 서해안 공단밀집지역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지형적, 기상적 특성에 의해 수도권 동부까지 광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5.6.2 수도권 대기환경개선특별대책지역에서는 자체오염에 비하여 주변지역으로 부터 오염물질 유출입에 따른 오염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지역간 상호협의를 통한 대기질 개선이 중요해지고 있다.

□ 수송부문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증대등 선진국형 대기오염의 심화

5.6.3 2000년 현재 수도권 전체의 오염물질 배출량은 101만 7천 톤으로, 이 중 경기도에서의 배출량이 50.3%에 이른다.

5.6.4 수송부문에 해당되는 도로이동오염원 및 비도로 이동오염원 배출 오염물질이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있고, 난방에 의한 아황산가스 오염이 줄어드는 대신 미세먼지, 이산화질소 등의 자동차공해형 대기오염 농도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2) 수질

□ 한강본류 수질오염의 악화

5.6.5 한강수계인 탄천, 중랑천, 안양천 등 주요지천의 수질은 꾸준히 개선되는 추세이나, 한강본류의 오염도는 여전히 높은 상태에 있다.

5.6.6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위락시설 등 배출시설 증가와 이에 대한 오·폐수처리시설 미흡으로 인해 팔당호의 수질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 하수관거 정비미흡등으로 한강유역의 수질관리에 어려움

5.6.7 2000년 현재 한강유역권의 하수보급율은 87.7%로 4대강 유역중 가장 높은 보급율을 보이고 있으나, 하수처리보급율 및 하수관거보급율 등에 있어 서울·인천·경기도 간 격차가 커서 효율적인 수질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5.6.8 환경기초시설의 입지에 있어 지자체간 광역적 연계 및 상호 협조가 미흡하여 수질관리에 낭비적인 요소와 비효율성이 내재하고 있다.

□ 무계획적 개발과 비점오염원 관리대책의 미비로 수질오염부하의 가중

5.6.9 하수도정비 및 하수처리장의 설치·가동에 앞서 주택단지 등의 개발이 이루어져 인근 도시하천의 수질오염이 심화되고 있다.

5.6.10 준농림지역의 무분별한 개발로 경안천, 남한강 유역의 수질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5.6.11 도시유출수, 농경지의 배수, 축산폐수 등 비점오염원의 관리대책 소홀로 팔당댐 중상류 및 소하천의 수질오염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 연안수질오염 및 환경여건 악화

5.6.12 한강·임진강을 통해 유입하는 오염물질과 서해안 공단밀집지역과 시화호 등을 통해 직접 유입하는 오염물질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5.6.13 인천항과 평택항 등을 통한 물류증가 및 연안개발 수요증가로 해양오염과 항만 주변 연안의 수질이 악화될 우려가 크다.

3) 자연환경

□ 산림·녹지의 파괴

5.6.14 수도권 서부지역의 서울-인천간은 시가지가 연담화되고, 산림이 점과 선적 형태로 남아있어 녹지네트워크가 단절될 우려가 있다.

5.6.15 용인, 수지 등 수도권 남부지역은 대규모 택지개발사업과 산발적으로 행해지는 소규모 개발행위로 산림생태계가 훼손되고 있다.

5.6.16 수도권 동부지역도 도로확장 개설 및 전원주택단지등의 소규모 개발행위의 난립으로 산림녹지가 훼손되고 있다.

□ 생태적으로 우수한 습지생태계 관리체계 미비

5.6.17 한강하류, 임진강 유역, 경안천 일부, 남한강 지천 등에 분포하는 생태적 가치가 높은 습지들이 경작, 택지개발, 도로개설, 하천정비등에 의해 소실되었거나 훼손되어 가고 있다.

5.6.18 난개발로 인한 하천수맥 차단에 의해 생태유지용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습·초지 파괴로 우수저류 효과도 저감되고 있다.

□ 간척·매립으로 인한 갯벌생태계 파괴

5.6.19 서해안에서의 대규모 간척사업 및 매립지 조성 등의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1987년 2,815.4km²이던 갯벌면적이 1998년 2,393.0km²으로 422.4km²나 감소하였다.

5.6.20 미세부유물질 증가로 저서생물이 폐사하고, 철새도래지 파괴로 섭금류가 감소하며, 갯벌 고유의 자정능력이 감소하여 연안수질 악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 야생동식물 감소

5.6.21 도로, 택지 등 개발면적 증가로 인해 야생동식물이 감소되고, 단절 고립된 녹지들이 증가함에 따라 고차 생물들의 활동반경이 축소되고 종감소가 초래되고 있다.

나. 핵심과제

☐ 대기질

(환경-대기질-T1) 대기질 관리의 광역화 및 체계화

(환경-대기질-T2) 지역별 특성에 맞는 대기관리체계 구축

(환경-대기질-T3) 이동오염원 관리대책 강화

☐ 수질

(환경-수질-T1) 유역별 수질개선종합대책 수립

(환경-수질-T2) 하천환경관리 및 지역 소하천 수질개선

(환경-수질-T3) 연안수질관리 및 해양오염 관리여건 개선

☐ 자연환경

(환경-자연환경-T1) 자연생태계의 종합적 관리

(환경-자연환경-T2) 핵심보전지역 설정 및 보전

(환경-자연환경-T3) 단절·훼손된 생태계 복원

(환경-자연환경-T4) 친자연적인 생활공간의 창출 및 도시개발

다. 전략 및 실천계획

1) 대기질

☐ (환경-대기질-T1-S1) 광역적 대기관리체계의 구축

5.6.22 광역적 대기이동에 의한 오존오염의 관리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 특별정책 등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광역환경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중앙 및 광역정부가 이를 적극 지원한다.

5.6.23 광역화되고 있는 대기오염문제에 사전예방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각종 측정망 자료, 지자체별 수집자료, 연구기관의 환경정보자료, 기상·에너지이용·교통량·토지이용 관련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 분석하는 대기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공동연구를 활성화하고 광역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한다.

□ (환경-대기질-T1-S2) 토지이용·교통계획이 연계된 종합적 대기관리대책 수립

5.6.24 도시의 대기질은 도시공간구조, 녹지의 양 및 분포 등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광역적 차원의 대기흐름과 대기관리방안을 조사·연구하여 각 시·군의 토지이용계획, 녹지계획, 교통계획수립에 지침을 제시한다.

5.6.25 바람의 통로가 되는 도시 내 하천, 녹지, 계곡 및 오픈스페이스 등을 보호, 복원하거나 녹지축을 형성하여 대기정화 기능을 강화하고, 주요 지역의 건물배치방향, 건물 높이·간격에 풍향과 풍속을 반영한다. 신도시개발시에도 대기질 상태와 장래 도시성장을 고려하여 지역의 환경적 특성에 부합하는 다양한 친환경적 도시개발을 유도한다.

5.6.26 경작지와 녹지는 주변 대기와 여러 종류의 물질교환을 통해 대기오염물질을 흡수하여 대기오염도를 낮추고, 국지적 기상조건을 변화시켜 풍속변동 및 기온하강을 통해 대기순환을 촉진하므로, 녹지계획수립시 대기정화기능을 활용하기 위한 도시중심부의 숲·공원 조성 및 경작지 보전을 도모한다.

5.6.27 도시지역내 미개발지 및 이전적지의 개발과 도심부 재개발시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하여 공원이나 녹지대를 조성한다.

5.6.28 대기오염에 강한 수목을 가로수로 식재하며, 간선도로 접도구역이나 공단과 주거단지, 농경지, 임야 사이에도 대기오염과 소음완화를 위한 완충녹지대를 조성한다.

□ (환경-대기질-T2-S1) 지역대기환경기준의 설정

5.6.29 이미 설정한 서울, 인천 외에, 경기도도 지역에 따른 차별화된 대기환경기준을 설정하되, 광역적 차원의 대기질 관리를 위한 협의체제를 구축하고 차등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제정한다.

□ (환경-대기질-T2-S2) 대기자동측정망의 확충

5.6.30 정확한 대기상태의 파악과 대기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대기오염도를 상시 측정할 수 있는 대기자동측정망을 확충하고 도시 기상관측망을 신설한다.

5.6.31 인구규모 및 오염도와 측정목적에 따라 측정소가 추가로 필요한 지역을 선정하되, 주요 대기오염원인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소규모 측정소를 간선 도로변에 확대 설치하도록 한다.

□ (환경-대기질-T2-S3) 대규모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처리 및 단속 강화

5.6.32 지역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의거하여 점오염원에 의한 대기오염물질의 저감을 유도한다.

5.6.33 저황유 등 청정연료 및 지역난방의 보급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중소업체가 청정생산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기술 및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5.6.34 산업단지의 유해물질 배출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실시하여 장기적인 차원에서 대기 위해성에 대한 기본자료를 축적한다.

5.6.35 산업단지의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 배출시설의 관리 및 VOCs 규제대상시설이 아닌 악취배출시설과 폐기물처리시설등에 대한 현황조사를 통해 배출목록을 작성하고, 악취물질의 생성 및 이동경로 분석에 대한 연구를 통해 악취예보시스템을 구축한다.

□ (환경-대기질-T3-S1) 자동차공해 관리대책의 강화

5.6.36 불합리한 도로망 개선, 도심우회도로 건설 등으로 도시교통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연료소비를 저감한다.

5.6.37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을 촉진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5.6.38 자동차에 의한 수도권 대기환경 영향비중을 감안하여 장기적으로 신규제작차 및 운행자동차에 대한 별도의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마련을 검토한다.

2) 수질

□ (환경-수질-T1-S1) 유역 차원에서의 수질관리 시행

5.6.39 광역적으로 수자원을 관리하고 공급하기 위해 토지이용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유역단위별로 조사·연구하여 정책방안을 강구한다.

5.6.40 단위 도시별 계획을 유역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점오염원 관리와 비점오염원 관리를 연계한 종합관리를 추진한다.

5.6.41 지자체 단위의 오염총량제를 수도권 전역의 시·군으로 확대하여 도시개발 규모와 수질보전간의 연계를 강화한다.

5.6.42 한강수계 주변의 도시적 토지이용에 대해서는 오염배출허용총량과 연계하여 선환경기초시설 검토, 후 개발계획의 관리체제를 구축한다.

5.6.43 수계별로 개별 건축주의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기술지원을 실시하여 상수원 수질오염을 예방한다.

□ (환경-수질-T2-S1) 친환경적 하천관리의 강화

5.6.44 자연생태계 보존위주로 하천을 관리하고, 물의 자정작용이 충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천의 생물서식환경을 개선해간다.

5.6.45 대하천의 수변지역은 시·군단위의 계획수립을 통해 수변에서 최소한 30m까지는 녹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한다.

□ (환경-수질-T2-S2) 소하천의 기능 재활대책 강화

5.6.46 도시내 소하천의 수질 유지를 위하여 유입지천 상류에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신축하거나 자연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소규모 산화지를 건설한다.

5.6.47 기개발된 고수부지의 불투수층은 투수층으로 전환하고, 소하천의 직강화를 금지하며, 하천변 주차장등의 불투수시설 설치를 억제한다.

5.6.48 한강본류로 유입되는 지천의 수질개선을 위한 수질정화사업을 추진하고, 저수로와 수해취약 제방의 정비 및 주변환경 정비를 통해 하천변을 친수공간으로 조성한다.

□ (환경-수질-T3-S1) 연안 및 항만수질 개선

5.6.49 한강·임진강으로의 오염유입에 대한 기초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기 위하여 유입부에 연안수질 자동측정감시망을 설치 운영한다.

5.6.50 한강과 임진강을 통해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저감 및 처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비용분담 및 환경개선계획을 수립한다.

5.6.51 항만내 수질오염을 저감하기 위하여 항만환경개선계획을 수립하고, 해양으로 직접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한 대책을 해당 지자체의 수질개선대책과 연계하여 추진한다.

□ (환경-수질-T3-S2) 해양오염 관리여건 개선

5.6.52 선박의 입출항과 정박·하역과정에서 오염물질이나 부산물이 해양으로 유입하지 않도록 선박 및 하역주체의 환경의식고양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실시한다.

5.6.53 선박의 안전한 입출항을 저해하는 요인을 해소하는 한편, 선박사고 등으로 인한 해양의 유류오염을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해양환경 관리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한다.

3) 자연환경

□ (환경-자연환경-T1-S1) 생태계보전을 위한 기초조사의 시행

5.6.54 동·식물상 구성등 생태계 관련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생태계 변화를 관찰·평가하기 위한 생태변화관찰체계를 구축하여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감소·멸종위기에 처한 종들의 보호를 위한 토지이용상의 대책을 도시계획과 연계하여 마련한다.

5.6.55 생물종 멸종 및 감소를 저감하기 위한 조사·연구를 실시한다.

5.6.56 환경부에서 매 10년마다 실시하는 자연생태계 기초조사 이외에 광역지자체별 자체조사를 실시하고 조사주체별 역할분담을 위한 통합관리지침을 마련한다.

□ (환경-자연환경-T1-S2)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생태계보전을 위한 조사자료의 정보화

5.6.57 객관적 기준에 의해 비교적 단시간 내에 자연환경에 대한 정보를 구축할 수 있는 효율적 조사 및 정보관리방법으로 지리정보시스템(GIS)과 원격탐사기법(Remote Sensing)을 활용하되, 다양한 조사자료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를 위해 조사결과의 지도화지침을 마련하고, 호환성이 높은 기법으로 자료를 정리한다.

□ (환경-자연환경-T2-S1)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을 핵심보전지역으로 지정

5.6.58 광역도시계획상의 광역녹지축 및 녹지거점, 비무장지대, 서해안과 한강 및 임진강 수변지역, 임진강 유역의 습지생태계, 장단반도, 초평도 등을 생태적·경관적으로 중요한 핵심보전지역으로 검토하여 구체적 관리방안을 강구한다.

5.6.59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 등과 연계하여 핵심보전지역을 장기적으로 국공유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환경-자연환경-T2-S2) 서해안 갯벌의 적극적 보전

5.6.60 간척 및 매립으로 파괴되고 있는 서해안 갯벌을 보호하기 위해 간척사업등이 갯벌 생태계에 미친 영향을 조사, 분석한다.

5.6.61 갯벌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해 지역주민, 지자체, 관련 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생태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 (환경-자연환경-T2-S3) 습지·토양의 종합적 보전체계 구축

5.6.62 습지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습지환경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습지관련된 개발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엄격하게 시행하고, 습지를 경제적으로 보상하거나 매입하는 생태습지조성사업을 확대한다.

5.6.63 토양오염 실태를 조사하여 토양환경 보전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우려기준 초과지역에 대해서는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 (환경-자연환경-T2-S4) 접경지역의 계획적 관리체계 구축

5.6.64 접경지역의 자연, 역사·문화, 관광자원을 남북한이 공동으로 조사하여 GIS자료를 구축하도록 남북협력을 추진한다.

5.6.65 접경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각 개발단위별 위치와 개발행위의 목적을 각 시·군이 모니터링하여 정보를 수집하며, 접경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한다.

5.6.66 접경지역내 생태시범도시를 조성하여 보전과 개발의 조화 사례로 홍보하고, 접경지역내 소단위별 생물공간 보존과 훼손지역을 복원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 (환경-자연환경-T3-S1) 녹지축 단절지역의 녹지보전 및 조성

5.6.67 인천·부천·광명·안산 등 수도권 서부지역은 도시내 녹지면적이 적고 녹지 고립화가 심하게 진행중인 지역으로 시·군단위의 계획수립에서 녹지를 최대한 보전하는 동시에 새로운 녹지를 적극적으로 조성하도록 한다.

□ (환경-자연환경-T3-S2) 단절·훼손된 생태계의 복원기술개발과 정비

5.6.68 불가피하게 광역녹지축을 단절하는 도로를 개설할 때 생물종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친환경적 도로공사기법의 사용을 의무화한다.

5.6.69 기존의 단절구역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단절정도를 구분하여 복원계획을 마련하며, 하천변식생, 인공수림지, 생태연결통로 등의 조성을 통해 복원·정비한다.

□ (환경-자연환경-T4-S1) 도시화예정용지 개발시 친환경적 개발기법의 적극적 적용

5.6.70 도시기본계획 등 각종 도시관련계획을 친환경적 개발원칙에 따라 수립하며, 모든 개발사업은 환경보전계획에 합리적으로 준할 때만 허가한다.

5.6.71 도시개발로 부터 수립, 하천, 식생우수지역 등의 보존과 야생동식물 서식처 보호를 위해 계획단계부터 환경전문가가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전략환경평가(SEA)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5.6.72 개발계획 수립시 사업자·지자체·환경보호자·시민단체 등이 모두 참여하여 지역의 환경특성에 가장 적합한 개발방안을 도출하도록 한다.

5.6.73 하수·폐기물 등의 위생적 처리를 위한 도시위생처리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충분한 공원녹지 확보, 역사·문화유적지 보호, 경관우수지역이나 습지 등을 최대한 보전할 수 있도록 생태도시개념에 입각한 도시개발방식을 적극 활용한다.

□ (환경-자연환경-T4-S2) 생물다양성을 증진할 수 있는 도시관리의 강화

5.6.74 비오톱 현황조사 결과를 도면화하여 경관계획, 녹지계획, 도시계획 등에 생태적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5.6.75 녹도, 가로수등 소규모 비오톱을 조사하여 이를 공원 및 기존 녹지대와 연결하고, 단절된 부분은 에코브리지 등을 설치하여 생물다양성을 증대시킨다.

5.6.76 도시외부의 광역녹지축과 도시내 녹지를 연결하는 광역적인 녹지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하여 도시 시가지 내부로의 녹지유입계획(finger-plan)을 수립한다.

□ (환경-자연환경-T4-S3) 에너지 절약 및 순환을 고려한 개발방식 도입

5.6.77 건축물 녹화기법을 적극 도입하고, 건물 설계시 에너지등급을 적용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정책을 시행한다.

5.6.78 친환경적 대체에너지인 풍력, 태양력, 지력 등 자연형 에너지자원을 실용화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관련시설의 보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환경-자연환경-T4-S4) 인공하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전환

5.6.79 홍수범람 방지 등 특별한 목적이외에는 인공적으로 조성된 하천변을 자연재료를 사용한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한다.

5.6.80 제방이나 호안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기술적 제한이 있을 경우, 그물망·넝쿨·초지 등을 이용하여 하천변에 식생대를 조성한다.

□ (환경-자연환경-T4-S5) 농경지의 비오톱 및 유수지(遊水池) 기능 강화

5.6.81 생물서식공간으로서의 농지의 생태적 가치와 집중호우시의 표면유출수 조절기능을 조사·연구하여 이를 토대로 택지 등 도시개발로 인한 농지잠식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6. 개발제한구역 조정방안

6.1 개발제한구역 조정의 기본방향

□ 기본방향

6.1.1 개발제한구역으로 계속 보전할 가치가 낮은 지역은 부분적으로 산업용지 등 도시용지로 해제·활용을 허용하되, 지가상승이나 환경훼손 등의 부작용은 방지한다.

6.1.2 지정·해제대상지의 선정과 제척, 그 경계선의 설정 등 개발제한구역의 지정·해제관련 기준 등 정부의 관련지침에 따라 추진한다.

□ 해제가능규모

6.1.3 해제 가능규모는 기존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해제예정총량 외에 기존 해제예정 총량의 30%에 상당하는 면적과 국정과제추진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면적 범위 내에 설정한다.

6.1.4 우선 해제된 집단취락지역의 정비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면적에 대하여는 총량과 관계없이 관례지침에 따라 별도로 인정한다. 해제가능총량 중 현재까지 활용하지 않은 면적은 전환 해제한다.

□ 해제가능지역

6.1.5 토지 특성상 보존가치가 낮은 환경평가결과 3~5등급지로서, 그 면적 규모가 20만㎡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우량농지는 농림수산물부와 협의하여 포함하도록 한다.

6.1.6 지역여건이 기존 시가지·공단·항만 등에 인접하고 간선도로·철도 등의 주요 기반시설이 구비되어 대규모 기반시설 설치소요가 적은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한다.

□ 해제절차

6.1.7 여건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광역도시계획에서는 별도의 조정대상지역 설정없이 시·도별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만 배분·제시하되 도 지역내에서는 시·군 또는 일정 권역을 설정하여 배분·제시하도록 한다. 다만, 국가계획(서민주택공급 건설계획 등)과 관련된 경우에는 권역전체에 대한 해제가능총량만 제시하도록 한다.

6.1.8 최초로 수립된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조정가능지역 중 해제되지 않는 지역의 목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제시가 가능하다.

6.1.9 구체적인 해제대상지에 관한 사항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단계에서 제시하며, 이때 도시성장 및 환경보전 측면에서 보전이 필요한지 여부, 개발수요가 명확하고 중요·시급한 사업인지 여부, 도심 재개발이나 기타 용지로 개발 수요 충족이 불가능한지 등을 제시한다.

6.1.10 개발수요 등을 감안하여 광역도시계획에서 제시한 목표연도내 실질적 개발·활용이 가능한 지역 중 도시관리계획 입안일 기준으로 향후 3년내 착공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 개발방향

6.1.11 해제되는 지역은 주변 자연환경에 조화되도록 친환경적으로 개발하고, 개발로 인한 혜택은 주로 서민 및 중소기업들에게 돌아가도록 유도한다.

6.1.12 서민을 위한 보금자리 주택단지는 생태친화적(Eco-friendly) 개발, 그린홈 등으로 이루어진 에너지 절감형 저탄소 녹색 주거단지로 조성한다.

6.1.13 연구단지에는 신재생 에너지 등 **Green-Tech** 관련 연구시설을 우선적으로 유치하도록 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

6.1.14 산업단지는 저공해 단지로 개발하되, 중소기업 전용단지를 조성하여 중소기업들도 저렴한 임대료 등 적은 부담으로 입주토록 유도한다.

6.2 시도별 및 국책사업 해제총량 설정 및 활용방안

□ 해제가능총량 종합

<표 7> 해제가능총량의 종합

구 분	계(km²)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국가
기존 해제계획총량	124.507	13.280	6.997	104.230	(46.804)
해제 잔여면적	26.520	1.183	1.336	24.001	(0.796)
추가 해제가능총량	114.496	1.328	2.099	31.269	79.8
향후 해제가능총량	141.016	2.511	3.435	55.270	79.8

* 해제 잔여물량은 '09.3 기준

* 국가부문 ()는 기존 2020수도권광역도시계획에 국책사업으로 반영된 총량, 물량임

<표 8> 경기도 권역별 물량배분(안)

(단위 : km²)

권역구분	해당시군	기존해제 계획총량	잔여면적	추가해제 가능총량	향후해제 가능총량
남부권역	수원, 성남, 안양, 과천, 군포, 의왕, 용인	20.692	5.862	1.994~2.992	7.856~8.854
서남부권역	광명, 화성, 시흥, 안산, 부천	31.473	9.940	10.233~15.349	20.172~25.289
서북부권역	고양, 김포	15.162	1.107	3.241~4.862	4.348~6.968
동남부권역	하남, 광주, 양평	10.965	0.792	3.339~5.008	4.131~5.801
동북부권역	남양주, 의정부, 양주, 구리	25.938	6.301	6.208~9.312	12.509~15.613

<표 9> 서민주택 권역별 배분계획(안)

구 분	중부	서부·북부	동부·남부
면적(km ²)	40~60	20~40	20 이내

* 권역별 배분은 향후 개발시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 권역구분은 2003~2012 주택종합계획의 생활권역 구분에 따름

구 분	시 · 군
중부	서울특별시, 고양시, 의정부시, 구리시, 하남시, 성남시, 광명시, 과천시, 남양주시
서부·북부	인천광역시, 부천시, 김포시, 시흥시, 파주시, 연천군, 동두천시, 양주시, 포천시
동부·남부	가평군, 양평군, 광주시, 이천시, 여주군, 수원시, 안양시, 의왕시, 군포시, 안산시, 용인시, 오산시, 화성시, 평택시, 안성시

□ 서울특별시의 개발제한구역 활용방안

6.2.1 서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 및 물류공간으로 활용한다. 특히 서울의 신성장 동력으로 서울의 전략산업과 비교우위산업을 육성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한다.

6.2.2 기성 시가지의 도시재생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완충공간으로 활용한다. 기성 시가지내 부적격 기능을 이전하기 위한 대체부지로 활용하고, 이전된 부지는 도시재생 촉진을 위한 용도로 복합개발 추진한다.

□ 인천광역시의 개발제한구역 활용방안

6.2.3 시가지 중심지 체계개편에 따른 도심기능강화, 지역적 특성에 맞는 용도지역 지정 및 직주근접형 토지이용 등의 계획적 개발 유도에 활용한다. 한편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신창조산업육성 및 여가·관광인프라 구축 등 계획적인 지역개발을 도모한다.

6.2.4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관련 시설부지로 활용한다. 주요 경기장 및 부대시설은 도시가 지향하는 발전 축에 배치하여 중심지가 활성화되도록 하고 주거지역 인접 또는 연접지역에 배치하여 대회이후 활용도를 제고한다.

□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활용방안

6.2.5 주거·교육·문화·레저·산업·의료·공공체육시설 등 자족기능을 갖춘 친환경 녹색성장 복합단지로 조성한다. 서민주택단지와 연계하여 주거·산업·문화 등이 어우러진 복합개발 추진하며, 해제지역 개발시 불법용도변경된 시설물, 물류창고, 소규모 공장 등을 계획입지로 유도하여 기능을 흡수한다.

6.2.6 그동안 시가화가 많이 진행된 경부축 개발을 지양하고 거점별 새로운 성장축 개발을 유도한다. 각 권역별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한 거점형 자족도시를 조성하여 서울중심의 공간구조의 다핵화를 유도한다.

6.2.7 개발제한구역이 과도한 일부 도시는 도시여건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능을 배치한다.

□ 국책사업(서민주택 등)의 개발제한구역 활용방안

6.2.8 지구지정 이전에 주민공람 및 중앙도시계획위 심의 등을 거쳐 합리적으로 계획·개발을 유도한다. 대규모 개발의 경우에는 필요시 국무회의 등으로 적정성을 확보한다.

6.2.9 개발지구의 밀도·층고 등 토지이용을 효율적으로 계획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면적 소요를 최소화한다. 직주근접 실현 및 도시기능 활성화 등을 위해 도시지원시설용지의 충분한 확보 등에 따라 택지 원단위를 약 200㎡/호 수준으로 설정한다 {용적률 190~220%수준, 평균주택면적 약 100㎡(보급자리주택 평균 약 83㎡)수준}

<표 10> 서민주택 개발용지 용도별 면적 구성비 예시

구분	계	주택 용지	상업 업무	공공청사 학교	도로	공원 녹지	도시 지원	기타 (하천 등)
면적(km ²)	80	24	4	6	14	16	12	4
구성비	100%	30%	5%	7%	18%	20%	15%	5%

* 용적률, 평균주택면적, 용도별 면적 구성비 등은 지구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 수도권 GB해제 국민임대단지(38개지구 평균) 원단위 : 169m²/호

* 수도권 2기신도시(13개 평균) 원단위 : 220m²/호

6.2.10 개발지구 이외의 기존 물류·산업 기능을 수용하는 등 복합개발을 도모하고 필요시 주변의 훼손된 지역을 녹지·공원 등으로 복구한다.

6.2.11 개발되는 지역은 탄소저감계획, 그린홈 등을 통해 기존 국민임대단지와 차별화된 친환경 보금자리주택지구를 건설한다.

6.2.12 경인운하 김포터미널 시설 중 마리나 및 향만친수시설과 물류단지 시설로 1km²를 활용한다.

7. 집행 및 관리

7.1 광역도시계획 집행체제

가. 광역행정협조체제와 역할분담

□ 기초자치단체

7.1.1 특별법·촉진법에 근거하여 국가·광역지자체·공기업 등이 시행하는 사업을 제외한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도시개발은 대부분 시장·군수가 입안하여 추진하므로 이러한 사업들 중 인근 시·군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타 시·군과 사전에 협의 조정한다.

7.1.2 도로 등의 광역시설과 인접 시·군의 학교 등 공공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동시에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협의하고 조정될 수 있도록 개발사업에 대한 기반시설과의 동시성 검토제도를 도입한다. 동시성 검토제도는 해당 시·군의 개발에 따른 주변 시·군으로의 영향범위를 설정하여 시·군별 의견을 반영하는 형태로 운영한다.

□ 광역자치단체

7.1.3 광역자치단체는 동시성 검토 기준을 기초지자체 및 인근 광역지자체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이를 기초자치단체가 성실히 이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한다.

7.1.4 동시성 검토기준을 성실히 이행하지 못하는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광역자치단체가 운용하고 있는 보조금 지급에 불이익을 부과한다.

□ 중앙정부

7.1.5 중앙정부는 광역도시계획의 집행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기구 설치를 위하여 행정재정측면의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7.1.6 중앙정부는 광역도시계획과의 부합성을 토대로 도시기본계획 등의 시·군별 종합계획 및 부문별계획과 택지개발계획 등 개별 개발사업계획을 승인한다.

나. 광역도시계획기구 설치

□ 단기안 : 광역도시계획협의회 설치

7.1.7 금번 광역도시계획은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포함하였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수립하였지만, 광역도시계획의 집행과 관리에 있어서는 계획

수립의 근본 취지에 걸맞게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조되어야 한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수도권 행정협의회 산하에 광역도시계획의 집행과 관리 및 집행성과의 평가 그리고 계획변경여부의 검토를 위해 광역도시계획협의회를 설치한다. 광역도시계획협의회는 지방정부의 실무대표자와 함께, 전문가로 구성한다.

7.1.8 두 개의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광역도시계획제도의 수립과 집행의 경험 이 없는 현실과 중앙정부의 조정 및 지원이 없으면 계획의 실효성이 약화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광역도시계획협의회에 중앙정부의 실무대표자도 포함하도록 하여 중앙 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과 재원을 활용한다.

7.1.9 광역도시계획협의회에서는 광역정부간 합의에 의하여 수립된 광역도시계획의 집행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존의 국고보조금제도를 개선하여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한 지방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우선시행 및 국고보조율 인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 장기안 : 수도권 성장관리협의회 설립

7.1.10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서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조 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현재의 수도권 행정협의회 기능을 대폭 강화한 수도권 성장관리협의회를 구성하고, 단기안으로 제시된 수도권 광역도시계획협회의 기능을 담당하도록 한다.

7.1.11 수도권 성장관리협의회 내에는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전담하는 수도권성장관리 위원회를 설치하고, 여기에 지방정부가 중앙에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필수적으로 경유하도록 하여 중앙정부의 보조금 배분 결정에 참고하도록 한다.

7.2 광역도시계획의 관리

□ 광역도시계획의 집행

7.2.1 광역도시계획에 제시하는 정책사항은 원칙적으로 시·군의 도시기본계획수립과 도시계획 입안 및 개발사업 등을 유도하거나 조정하여 추진하며, 도시기본계획 자문 및 도시계획 결정과정을 통하여 조정권한을 행사한다.

7.2.2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도시계획 변경심의시 광역도시계획을 기준으로 검토한다.

7.2.3 시·군간 이견 조정이 어렵거나 광역적 현안사안으로서 중요한 정책사항인 경우에는 광역지자체가 직접 도시계획을 입안하거나 사업을 집행한다.

□ 정책사항의 평가 및 관리

7.2.4 시·도가 참여하고 광역도시계획기구가 중심이 되어 5년 단위로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된 정책들의 집행사항을 평가하며, 이를 기반으로 5년 단위의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7.2.5 광역도시계획기구내에 집행과 관련된 구체적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운용한다.

□ 계획수정 및 변경체제

7.2.6 광역도시권의 급격한 여건변화로 인하여 계획을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광역도시계획을 재수립할 수 있다.

7.2.7 광역도시계획기구가 중심이 되어 광역도시계획을 일부 보완하거나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해당 전략 및 정책사항을 취합한 후 광역도시계획 변경(안)을 마련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변경한다.

7.2.8 국토해양부장관은 이해관계가 큰 시·군이 있을 경우 시도지사 및 해당 시군의 시장, 군수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후 변경을 승인한다.

7.2.9 광역도시계획을 전면적으로 재수립할 경우 법률이 규정하는 광역도시계획 수립 절차를 거쳐 국토해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계획을 확정한다.

변경안 신·구 대비표

쪽	당초(2007.7)	변경(2009.4)	비고
3~5	<신설>	<p>1.3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의 배경</p> <p>□ 수도권 지역경제활성화</p> <p>1.3.1 「개발제한구역조정 및 관리계획」(2008.9)에 의해, 수도권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중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을 해제하여 산업·물류단지를 조성기로 결정하였다.</p> <p>1.3.2 국정과제인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IT, BT, ET 등의 성장동력산업, R&D 및 의료산업의 거점을 육성하여 경제위기 이후 미래의 기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산업거점과 연계된 녹색형 주거지 조성, 녹색교통망 확충을 통해 정부의 재정지출 효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p> <p>□ 서민 주거복지 확대</p> <p>1.3.3 서민들의 자가보유 촉진을 위해서는 수요가 많은 곳에 저렴한 주택을 많이 공급할 필요가 있다. 수요가 많은 도심지는 높은 분양가로 서민들의 거주가 어렵고, 민간이 주로 추진하여 안정적 공급에도 애로가 있으며 도시 외곽의 신도시 개발은 직주분리, 교통수요 유발, 조성비용과다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p> <p>1.3.4 도시내 공급만으로는 한계가 있는</p>	계획 변경 사유 명기

		<p>서민주택을 도심 접근성이 우수하면서도 보전가치가 높지 않은 개발제한구역 중 일부를 해제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p> <p>□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관리 개선</p> <p>1.3.5 개발제한구역 중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은 각종 불법 시설물이 난립하여 오히려 녹지를 훼손하고 도시환경을 크게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훼손된 녹지를 복구·정비하여 시민의 친환경적 여가공간을 확충할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p> <p>1.3.6 개발제한구역으로 관리할 가치가 낮은 지역을 일부 활용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해제를 허용하는 한편 해제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p> <p>□ 정부의 개정 광역도시계획 수립 지침 (2008.11.3) 및 시책에 부응하여 기존의 광역도시계획을 변경</p>	
7	<신설>	<p>1.4.4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은 「개발제한구역조정 및 관리계획」(2008.9)을 따라 개발제한구역 추가해제총량을 설정하고 그 활용방안을 제시하며, 이에 따라 영향을 받는 광역계획권의 목표와 전략, 공간구조 및 부문별계획의 변경내용을 포함한다.</p>	변경계획의 범위명기
13	<신설>	<p>2.2.19 개발제한구역의 추가해제방침이 결정됨에 따라 수도권 산업경쟁력 강화, 서민주택공급 확대, 주민생활 편의성 제고 등을 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추가적인 토지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p>	
14	<신설>	<p>2.2.28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개발로 인해 기존 기반시설 용량의 부족이 발생</p>	

		할 수 있고, 녹지잠식 및 녹지축 훼손이 발생하여 환경수준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15 <표1>	<p><기획요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의 탈국경화로 도시권경쟁력의 비중 증가 • 남북교류 확대 및 동북아 경제권의 성장 • 산업구조개편과 지식기반산업 시대의 도래 • 광역화, 정보화, 지방화에 따른 삶의 다양성 추구 • 쾌적한 환경, 지속가능한 발전 등 삶의 질에 대한 인식 제고 • 수도권 국제경쟁력 제고 전략 추진 <p><신설></p> <p><위협요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 집중억제정책의 지속으로 물적 개발잠재력 억압 • 용도지역제하의 경직된 토지이용관리제도를 전제로 한 광역토지이용계획 • 개발제한구역 조정과 광역도시계획의 연계 • 지자체간 수평적 협력관계 구축의 미약 <p><신설></p>	<p><기획요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의 탈국경화로 도시권경쟁력의 비중 증가 • 남북교류 확대 및 동북아 경제권의 성장 • 산업구조개편과 지식기반산업 시대의 도래 • 광역화, 정보화, 지방화에 따른 삶의 다양성 추구 • 쾌적한 환경, 지속가능한 발전 등 삶의 질에 대한 인식 제고 • 수도권 국제경쟁력 제고 전략 추진 • 개발제한구역 조정 등 수도권 규제 합리화를 통해 신규 산업·물류용지 확보 <p><위협요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 집중억제정책의 지속으로 물적 개발잠재력 억압 • 용도지역제하의 경직된 토지이용관리제도를 전제로 한 광역토지이용계획 • 개발제한구역 조정과 광역도시계획의 연계 • 지자체간 수평적 협력관계 구축의 미약 • 개발제한구역 추가해제에 따른 기반시설 부담증가, 녹지훼손 등 우려 	개발제한구역 추가 조정에 따른 기획요인 및 위협요인 추가
16	2.3.5 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방안(1999.7)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와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 토지를 중심으로 한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조정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조정방안을 마련하고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3.5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방안」(1999.7)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와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을 조정·관리해 왔다. 금번 계획변경으로 인해 추가 해제되는 지역도 수도권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서민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새로이 마련된 「개발제한구역조정 및 관리계획」(2008.9)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조정·관리하여야 한다.	지침 개정 내용 반영
17	□ 자연환경보전과 친환경적 관리체계 구축	□ 자연환경보전과 녹색성장 지원체계 구축	현정부의 정책

	<p>2.3.8 환경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지역과 그 영향지역이 공간적으로 불일치하여 환경오염 및 훼손에 광역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광역적·종합적 차원의 환경관리 정책이 마련되어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p>	<p>2.3.8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IT, BT, ET 등의 차세대 성장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도시개발시에는 에너지절약형 공간구조, 그린홈 등의 방식이 적용된 녹색주거지 조성을 추진해야 한다.</p>	반영
18	<p>3.2.1 수도권 공간구조를 다핵공간구조로 하고, 지역별로 자족도시권을 형성한다.</p> <p>1) 서울 외곽에 거점도시를 육성하여 단핵집중의 수도권 공간구조를 다핵공간구조로 개편하고, 지역별 다핵화와 연계된 산업배치를 통하여 거점도시 중심의 자족생활권을 형성한다.</p> <p>2) 거점도시간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여 상호기능을 보완하고, 거점도시와 인접 배후지역간의 연계를 강화한다.</p> <p>3) 향후의 도시개발예정지역은 개발축과 교통축, 거점도시와 배후지역을 고려하여 개발규모 및 개발밀도를 설정하고, 간선교통시설 및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확충과 연계하여 ‘선계획, 후개발’ 원칙에 따라 개</p>	<p>3.2.1 선진국형 지식경제체제를 구축하여 수도권을 국가의 성장동력이자 동북아의 중심도시로 육성한다.</p> <p>1) 지식기반사업과 신재생에너지 및 관련 R&D 산업의 입지여건을 개선하고 국제비즈니스 기반을 확충하여 수도권을 저탄소 녹색성장의 거점으로 육성한다.</p> <p>2) 국토의 타지역과의 연계협력을 통하여 수도권 성장의 효과가 효율적으로 파급될 수 있는 상생발전체제를 구축한다.</p> <p>3) 동북아시아 국제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을 위해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육성을 통하여 수도권의 국제기능을 강화한다.</p> <p>3.2.2 수도권 공간구조를 다핵공간구조로 하고, 지역별로 자족도시권을 형성한다.</p> <p>1) 서울 외곽에 거점도시를 육성하여 단핵집중의 수도권 공간구조를 다핵공간구조로 개편하고, 지역별 다핵화와 연계된 산업배치를 통하여 거점도시 중심의 자족생활권을 형성한다.</p>	수도권의 기능 추가

	<p>발을 추진한다.</p> <p>4) 동북아시아 국제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을 위해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육성을 통하여 수도권의 국제기능을 강화한다.</p>	<p>2) 거점도시간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여 상호 기능을 보완하고, 거점도시와 인접 배후지역간의 연계를 강화한다.</p> <p>3) 향후의 도시개발예정지역은 개발축과 교통축, 거점도시와 배후지역을 고려하여 개발규모 및 개발밀도를 설정하고, 간선교통시설 및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확충과 연계하여 ‘선계획, 후개발’ 원칙에 따라 개발을 추진한다.</p>	
19	<p>3.2.2 공간구조구상과 도시성장관리를 고려하여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을 설정한다.</p> <p>1) 개발제한구역 조정은 개발제한구역 토지의 환경평가와 공간구조상의 개발축, 녹지축 여부 및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한 해당 도시의 도시발전 제약정도를 고려하여 조정한다.</p> <p>2) 서울의 외연적 팽창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 주변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은 집단취락을 위주로 추진한다.</p> <p>3)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의 도시개발을 계획적으로 관리한다.</p>	<p>3.2.3 공간구조구상과 도시성장관리를 고려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역을 설정한다.</p> <p>1) 개발제한구역 조정은 개발제한구역 토지의 환경평가와 공간구조상의 개발축, 녹지축 여부 및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한 해당 도시의 도시발전 제약정도를 고려하여 조정한다.</p> <p>2) 개발제한구역이 과도하게 지정되어 시대적 여건변화에 따른 적합한 도시기능 확보가 어려운 시·군은 개발제한구역 추가해제를 통해 도시내 자족기능 확보 및 공간구조 개선에 활용한다.</p> <p>3)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역의 도시개발을 계획적으로 관리한다.</p>	개발제한구역 조정원칙변경 반영
21	<p>4.1.2 서울지향의 택지개발을 지양하고, 서울과 주변 도시의 과밀·혼잡을 해소할 수 있는 광역적 토지이용을 유도하여야 한다.</p>	<p>4.1.2 기존의 경부축 중심의 개발을 지양하고 서·남부축, 동·북부축 등에 적절한 기능과 시설을 유치하여 다핵분산형 공간구조 실현하여야 한다.</p>	개발제한구역 추가조정내역 반영
21	<p><input type="checkbox"/>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조정</p>	<p><input type="checkbox"/> 개발제한구역 등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경쟁력 강화</p>	개발제한구역 추가

	<p>4.1.8 개발제한구역 조정 방안 설정에 공간구조의 개편방향을 반영하여야 한다.</p> <p>4.1.9 개발제한구역 조정 가능지역 토지에 대한 활용 방향 및 친환경적 개발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p>	<p>4.1.8 도시내의 재개발, 산업용지 구조조정, 한계토지의 효율적 활용 등을 통해 추가적인 도시용지수요에 우선적으로 대응하고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소요를 최소화하여야 한다.</p> <p>4.1.9 서민주택·산업·물류용지의 공급 확대를 위하여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p> <p>4.1.10 기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복구 및 친환경적 활용방안 마련하여야 한다.</p>	조정 원칙 반영
23	<p>4.2.9 남북방향으로 중부축(중부고속도로), 서울-김포-강화-해주축, 과천-의왕-천안축의 3개 보조축을 설정한다.</p>	<p>4.2.9 남북방향으로 포천-서울-세종(제2경부고속도로), 서울-김포-강화-해주축, 광명-수원-천안축의 3개 보조축을 설정한다.</p>	개발 축 변경
	<p>4.2.15 다핵화 추진과 경인축, 경수축상의 시가지 연담화 방지를 위한 녹지체계 형성을 전제로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을 검토하고, 서울의 외연적 확산방지를 위해 서울 중심 개발제한구역 내측경계선에서 2km 이내 지역은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의 설정을 제한한다.</p>	<p>4.2.15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역 검토 시 다핵화 추진과 경인축, 경수축상의 시가지 연담화 방지를 위한 녹지체계 형성을 전제로 하고, 도시 간의 연담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권역별 개발제한구역 최소 폭을 5km 이상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p>	개발 제한 구역 추가 조정 원칙 반영
24	<신설>	공간구조 보강 추가	
26	<신설>	<p>4.3.11 김포시는 한강과 서해를 잇는 경인운하를 활용 서울·인천·부천·고양·과주와 연계된 물류, 문화, 관광, 레저 기능을 유치하고 산재된 공장들의 계획입지 및 영상, 항공 산업 성장을 유도하되 하</p>	시군 별 개발 방향 추가

		천, 수변공간 등의 자연환경을 고려 친환경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한다.	
27	<신설>	4.3.16 시흥시를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지역중심도시로 육성하여 인근의 인천광역시, 안산시 및 화성시와 상호연계된 경기만 환경해권 친환경 해양녹색성장 거점으로 육성한다.	시군별 개발방향 추가
31	□ 자연환경 훼손 및 준농림지 난개발	□ 자연환경 훼손 및 관리지역 난개발	용어 변경
31	5.1.9 1990년대초 준농림지역 규제완화로 도시지역 외곽에 위치한 용인시, 광주시, 남양주시, 양주시, 고양시, 김포시, 화성시 등의 준농림지역에 아파트가 산발적으로 개발되고 공장이 무질서하게 입지하면서 공간구조 왜곡과 더불어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교통혼잡이 심화되었고, 도시지역 외곽 국도변에 음식점, 모텔 등이 난립하여 자연경관을 크게 훼손하였다.	5.1.9 1990년대초 준농림지역(현재의 관리지역) 규제완화로 도시지역 외곽에 위치한 용인시, 광주시, 남양주시, 양주시, 고양시, 김포시, 화성시 등의 준농림지역에 아파트가 산발적으로 개발되고 공장이 무질서하게 입지하면서 공간구조 왜곡과 더불어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교통혼잡이 심화되었고, 도시지역 외곽 국도변에 음식점, 모텔 등이 난립하여 자연경관을 크게 훼손하였다.	용어 변경
34	5.1.21 도시용지는 2003년 말 현재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기지정된 900km ² (수도권 면적의 7.7%)와 기존 도시화예정용지 650km ² 를 향후 20년간 도시용지로 추정하여 관리해 간다.	5.1.21 도시용지는 2003년 말 현재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기지정된 900km ² (수도권 면적의 7.7%)와 기존 도시화예정용지 650km ² 및 추가해제되는 개발제한구역 등을 향후 20년간 도시용지로 관리해 간다. 5.1.27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역은 서	개발제한구역 추가조정원칙 반영

	5.1.27 시군별로 설정된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은 다핵화, 대중교통활성화, 지역공동체의 공익성 제고, 기타 개발제한구역 존치지역 내의 부적격한 도시적 토지이용의 계획적 집단화 등 본 계획에서 제시된 공간구조 구상의 핵심취지를 적극 살릴 수 있는 방향에 우선적으로 활용한다.	민주거안정을 위한 서민주택공급,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물류용지 공급, 기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생활 편의성 제고 등에 우선적으로 활용한다.	
36	5.1.44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은 기존 시가지의 과밀완화를 위해 저밀도 주거용지로 개발하거나, 환경친화적인 첨단산업용지, 공공시설용지 및 여가용도로 개발하되 녹지축 보전을 우선한다.	5.1.44 개발제한구역 중 훼손정도가 심각하고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별하여 서민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거용지 및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물류용지 등으로 활용하되, 개발시 녹지축 보전을 중시한다.	개발제한구역 추가조정원칙 반영
36	<신설>	5.1.45 과천은 수도권 중부지역의 여가·레저·쇼핑·첨단 R&D·문화기능 보완토록 하고, 저탄소 녹색주거단지로 계획하여 관악산과 청계산의 녹지축 보전을 우선한다.	시군별 개발방향 추가
36	<신설>	5.1.46 하남은 무계획적이고 개별 입지된 시설물로 인해 난개발 되고 훼손된 지역을 활용하여 서울의 물류기능이 계획적으로 흡수될 수 있도록 상업형 물류유통 거점기능을 강화하되, 녹지축의 체계적인 정비 및 한강 수변공간을 계획적으로 정비한다.	시군별 개발방향 추가
36	<신설>	5.1.47 부천·광명은 뉴타운 사업과 연계하여 인접지역의 순환재개발을 유도한다.	„
36	<신설>	5.1.49 경인운하 주변지역은 화물·여객 터미널 및 배후연계 시설을 확보할 수 있	시군별 개발

		는 토지이용을 계획하되 수변공간의 생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되도록 한다.	방향 추가
37	<신설>	5.1.54 이 지역의 개발제한구역내 무계획적으로 입지된 물류창고, 소규모 제조형 공장 등을 계획적 입지로 유도하여 개발제한구역내 농업경영환경을 훼손하는 도시적 토지이용을 차단하고, 서남부지역의 공업형 물류·유통 거점지역으로 계획하여 인근 지역의 안산, 서울 구로, 수원, 인천의 산업배후지원 기능을 강화하되 토취장, 폐기물 재활용 공간 등으로 훼손된 지역은 체계적으로 정비한다.	시군 별 개발 방향 추가
39	5.1.64 남양주는 서울에 인접한 지역거점도시로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은 기반시설, 자연환경, 경관 등을 고려하여 저밀도 친환경적으로 개발한다.	5.1.69 남양주는 서울에 인접한 지역거점도시로 개발하되, 현재 추진되고 있는 택지개발지구와 도시여건이 열악한 기존 시가지의 계획적인 정비가 연계될 수 있도록 하며,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역은 기반시설, 자연환경, 경관 등을 고려하여 저밀도 친환경적으로 개발한다.	시군 별 개발 방향 추가
38	<신설>	5.1.70 하남·광주·이천지역은 개별적으로 입지해 있는 물류창고, 소규모 공장 등의 계획적 입지를 유도하여 물류·유통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비한다.	시군 별 개발 방향 추가
54	<그림 9>	<그림 9> - 광명-수원간 고속도로, 서울-포천간 고속도로 반영 등	신설 노선 반영
55	<표5>	<표 5> - 동서축중 인천-화천 노선을 삭제하고 남북축은 아래와 같이 일부변경한다.	신설 노선 반영

		<table><tr><th>구분</th><th>노선명</th><th>주요 경유지</th><th>노 선 특 성</th><th>비 고</th></tr><tr><td rowspan="5">남북축</td><td>① 강화·평택</td><td>강화-김포-서울의왕-안산-평택 (서해안고속도로)</td><td>· 전국 간선망 남북 1축 · 서해안지역 연결 고속도로 (시흥-평택간 민자고속도로 포함) · 인천국제공항-김포-파주 간 동서2축과 연결</td><td></td></tr><tr><td>② 문산·천안</td><td>파주-고양-광명-수원-평택</td><td>· 전국 간선망 남북 2축 · 광명-수원-평택간 연계 및 서해안, 경부축 보완 노선</td><td>수원-평택 보완</td></tr><tr><td>③ 연천·의정부-성남-오산</td><td>연천-의정부-성남-오산 (경부고속도로)</td><td>· 전국 간선망 남북 3축 · 경부고속도로</td><td></td></tr><tr><td>④ 철원·세종</td><td>철원-포천-남양주-광주-용인 (제2경부고속도로)</td><td>· 전국 간선망 남북 3축과 중부고속도로축을 보완하며, 남양주-광주-용인지역 통행축 보완 · 구리-용인-안성-세종 노선 신설</td><td>남북축 보완</td></tr><tr><td>⑤ 철원-충주</td><td>철원-포천-양평-여주 (중부내륙고속도로)</td><td>· 전국 간선망 남북 4축 · 여주-구미간 중부내륙과 연계</td><td></td></tr></table>	구분	노선명	주요 경유지	노 선 특 성	비 고	남북축	① 강화·평택	강화-김포-서울의왕-안산-평택 (서해안고속도로)	· 전국 간선망 남북 1축 · 서해안지역 연결 고속도로 (시흥-평택간 민자고속도로 포함) · 인천국제공항-김포-파주 간 동서2축과 연결		② 문산·천안	파주-고양-광명-수원-평택	· 전국 간선망 남북 2축 · 광명-수원-평택간 연계 및 서해안, 경부축 보완 노선	수원-평택 보완	③ 연천·의정부-성남-오산	연천-의정부-성남-오산 (경부고속도로)	· 전국 간선망 남북 3축 · 경부고속도로		④ 철원·세종	철원-포천-남양주-광주-용인 (제2경부고속도로)	· 전국 간선망 남북 3축과 중부고속도로축을 보완하며, 남양주-광주-용인지역 통행축 보완 · 구리-용인-안성-세종 노선 신설	남북축 보완	⑤ 철원-충주	철원-포천-양평-여주 (중부내륙고속도로)	· 전국 간선망 남북 4축 · 여주-구미간 중부내륙과 연계		
구분	노선명	주요 경유지	노 선 특 성	비 고																									
남북축	① 강화·평택	강화-김포-서울의왕-안산-평택 (서해안고속도로)	· 전국 간선망 남북 1축 · 서해안지역 연결 고속도로 (시흥-평택간 민자고속도로 포함) · 인천국제공항-김포-파주 간 동서2축과 연결																										
	② 문산·천안	파주-고양-광명-수원-평택	· 전국 간선망 남북 2축 · 광명-수원-평택간 연계 및 서해안, 경부축 보완 노선	수원-평택 보완																									
	③ 연천·의정부-성남-오산	연천-의정부-성남-오산 (경부고속도로)	· 전국 간선망 남북 3축 · 경부고속도로																										
	④ 철원·세종	철원-포천-남양주-광주-용인 (제2경부고속도로)	· 전국 간선망 남북 3축과 중부고속도로축을 보완하며, 남양주-광주-용인지역 통행축 보완 · 구리-용인-안성-세종 노선 신설	남북축 보완																									
	⑤ 철원-충주	철원-포천-양평-여주 (중부내륙고속도로)	· 전국 간선망 남북 4축 · 여주-구미간 중부내륙과 연계																										
57	<표6>	<table><tr><th colspan="3"><표6></th></tr><tr><th>구분</th><th>노 선 명</th><th>경유지 및 계획노선 특성</th></tr><tr><td rowspan="6">고속·간선철도</td><td>①경부고속철도</td><td>· 서울(광명역)-천안·아산-대전-대구-부산</td><td rowspan="6">문구 수정</td></tr><tr><td>②서남선 철도</td><td>· 수도권 서부와 아산만권 산업지대 연결</td></tr><tr><td>③인천국제공항철도</td><td>· 인천국제공항과 서울역 연결</td></tr><tr><td>④중부내륙선</td><td>· 성남(분당)-광주-이천-여주-문경</td></tr><tr><td>⑤제2공항철도</td><td>· 인천국제공항-인천-판교(경부고속철도)-분당 · 개항단계에서 기존철도로 환승하고, 수도권 서남부지역 인천국제공항과 고속철도역간 연계 강화를 위한 장기구상</td></tr><tr><td>⑥ 방사형 노선</td><td>· 경인선, 경부선, 경의선, 중앙선, 경춘선, 경원선, 수인선 등 복선전철화 사업</td></tr></table>	<표6>			구분	노 선 명	경유지 및 계획노선 특성	고속·간선철도	①경부고속철도	· 서울(광명역)-천안·아산-대전-대구-부산	문구 수정	②서남선 철도	· 수도권 서부와 아산만권 산업지대 연결	③인천국제공항철도	· 인천국제공항과 서울역 연결	④중부내륙선	· 성남(분당)-광주-이천-여주-문경	⑤제2공항철도	· 인천국제공항-인천-판교(경부고속철도)-분당 · 개항단계에서 기존철도로 환승하고, 수도권 서남부지역 인천국제공항과 고속철도역간 연계 강화를 위한 장기구상	⑥ 방사형 노선	· 경인선, 경부선, 경의선, 중앙선, 경춘선, 경원선, 수인선 등 복선전철화 사업							
<표6>																													
구분	노 선 명	경유지 및 계획노선 특성																											
고속·간선철도	①경부고속철도	· 서울(광명역)-천안·아산-대전-대구-부산	문구 수정																										
	②서남선 철도	· 수도권 서부와 아산만권 산업지대 연결																											
	③인천국제공항철도	· 인천국제공항과 서울역 연결																											
	④중부내륙선	· 성남(분당)-광주-이천-여주-문경																											
	⑤제2공항철도	· 인천국제공항-인천-판교(경부고속철도)-분당 · 개항단계에서 기존철도로 환승하고, 수도권 서남부지역 인천국제공항과 고속철도역간 연계 강화를 위한 장기구상																											
	⑥ 방사형 노선	· 경인선, 경부선, 경의선, 중앙선, 경춘선, 경원선, 수인선 등 복선전철화 사업																											
68	5.5.21 개발제한구역의 조정가능지역등 도시화예정용지의 개발시 종전의 물함유 기능을 유지하고 집중호우때 발생가능한 우수유출량을 감소시켜 도시관거 및 하천에 미치는 부하를 최소	5.5.21 도시화예정용지 개발시 종전의 물함유 기능을 유지하고 집중호우때 발생가능한 우수유출량을 감소시켜 도시관거 및 하천에 미치는 부하를 최소화하며, 개발로 인한 환경파괴의 문제를 극소화시킬 수 있도록 잔디도랑, 투수구덩이, 투수·저류연못, 투수구덩이·자갈층 조합시설, 투수	문구 수정																										

	<p>화하며, 개발로 인한 환경파괴의 문제를 극소화시킬 수 있도록 잔디도랑, 투수구덩이, 투수·저류연못, 투수구덩이·자갈층 조합시설, 투수조 등 친환경적 우수관리 시스템을 적극 도입한다.</p>	<p>조 등 친환경적 우수관리 시스템을 적극 도입한다.</p>	
78~82	<p><전면수정></p>	<p>6.1 개발제한구역 조정의 기본방향</p> <p>□ 기본방향</p> <p>6.1.1 개발제한구역으로 계속 보전할 가치가 낮은 지역은 부분적으로 산업용지 등 도시용지로 해제·활용을 허용하되, 지가상승이나 환경훼손 등의 부작용은 방지한다.</p> <p>6.1.2 지정·해제대상지의 선정과 제척, 그 경계선의 설정 등 개발제한구역의 지정·해제관련 기준 등 정부의 관련지침에 따라 추진한다.</p> <p>□ 해제가능규모</p> <p>6.1.3 해제 가능규모는 기존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해제예정총량 외에 기존 해제예정 총량의 30%에 상당하는 면적과 국정과제추진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면적 범위 내에 설정한다.</p> <p>6.1.4 우선 해제된 집단취락지역의 정비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면적에 대하여는 총량과 관계없이 관례지침에 따라 별도로 인정한다. 해제가능총량 중 현재까지 활용하지 않은 면적은 전환 해제한다.</p>	<p>기존 개발제한구역 조정방안내용을 신규방침내용을 반영하여 변경</p>

	<p>□ 해제가능지역</p> <p>6.1.5 토지 특성상 보존가치가 낮은 환경평가결과 3~5등급지로서, 그 면적 규모가 20만㎡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우량농지는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하여 포함하도록 한다.</p> <p>6.1.6 지역여건이 기존 시가지·공단·항만 등에 인접하고 간선도로·철도 등의 주요 기반시설이 구비되어 대규모 기반시설 설치소요가 적은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한다.</p> <p>□ 해제절차</p> <p>6.1.7 여건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광역도시계획에서는 별도의 조정대상지역 설정없이 시·도별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만 배분·제시하되, 도 지역내에서는 시·군 또는 일정권역을 설정하여 배분·제시한다., 다만, 국가계획(서민주택공급 건설계획 등)과 관련된 경우에는 권역전체에 대한 해제가능총량만 제시하도록 한다.</p> <p>6.1.8 최초로 수립된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조정가능지역 중 해제되지 않는 지역의 목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제시가 가능하다.</p> <p>6.1.9 구체적인 해제대상지에 관한 사항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단계에서 제시하며, 이때 도시성장 및 환경보전 측면에서 보전이 필요한지 여부, 개발수요가 명확하고 중요·시급한 사업인지 여부, 도심 재개발이나 기타 용지로 개발수요 충족이 불가능한지 등을 제</p>	
--	---	--

		<p>시한다.</p> <p>6.1.10 개발수요 등을 감안하여 광역도시 계획에서 제시한 목표연도내 실질적 개발·활용이 가능한 지역 중 도시관리계획 입안일 기준으로 향후 3년내 착공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p> <p>□ 개발방향</p> <p>6.1.11 해제되는 지역은 주변 자연환경에 조화되도록 친환경적으로 개발하고, 개발로 인한 혜택은 주로 서민 및 중소기업들에게 돌아가도록 유도한다.</p> <p>6.1.12 서민을 위한 보금자리 주택단지는 생태친화적(Eco-friendly) 개발, 그린홈 등으로 이루어진 에너지 절감형 저탄소 녹색 주거단지로 조성한다.</p> <p>6.1.13 연구단지에는 신재생 에너지 등 Green-Tech 관련 연구시설을 우선적으로 유치하도록 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p> <p>6.1.14 산업단지는 저공해 단지로 개발하되, 중소기업 전용단지를 조성하여 중소기업체들도 저렴한 임대료 등 적은 부담으로 입주토록 유도한다.</p> <p>6.2 시도별 및 국책사업 해제총량 설정 및 활용방안</p> <p>□ 해제가능총량 종합</p>	
--	--	---	--

<표 7> 해제가능총량의 종합

구 분	계(km²)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국가
기존 해제계획총량	124.507	13.280	6.997	104.230	(46.804)
해제 잔여면적	26.520	1.183	1.336	24.001	(0.796)
추가 해제가능총량	114.496	1.328	2.099	31.269	79.8
향후 해제가능총량	141.016	2.511	3.435	55.270	79.8

* 해제 잔여물량은 '09.3 기준

* 국가부문 ()는 기존 2020수도권광역도시계획에 국책사업으로 반영된 총량, 물량임

<표 8> 경기도 권역별 물량배분(안)

(단위 : km²)

권역구분	해당시군	기존해제계획총량	잔여면적	추가해제가능총량	향후해제가능총량
남부권역	수원, 성남, 안양, 과천, 군포, 의왕, 용인	20.692	5.862	1.994~2.992	7.856~8.854
서남부권역	광명, 화성, 시흥, 안산, 부천	31.473	9.940	10.233~15.349	20.172~25.289
서북부권역	고양, 김포	15.162	1.107	3.241~4.862	4.348~6.968
동남부권역	하남, 광주, 양평	10.965	0.792	3.339~5.008	4.131~5.801
동북부권역	남양주, 의정부, 양주, 구리	25.938	6.301	6.208~9.312	12.509~15.613

<표 9> 서민주택 권역별 배분계획(안)

구 분	중부	서부·북부	동부·남부
면적(km²)	40~60	20~40	20 이내

* 권역별 배분은 향후 개발시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 권역구분은 2003~2012 주택종합계획의 생활권역 구분에 따름

구 분	시 · 군
중부	서울특별시, 고양시, 의정부시, 구리시, 하남시, 성남시, 광명시, 과천시, 남양주시
서부·북부	인천광역시, 부천시, 김포시, 시흥시, 파주시, 연천군, 동두천시, 양주시, 포천시
동부·남부	가평군, 양평군, 광주시, 이천시, 여주군, 수원시, 안양시, 의왕시, 군포시, 안산시, 용인시, 오산시, 화성시, 평택시, 안성시

□ 서울특별시의 개발제한구역 활용방안

6.2.1 서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 및 물류공간으로 활용한다. 특히 서울의 신성장동력으로 서울의 전략산업과 비교우위산

	<p>업을 육성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한다.</p> <p>6.2.2 기성 시가지의 도시재생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완충공간으로 활용한다. 기성 시가지내 부적격 기능을 이전하기 위한 대체부지로 활용하고, 이전된 부지는 도시재생 촉진을 위한 용도로 복합개발 추진한다.</p> <p>□ 인천광역시의 개발제한구역 활용방안</p> <p>6.2.3 시가지 중심지 체계개편에 따른 도심 기능강화, 지역적 특성에 맞는 용도지역 지정 및 직주근접형 토지이용 등의 계획적 개발 유도에 활용한다. 한편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신창조산업육성 및 여가·관광인프라 구축 등 계획적인 지역개발을 도모한다.</p> <p>6.2.4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관련 시설부지로 활용한다. 주요 경기장 및 부대시설은 도시가 지향하는 발전 축에 배치하여 중심지가 활성화되도록 하고 주거지역 인접 또는 연접지역에 배치하여 대회 이후 활용도를 제고한다.</p> <p>□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활용방안</p> <p>6.2.5 주거·교육·문화·레저·산업·의료·공공체육시설 등 자족기능을 갖춘 친환경 녹색성장 복합단지로 조성한다. 서민주택단지와 연계하여 주거·산업·문화 등이 어우러진 복합개발 추진하며, 해제지역 개발시 불법용도변경된 시설물, 물류창고, 소규모 공장 등을 계획입지로 유도하여 기능을 흡수한다.</p> <p>6.2.6 그동안 시가화가 많이 진행된 경부</p>	
--	--	--

축 개발을 지양하고 거점별 새로운 성장 축 개발을 유도한다. 각 권역별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한 거점형 자족도시를 조성하여 서울중심의 공간구조의 다핵화를 유도한다.

6.2.7 개발제한구역이 과도한 일부 도시는 도시여건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능을 배치한다.

□ 국책사업(서민주택)의 개발제한구역 활용방안

6.2.8 지구지정 이전에 주민공람 및 중앙도시계획위 심의 등을 거쳐 합리적으로 계획·개발을 유도한다. 대규모 개발의 경우에는 필요시 국무회의 등으로 적정성을 확보한다.

6.2.9 개발지구의 밀도·층고 등 토지이용을 효율적으로 계획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면적 소요를 최소화한다. 직주근접 실현 및 도시기능 활성화 등을 위해 도시지원시설용지의 충분한 확보 등에 따라 택지원단위를 약 200㎡/호 수준으로 설정한다
{용적률 190~220%수준, 평균주택면적 100㎡(보금자리주택 평균 약83㎡) 수준}

<표 10> 서민주택 개발용지 용도별 면적 구성비 예시

구분	계	주택 용지	상업 업무	공공청 사 학교	도로	공원 녹지	도시 지원	기타 (하천 등)
면적(㎢)	80	24	4	6	14	16	12	4
구성비	100%	30%	5%	7%	18%	20%	15%	5%

* 용적률, 평균주택면적, 용도별 면적 구성비 등은 지구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 수도권 CB해제 국민임대단지(38개지구 평균) 원단위 : 169㎡/호

* 수도권 2기신도시(13개 평균) 원단위 : 220㎡/호

6.2.10 개발지구 내외의 기존 물류·산업기능을 수용하는 등 복합개발을 도모하고

		<p>필요시 주변의 훼손된 지역을 녹지·공원 등으로 복구한다.</p> <p>6.2.11 개발되는 지역은 탄소저감계획, 그린홈 등을 통해 기존 국민임대단지와 차별화된 친환경 보금자리주택지구를 건설한다.</p> <p>6.2.12 경인운하 김포터미널 시설 중 마리나 및 항만친수시설과 물류단지 시설로 1km²를 활용한다.</p>	
--	--	---	--

<별첨> 기존(2007.7 승인) 개발제한구역 조정방안

가. 개발제한구역 조정의 기본방향

- 개발제한구역 조정은 집단취락, 환경평가결과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 국책사업·지역현안사업지를 대상유형으로 하여 추진된다. 이 중 특히 집단취락은 주민생활불편 등의 해소를 위해 「집단취락 등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계획변경(안) 수립 지침」(건설교통부 관리58400-1365, 2003.10.9)에 의거하여 조정대상 집단취락을 선정하여 우선해제한다.
- 환경평가결과와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은 광역도시계획을 통해 해제대상지역으로 설정된 후 구체적 개발계획이 수립되면 해제한다(이를 6.1.4의 조정가능지역과 구분하여 「일반조정가능지역」이라 한다).
- 국책사업·지역현안사업 대상지는 해당 사업이 국가적·광역적 차원의 필요성, 지역 균형발전에의 부합성, 도시발전에 대한 기여도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경우 조정가능지역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한다(건설교통부,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다만,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경부고속철도 운영활성화를 위한 광명역세권 개발사업(이하 경부고속철도 광명역세권 개발사업) 및 시·도지사가 추진하는 시급한 지역현안사업은 우선해제할 수 있도록 한다.
- 개발제한구역 조정유형은 국책사업·지역현안사업 대상지가 조정가능지역과 우선해제의 2가지 유형중 하나로 추진되므로 <표 11>과 같이 조정대상과 조정방법에 따라 모두 4가지 유형이 있다.

<표 11> 개발제한구역 조정유형

조정대상유형 \ 조정방법	조정가능지역	우선해제
집단취락		I
일반 조정가능지역	II	
국책사업·지역현안사업 대상지	III	IV

- 우선해제는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바로 도시계획입안 및 결정을 통해 해제하는 것이며, 조정가능지역은 원칙적으로 공영개발방식을 적용하여 2020년까지 개발수요가 있을 경우 구체적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비로소 해제한다.

나. 조정방침설정

□ 시·군별 조정총량설정

- 시·군별 개발제한구역 토지에 대한 환경평가결과, 해당 시·군의 도시여건, 공간정책상 해당 시·군의 위상 등 3가지 항목별의 관련변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 시·군별 조정기준총량을 먼저 산정한다. 조정기준총량은 각 시·군에서 조정가능지역내 4·5등급지 포함비율을 60%이상 적용할 경우 해당 시·군의 개발제한구역내 조정가능한 토지의 비율로 전제한다.
 - 1) 환경평가결과는 해당 시·군별 개발제한구역면적에 대비한 환경평가결과 4·5등급지 비율을 변수로 하여 가중치(0.6)를 부여한다.
 - 2) 도시여건은 행정구역 면적에 대비한 개발제한구역면적의 비율과 1인당 시가화용도 지역(주거·상업·공업지역) 면적의 두 가지 변수로 하여 각각의 가중치(0.1)를 부여한다.
 - 3) 공간정책상의 위상과 관련하여서는 거점도시설정·과밀억제권역포함 여부를 변수로 하여 가중치(0.2)를 부여한다.
- 시·군별 여건에 따라서는 조정가능지역에 대한 4·5등급의 적용비율을 60% 미만으로 낮추어 적용할 수 있으나, 4·5등급 적용비율을 매 5% 하향 적용시마다 조정기준총량에서 0.25%씩 삭감한 조정허용총량을 정하여 조정하도록 한다. 수도권의 각 시·군별 조정기준총량과 이를 토대로 재조정된 조정허용총량은 < 표 8 > 과 같다.

□ 조정유형별 기준설정

- 우선해제 집단취락은 조정대상의 기준을 호수규모 20호이상이고 호수밀도 10호/ha 이상으로 설정한다. 다만, 지역에 따라서는 호수규모 100호, 호수밀도 20호/ha까지 지자체가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 일반조정가능지역은 조정허용총량 설정시 기준으로 한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 4·5등급지 포함비율로 일단의 토지면적이 최소 10만㎡이상으로 되는 범위로 한다.
 - 1) 연담화방지를 위하여 서울중심 개발제한구역 내측경계선에서 2km이내 지역에서는 일반조정가능지역 설정을 제한한다. 다만,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토취장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해당 시·군의 일반조정가능지역 총량은 시·군별 조정허용총량 범위내에서 해제대상 집단취락의 기준면적을 제외한 범위에서 설정한다.

<표 12>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조정기준총량 및 조정허용총량

구 분	개발제한 구역 지정 (km ²)	환경평가결과 4·5등급 비율 (%)	조정허용총량		조정가능지역 적용 4·5등급 비율(%)	비고 (기준총량대비 허용총량)
			개발제한구역 대비 비율(%)	면적 (km ²)		
수도권	1,540.8	11.84	8.16	125.8	-	-
서울특별시	166.8	11.23	7.98	13.3	60	-
인천광역시	80.6	19.68	10.28	8.3	60	-
경기도	1,293.4	11.40	8.06	104.2	-	-
고양시	134.4	14.87	9.71	13.1	60	-
과천시	33.0	11.48	7.60	2.5	60	-
광명시	29.8	20.62	11.23	3.3	55	0.25% 삭감
광주시	106.5	0.86	6.53	7.0	60	-
구리시	23.4	7.33	8.02	1.9	60	-
군포시	24.7	16.17	10.15	2.5	60	-
김포시	18.8	16.05	8.06	1.5	20	2.00% 삭감
남양주시	241.9	2.68	4.67	11.3	10	2.50% 삭감
부천시	20.4	18.01	10.33	2.1	60	-
성남시	54.8	14.82	9.59	5.3	60	-
수원시	36.5	11.87	8.10	3.0	50	0.50% 삭감
시흥시	102.5	27.51	11.78	12.1	35	1.25% 삭감
안산시	39.6	21.77	11.47	4.5	60	-
안양시	31.0	9.87	8.43	2.6	60	-
양주시	79.0	7.18	5.65	4.5	10	2.50% 삭감
양평군	17.2	0.75	6.16	1.1	60	-
용인시	3.6	0.03	6.03	0.2	60	-
의왕시	49.8	15.41	10.21	5.1	60	-
의정부시	63.9	13.17	9.20	5.9	55	0.25% 삭감
하남시	86.4	6.67	8.16	7.1	60	-
화성시	96.2	15.75	7.86	7.6	20	2.00% 삭감

- 국책사업은 경부고속철도 광명역세권 개발사업, 송파거여단지 및 국민임대주택단지 건설사업으로 한정하되, 2002년 1월 22일 공청회 당시까지 지정된 국민임대주택단지는 예외적으로 일부 분양주택도 포함됨을 고려하여 해당 면적의 1/2은 조정허용총량내에서 계상한다. 다만, 2002년 1월 22일 이후부터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기 이전에 추진되는 국민임대주택단지 및 송파거여단지는 조정허용총량내에서 추진하고 특히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의 경우 일반조정가능지역을 활용할 수 있다.
- 지역현안사업은 해당 시·군에서 도시여건상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제안하는 사업으로 조정허용총량과 별도로 조정허용총량의 10% 범위내에서 추가로 설정한다.

6.2.7 국책사업 및 지역현안사업은 원칙적으로 3~5등급 토지를 활용하고, 관계부처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허용여부를 결정한다.

다. 유형별 조정 내역

- 우선해제 집단취락은 총 678개소이며, 면적은 52.679km²로 설정한다.
- 일반조정가능지역은 44개소, 21.579km²(우선해제집단취락제외면적 19.296km²)로 인천광역시 2개소, 0.742km²(포함되는 우선해제집단취락 없음), 경기도 42개소, 20.837km²(우선해제집단취락제외면적 18.554km²)이고 서울특별시는 일반조정가능지역을 설정하지 않는다.
- 국책사업은 총 41개소, 50.427km²(우선해제집단취락제외면적 46.804km²)로 경부고속철도 광명역사 역세권개발 1.955km², 국민임대주택단지 42.631km², 송파거여지구 5.841km²로 설정하고 우선해제로 추진한다. 이 중 별도의 조정총량이 인정되는 경우는 '경부고속철도 광명역세권 개발사업'중 1.325km²와 1차 지정된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 11개소 각각 면적의 50%이다.
- 지역현안사업지구는 20개소 6.033km²(우선해제집단취락제외면적 5.728km²)로 결정하고, 지역균형발전에의 부합성, 도시발전에 대한 기여도, 공공성 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한하여 관계부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최종적으로 조정가능지역으로 설정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추진하는 시급한 지역현안사업은 우선해제로 조정한다.

<표 13> 시·군별 개발제한구역 조정 결과 종합

행정구역	조정 허용 총량	유형별 조정면적								조정총량 (a+b+c+d) 면적(k㎡)
		우선해제취락 (a)		일반조정가능지역 (b)		국책사업 (c)		지역현안사업 (d)		
	면적(k㎡)	개소	면적(k㎡)	개소	면적(k㎡)	개소	면적(k㎡)	개소	면적(k㎡)	개소
수도권	125.8	678	52.679	44	19.296	41	46.804	20	5.728	124.507
서울특별시	13.3	30	6.488	-	-	10	5.915	4	0.877	13.280
인천광역시	8.3	52	2.600	2	0.742	3	3.540	1	0.115	6.997
경기도	104.2	596	43.591	42	18.554	27	37.349	15	4.736	104.230
고양시	13.1	61	8.579	-	-	3	4.733	1	0.619	13.931
과천시	2.5	12	0.908	1	1.274	-	-	1	0.185	2.367
광명시	3.3	24	2.174	2	0.524	2	2.772	-	-	5.470
광주시	7.0	39	2.017	-	-	-	-	-	-	2.017
구리시	1.9	15	1.746	1	0.154	-	-	1	0.190	2.090
군포시	2.5	10	0.563	4	0.657	3	1.150	1	0.235	2.605
김포시	1.5	14	0.834	3	0.397	-	-	-	-	1.231
남양주시	11.3	92	5.768	1	0.984	2	5.006	2	0.800	12.558
부천시	2.1	14	1.019	1	0.148	2	1.105	1	0.164	2.436
성남시	5.3	19	1.368	1	0.191	2	4.207	-	-	5.766
수원시	3.0	6	0.304	-	-	1	2.980	-	-	3.284
시흥시	12.1	53	3.476	4	3.079	3	5.655	-	-	12.210
안산시	4.5	18	0.864	6	1.943	1	0.813	2	0.382	4.002
안양시	2.6	9	0.533	2	0.421	1	0.730	1	0.018	1.702
양주시	4.5	32	1.932	2	2.479	-	-	1	0.450	4.861
양평군	1.1	4	0.104	-	-	-	-	-	-	0.104
용인시	0.2	-	-	-	-	-	-	-	-	-
의왕시	5.1	23	1.019	8	2.630	2	0.865	1	0.454	4.968
의정부시	5.9	24	1.881	1	1.221	2	2.796	1	0.531	6.429
하남시	7.1	65	5.704	-	-	1	2.432	2	0.708	8.844
화성시	7.6	62	2.798	5	2.452	2	2.105	-	-	7.355
기타				-	-	1	-	-	-	-

- 주1. 경부고속철도 광명역사 역세권 개발사업 중 국책사업으로 인정받은 1.325km²와, 1차 지정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11개소 해당면적의 1/2만을 개발제한구역 조정허용총량 이외에 별도로 인정한다.
2. 국책사업 중 경부고속철도 광명역사 역세권 개발사업, 1차 지정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 11개소, 송파거여단지 및 서울특별시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 10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의 경계 및 면적은 해당 시·군의 일반조정가능지역 설정기준(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 4·5등급포함비율 준수 및 조정허용총량범위 내에서 추진)에 부합되도록 선정하였다(2004.4. 국무조정실·건설교통부·환경부·서울특별시·경기도 합의사항 준수).
3. 8.31부동산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송파거여지구(#600)'의 서울특별시 부지(1.645km²)는 서울특별시 조정허용총량내에서 추진하고, 경기도내 부지(성남 2.780km², 하남 1.416km²)는 경기도내 사용하지 않는 잔여총량을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한다(2005.12.27. 관계장관 합의사항).
4. 국책사업 '송파거여지구(#600)'는 서울특별시, 성남시 및 하남시 각각의 국책사업면적에는 포함시키되 개소수에는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로 분류(기타)하여 1개소로 반영한다.

<표 14> 수도권 광역계획권내 국책사업

번호	상정시 번호	사업명	지구명	위치	면적(km ²)
1	101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	서울상암2	서울특별시 마포구	0.340
2	102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	서울강일2	서울특별시 강동구	0.590
3	103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	서울신내2	서울특별시 중랑구	0.210
4	104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	서울신정3	서울특별시 양천구	0.482
5	105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	서울마천	서울특별시 송파구	0.215
6	106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	서울세곡	서울특별시 강남구	0.264
7	107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	서울우면2	서울특별시 서초구	0.505
8	108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	서울천왕2	서울특별시 구로구	0.278
9	111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	서울내곡	서울특별시 서초구	0.794
10	112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	서울신내3	서울특별시 중랑구	0.584
11	2003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 (일반조정가능지역)	인천경서	인천광역시 서구	0.149
12	2004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 (일반조정가능지역)	인천가정	인천광역시 서구	1.318 (1.292)
13	2005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 (일반조정가능지역)	인천서창2	인천광역시 남동구	2.099
14	312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 (지역현안사업)	고양삼송	경기도 고양시	0.264
	314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 (지역현안사업)		경기도 고양시	0.275
	3101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 (일반조정가능지역)		경기도 고양시	4.553 (3.050)
15	3102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 (일반조정가능지역)	고양지축	경기도 고양시	0.618 (0.393)
16	311*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	고양행신2	경기도 고양시	0.751
17	331	국책사업	경부고속철도 광명 역세권 개발사업	경기도 광명시	1.325
	331	지역현안사업		경기도 광명시	0.330
	451	지역현안사업		경기도 안양시	0.220
	3301	일반조정가능지역		경기도 광명시	0.080
18	332*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	광명소하	경기도 광명시	1.045
19	3601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	군포당동2	경기도 군포시	0.438 (0.258)
20	361*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	군포부곡	경기도 군포시	0.473
21	3604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	군포송정	경기도 군포시	0.513 (0.419)
22	381*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	남양주가운	경기도 남양주시	0.494

(계속)

번호	상정시 번호	사업명	지구명	위치	면적(k㎡)
23	384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 (지역현안사업)	남양주별내	경기도 남양주시	0.330
	3801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 (일반조정가능지역)		경기도 남양주시	4.762 (4.182)
24	4002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 (일반조정가능지역)	부천범박	경기도 부천시	0.464 (0.432)
25	401*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	부천여월	경기도 부천시	0.673
26	411*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	성남도촌	경기도 성남시	0.801
27	411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 (지역현안사업)	성남여수	경기도 성남시	0.266
	4102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 (일반조정가능지역)		경기도 성남시	0.614
28	421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 (지역현안사업)	수원호매실	경기도 수원시	0.300
	4201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 (일반조정가능지역)		경기도 수원시	2.821 (2.680)
29	431*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	시흥능곡	경기도 시흥시	0.985
30	4305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 (일반조정가능지역)	시흥목감	경기도 시흥시	1.749
31	431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 (지역현안사업)	시흥장현	경기도 시흥시	1.246 (1.208)
	4306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 (일반조정가능지역)		경기도 시흥시	1.887 (1.713)
32	441*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	안산신길	경기도 안산시	0.813
33	4505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 (일반조정가능지역)	안양관양	경기도 안양시	0.585 (0.510)
34	491*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	의왕청계	경기도 의왕시	0.336
35	4901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	의왕포일2	경기도 의왕시	0.529
36	501*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	의정부녹양	경기도 의정부시	0.304
37	5003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	의정부민락2	경기도 의정부시	2.624 (2.492)
38	511*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	하남풍산	경기도 하남시	1.016
39	5204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	화성비봉	경기도 화성시	0.906 (0.791)
40	5205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	화성봉담2	경기도 화성시읍	1.406 (1.314)
41	600	송파거여단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경기도 성남시, 경기도 하남시	5.841 (5.587)

- 주 1. 면적중 괄호안의 숫자는 우선해제집단취락의 면적을 제외한 순조정가능지역 면적임
2. 상정당시 일반조정가능지역이나 지역현안사업지구에 추진하는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 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국책사업 인정’ 절차를 이행하여 추진된 지구는 국책사업으로 분류함
3. 상정시 번호 에 *표시가 붙어있는 사업은 총 사업면적의 1/2이 별도총량으로 인정되는 1차 지정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11개소)임.

<표 15> 수도권 광역계획권내 지역현안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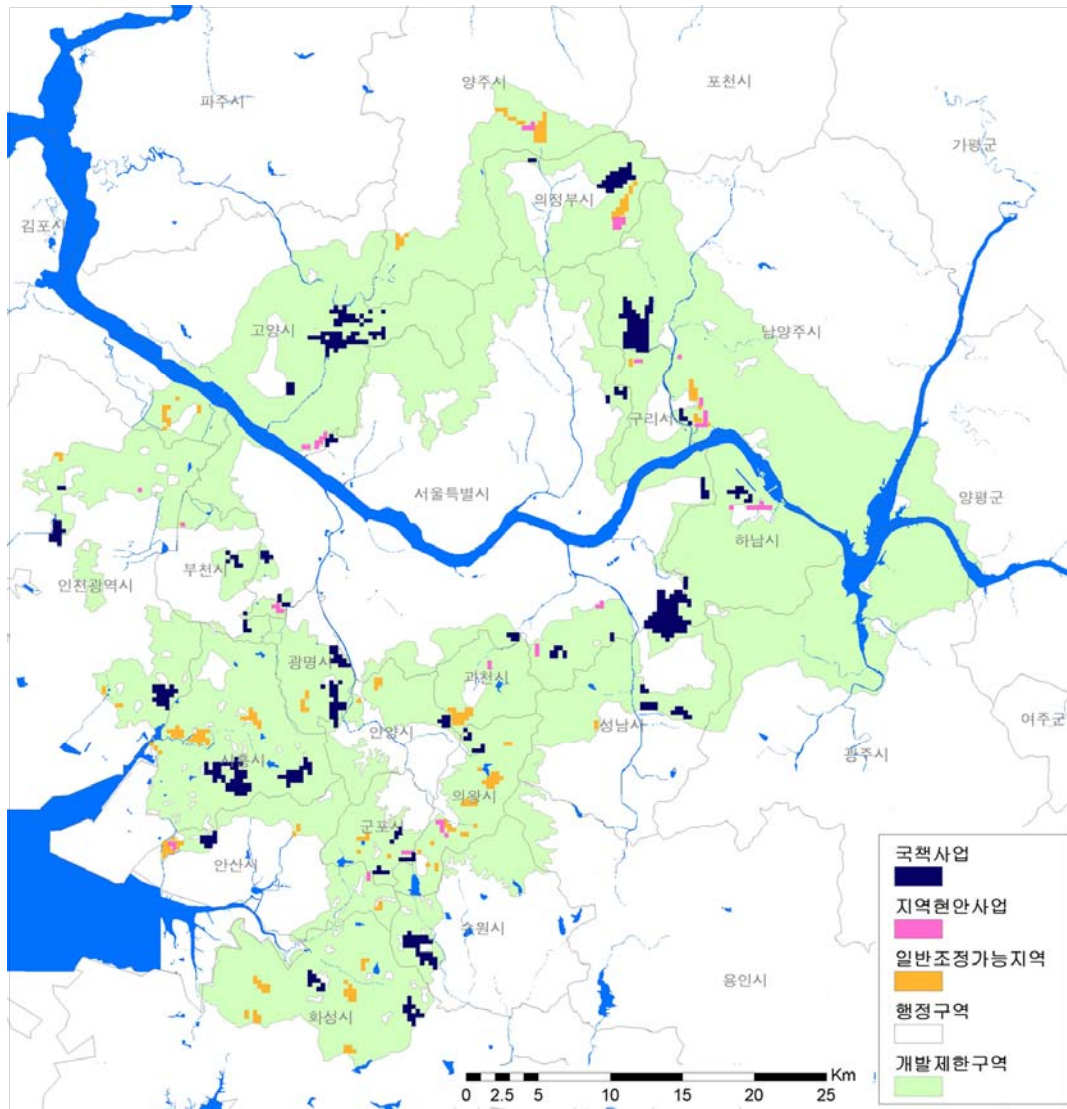
번호	상정시 번호	사업명	위치	면적(k㎡)
1	101	서울추모공원조성	서울특별시 서초구	0.174
2	102	상봉터미널 이전사업	서울특별시 중랑구	0.038
3	103	구로천왕지구 도시개발사업	서울특별시 구로구	0.485
4	106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	서울특별시 강남구	0.180
5	201	실버타운조성	인천광역시 계양구	0.115
6	313	미디어밸리	경기도 고양시	0.859 (0.619)
7	322	북합문화관광단지	경기도 과천시	0.185
8	351	역사유적공원	경기도 구리시	0.190
9	361	부곡첨단산업단지	경기도 군포시	0.268 (0.235)
10	381	행정타운 및 지식정보단지	경기도 남양주시	0.658
11	383	진건산업단지	경기도 남양주시	0.142
12	401	물류유통단지 조성	경기도 부천시	0.164
13	441	공영차고지	경기도 안산시	0.222
14	442	유통업무설비	경기도 안산시	0.160
15	452	안양대 정보·통신 연구센터	경기도 안양시	0.018
16	461	행정타운 및 역세권개발	경기도 양주시	0.450
17	491	종합행정타운조성	경기도 의왕시	0.454
18	501	바이오사업	경기도 의정부시	0.563 (0.531)
19	511	공해공장 이전을 통한 첨단산업 및 주택지조성 사업	경기도 하남시	0.138
20	512	물류및주택지조성사업	경기도 하남시	0.570

주) 면적중 괄호안의 숫자는 우선해제집단취락의 면적을 제외한 순조정가능지역 면적임.

<표 16> 수도권 광역계획권내 일반조정가능지역

번호	상정시 번호	위치	면적(k㎡)
1	2002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0.256
2	2007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0.486
3	3201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1.274
4	3302	경기도 광명시 가학동	0.181
5	3303	경기도 광명시 가학동	0.410(0.343)
6	3501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0.154
7	3602	경기도 군포시 속달동	0.214(0.173)
8	3603	경기도 군포시 둔대동	0.236(0.163)
9	3605	경기도 군포시 대야미동	0.116
10	3606	경기도 군포시 부곡동	0.205
11	3701	경기도 김포시 고촌면	0.531(0.280)
12	3703	경기도 김포시 고촌면	0.166(0.046)
13	3704	경기도 김포시 고촌면	0.156(0.071)
14	3802	경기도 남양주시 지금동	1.343(0.984)
15	4001	경기도 부천시 삼정동	0.148
16	4103	경기도 성남시 금토동	0.191
17	4301	경기도 시흥시 매화동	0.895
18	4302	경기도 시흥시 방산동	0.844
19	4303	경기도 시흥시 방산동	1.112
20	4304	경기도 시흥시 월곶동	0.228
21	4401	경기도 안산시 선부동	0.114
22	4402	경기도 안산시 부곡동	0.100
23	4403	경기도 안산시 부곡동	0.176
24	4404	경기도 안산시 신길동	1.150
25	4406	경기도 안산시 사사동	0.249
26	4408	경기도 안산시 팔곡이동	0.154
27	4501	경기도 안양시 석수동	0.321
28	4502	경기도 안양시 석수동	0.100
29	4601	경기도 양주시 남방동	2.361(2.019)
30	4602	경기도 양주시 일영리	0.625(0.460)
31	4905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0.106
32	4906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0.546(0.469)
33	4907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0.285
34	4908	경기도 의왕시 왕곡동	0.280
35	4903	경기도 의왕시 청계동	0.132(0.093)
36	4904	경기도 의왕시 학의동	0.955
37	4909	경기도 의왕시 이동	0.202
38	4910	경기도 의왕시 삼동	0.269(0.240)
39	5002	경기도 의정부시 고산동	1.307(1.221)
40	5201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0.351
41	5202	경기도 화성시 수화동	0.694(0.550)
42	5203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0.894(0.649)
43	5206	경기도 화성시 송림동	0.652(0.577)
44	5207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0.410(0.325)

주) 면적중 괄호안의 숫자는 우선해제집단취락의 면적을 제외한 순조정가능지역 면적임.



<그림 11>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제1차) 분포도

변경안 신·구 대비표

쪽	당초(2007.7)	변경(2009.4)	비고
3~5	<신설>	<p>1.3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의 배경</p> <p>□ 수도권 지역경제활성화</p> <p>1.3.1 「개발제한구역조정 및 관리계획」(2008.9)에 의해, 수도권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중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을 해제하여 산업·물류단지를 조성기로 결정하였다.</p> <p>1.3.2 국정과제인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IT, BT, ET 등의 성장동력산업, R&D 및 의료산업의 거점을 육성하여 경제위기 이후 미래의 기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산업거점과 연계된 녹색형 주거지 조성, 녹색교통망 확충을 통해 정부의 재정지출 효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p> <p>□ 서민 주거복지 확대</p> <p>1.3.3 서민들의 자가보유 촉진을 위해서는 수요가 많은 곳에 저렴한 주택을 많이 공급할 필요가 있다. 수요가 많은 도심지는 높은 분양가로 서민들의 거주가 어렵고, 민간이 주로 추진하여 안정적 공급에도 애로가 있으며 도시 외곽의 신도시 개발은 직주분리, 교통수요 유발, 조성비용과다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p> <p>1.3.4 도시내 공급만으로는 한계가 있는</p>	계획 변경 사유 명기

		<p>서민주택을 도심 접근성이 우수하면서도 보전가치가 높지 않은 개발제한구역 중 일부를 해제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p> <p>□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관리 개선</p> <p>1.3.5 개발제한구역 중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은 각종 불법 시설물이 난립하여 오히려 녹지를 훼손하고 도시환경을 크게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훼손된 녹지를 복구·정비하여 시민의 친환경적 여가공간을 확충할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p> <p>1.3.6 개발제한구역으로 관리할 가치가 낮은 지역을 일부 활용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해제를 허용하는 한편 해제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p> <p>□ 정부의 개정 광역도시계획 수립 지침 (2008.11.3) 및 시책에 부응하여 기존의 광역도시계획을 변경</p>	
7	<신설>	<p>1.4.4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은 「개발제한구역조정 및 관리계획」(2008.9)을 따라 개발제한구역 추가해제총량을 설정하고 그 활용방안을 제시하며, 이에 따라 영향을 받는 광역계획권의 목표와 전략, 공간구조 및 부문별계획의 변경내용을 포함한다.</p>	변경계획의 범위명기
13	<신설>	<p>2.2.19 개발제한구역의 추가해제방침이 결정됨에 따라 수도권 산업경쟁력 강화, 서민주택공급 확대, 주민생활 편의성 제고 등을 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추가적인 토지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p>	
14	<신설>	<p>2.2.28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개발로 인해 기존 기반시설 용량의 부족이 발생</p>	

		할 수 있고, 녹지잠식 및 녹지축 훼손이 발생하여 환경수준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15 <표1>	<p><기획요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의 탈국경화로 도시권경쟁력의 비중 증가 • 남북교류 확대 및 동북아 경제권의 성장 • 산업구조개편과 지식기반산업 시대의 도래 • 광역화, 정보화, 지방화에 따른 삶의 다양성 추구 • 쾌적한 환경, 지속가능한 발전 등 삶의 질에 대한 인식 제고 • 수도권 국제경쟁력 제고 전략 추진 <p><신설></p> <p><위협요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 집중억제정책의 지속으로 물적 개발잠재력 억압 • 용도지역제하의 경직된 토지이용 관리제도를 전제로 한 광역토지 이용계획 • 개발제한구역 조정과 광역도시계획의 연계 • 지자체간 수평적 협력관계 구축의 미약 <p><신설></p>	<p><기획요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의 탈국경화로 도시권경쟁력의 비중 증가 • 남북교류 확대 및 동북아 경제권의 성장 • 산업구조개편과 지식기반산업 시대의 도래 • 광역화, 정보화, 지방화에 따른 삶의 다양성 추구 • 쾌적한 환경, 지속가능한 발전 등 삶의 질에 대한 인식 제고 • 수도권 국제경쟁력 제고 전략 추진 • 개발제한구역 조정 등 수도권 규제 합리화를 통해 신규 산업·물류용지 확보 <p><위협요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 집중억제정책의 지속으로 물적 개발잠재력 억압 • 용도지역제하의 경직된 토지이용관리제도를 전제로 한 광역토지이용계획 • 개발제한구역 조정과 광역도시계획의 연계 • 지자체간 수평적 협력관계 구축의 미약 • 개발제한구역 추가해제에 따른 기반시설 부담증가, 녹지훼손 등 우려 	개발제한구역 추가 조정에 따른 기획요인 및 위협요인 추가
16	2.3.5 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방안(1999.7)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와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 토지를 중심으로 한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조정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조정방안을 마련하고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3.5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방안」(1999.7)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와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을 조정·관리해 왔다. 금번 계획변경으로 인해 추가 해제되는 지역도 수도권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서민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새로이 마련된 「개발제한구역조정 및 관리계획」(2008.9)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조정·관리하여야 한다.	지침 개정 내용 반영
17	□ 자연환경보전과 친환경적 관리체계 구축	□ 자연환경보전과 녹색성장 지원체계 구축	현정부의 정책

	<p>2.3.8 환경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지역과 그 영향지역이 공간적으로 불일치하여 환경오염 및 훼손에 광역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광역적·종합적 차원의 환경관리 정책이 마련되어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p>	<p>2.3.8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IT, BT, ET 등의 차세대 성장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도시개발시에는 에너지절약형 공간구조, 그린홈 등의 방식이 적용된 녹색주거지 조성을 추진해야 한다.</p>	반영
18	<p>3.2.1 수도권 공간구조를 다핵공간구조로 하고, 지역별로 자족도시권을 형성한다.</p> <p>1) 서울 외곽에 거점도시를 육성하여 단핵집중의 수도권 공간구조를 다핵공간구조로 개편하고, 지역별 다핵화와 연계된 산업배치를 통하여 거점도시 중심의 자족생활권을 형성한다.</p> <p>2) 거점도시간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여 상호기능을 보완하고, 거점도시와 인접 배후지역간의 연계를 강화한다.</p> <p>3) 향후의 도시개발예정지역은 개발축과 교통축, 거점도시와 배후지역을 고려하여 개발규모 및 개발밀도를 설정하고, 간선교통시설 및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확충과 연계하여 ‘선계획, 후개발’ 원칙에 따라 개</p>	<p>3.2.1 선진국형 지식경제체제를 구축하여 수도권을 국가의 성장동력이자 동북아의 중심도시로 육성한다.</p> <p>1) 지식기반사업과 신재생에너지 및 관련 R&D 산업의 입지여건을 개선하고 국제비즈니스 기반을 확충하여 수도권을 저탄소 녹색성장의 거점으로 육성한다.</p> <p>2) 국토의 타지역과의 연계협력을 통하여 수도권 성장의 효과가 효율적으로 파급될 수 있는 상생발전체제를 구축한다.</p> <p>3) 동북아시아 국제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을 위해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육성을 통하여 수도권의 국제기능을 강화한다.</p> <p>3.2.2 수도권 공간구조를 다핵공간구조로 하고, 지역별로 자족도시권을 형성한다.</p> <p>1) 서울 외곽에 거점도시를 육성하여 단핵집중의 수도권 공간구조를 다핵공간구조로 개편하고, 지역별 다핵화와 연계된 산업배치를 통하여 거점도시 중심의 자족생활권을 형성한다.</p>	수도권의 기능 추가

	<p>발을 추진한다.</p> <p>4) 동북아시아 국제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을 위해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육성을 통하여 수도권의 국제기능을 강화한다.</p>	<p>2) 거점도시간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여 상호 기능을 보완하고, 거점도시와 인접 배후지역간의 연계를 강화한다.</p> <p>3) 향후의 도시개발예정지역은 개발축과 교통축, 거점도시와 배후지역을 고려하여 개발규모 및 개발밀도를 설정하고, 간선교통시설 및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확충과 연계하여 ‘선계획, 후개발’ 원칙에 따라 개발을 추진한다.</p>	
19	<p>3.2.2 공간구조구상과 도시성장관리를 고려하여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을 설정한다.</p> <p>1) 개발제한구역 조정은 개발제한구역 토지의 환경평가와 공간구조상의 개발축, 녹지축 여부 및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한 해당 도시의 도시발전 제약정도를 고려하여 조정한다.</p> <p>2) 서울의 외연적 팽창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 주변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은 집단취락을 위주로 추진한다.</p> <p>3)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의 도시개발을 계획적으로 관리한다.</p>	<p>3.2.3 공간구조구상과 도시성장관리를 고려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역을 설정한다.</p> <p>1) 개발제한구역 조정은 개발제한구역 토지의 환경평가와 공간구조상의 개발축, 녹지축 여부 및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한 해당 도시의 도시발전 제약정도를 고려하여 조정한다.</p> <p>2) 개발제한구역이 과도하게 지정되어 시대적 여건변화에 따른 적합한 도시기능 확보가 어려운 시·군은 개발제한구역 추가해제를 통해 도시내 자족기능 확보 및 공간구조 개선에 활용한다.</p> <p>3)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역의 도시개발을 계획적으로 관리한다.</p>	개발제한구역 조정원칙변경 반영
21	<p>4.1.2 서울지향의 택지개발을 지양하고, 서울과 주변 도시의 과밀·혼잡을 해소할 수 있는 광역적 토지이용을 유도하여야 한다.</p>	<p>4.1.2 기존의 경부축 중심의 개발을 지양하고 서남부축, 동북부축 등에 적절한 기능과 시설을 유치하여 다핵분산형 공간구조 실현하여야 한다.</p>	개발제한구역 추가조정 내역 반영
21	<p><input type="checkbox"/>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조정</p>	<p><input type="checkbox"/> 개발제한구역 등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경쟁력 강화</p>	개발제한구역 추가

	<p>4.1.8 개발제한구역 조정 방안 설정에 공간구조의 개편방향을 반영하여야 한다.</p> <p>4.1.9 개발제한구역 조정 가능지역 토지에 대한 활용 방향 및 친환경적 개발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p>	<p>4.1.8 도시내의 재개발, 산업용지 구조조정, 한계토지의 효율적 활용 등을 통해 추가적인 도시용지수요에 우선적으로 대응하고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소요를 최소화하여야 한다.</p> <p>4.1.9 서민주택·산업·물류용지의 공급 확대를 위하여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p> <p>4.1.10 기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복구 및 친환경적 활용방안 마련하여야 한다.</p>	조정 원칙 만영
23	4.2.9 남북방향으로 중부축(중부고속도로), 서울-김포-강화-해주축, 과천-의왕-천안축의 3개 보조축을 설정한다.	4.2.9 남북방향으로 포천-서울-세종(제2경부고속도로), 서울-김포-강화-해주축, 광명-수원-천안축의 3개 보조축을 설정한다.	개발 축 변경
23	4.2.15 다핵화 추진과 경인축, 경수축상의 시가지 연담화 방지를 위한 녹지체계 형성을 전제로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을 검토하고, 서울의 외연적 확산방지를 위해 서울 중심 개발제한구역 내측경계선에서 2km 이내 지역은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의 설정을 제한한다.	4.2.15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역 검토 시 다핵화 추진과 경인축, 경수축상의 시가지 연담화 방지를 위한 녹지체계 형성을 전제로 하고, 도시 간의 연담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권역별 개발제한구역 최소 폭을 5km 이상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발 제한 구역 추가 조정 원칙 만영
26	<신설>	4.3.11 김포시는 한강과 서해를 잇는 경인운하를 활용 서울·인천·부천·고양·과주와 연계된 물류, 문화, 관광, 레저 기능을 유지하고 산재된 공장들의 계획입지 및 영상, 항공 산업 성장을 유도하되 하천, 수변공간 등의 자연환경을 고려 친환경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시군 별 개발 방향 추가

27	<신설>	4.3.16 시흥시를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지역중심도시로 육성하여 인근의 인천광역시, 안산시 및 화성시와 상호연계된 경기만 한강해권 친환경 해양녹색성장 거점으로 육성한다.	시군별 개발방향 추가
31	□ 자연환경 훼손 및 준농림지 난개발	□ 자연환경 훼손 및 관리지역 난개발	용어 변경
31	5.1.9 1990년대초 준농림지역 규제완화로 도시지역 외곽에 위치한 용인시, 광주시, 남양주시, 양주시, 고양시, 김포시, 화성시 등의 준농림지역에 아파트가 산발적으로 개발되고 공장이 무질서하게 입지하면서 공간구조 왜곡과 더불어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교통혼잡이 심화되었고, 도시지역 외곽 국도변에 음식점, 모텔 등이 난립하여 자연경관을 크게 훼손하였다.	5.1.9 1990년대초 준농림지역(현재의 관리지역) 규제완화로 도시지역 외곽에 위치한 용인시, 광주시, 남양주시, 양주시, 고양시, 김포시, 화성시 등의 준농림지역에 아파트가 산발적으로 개발되고 공장이 무질서하게 입지하면서 공간구조 왜곡과 더불어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교통혼잡이 심화되었고, 도시지역 외곽 국도변에 음식점, 모텔 등이 난립하여 자연경관을 크게 훼손하였다.	용어 변경
34	5.1.21 도시용지는 2003년 말 현재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기지정된 900km ² (수도권 면적의 7.7%)와 기존 도시화예정용지 650km ² 를 향후 20년간 도시용지로 추정하여 관리해 간다. 5.1.27 시군별로 설정된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은	5.1.21 도시용지는 2003년 말 현재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기지정된 900km ² (수도권 면적의 7.7%)와 기존 도시화예정용지 650km ² 및 추가해제되는 개발제한구역 등을 향후 20년간 도시용지로 관리해 간다. 5.1.27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역은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서민주택공급,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물류용지 공급,	개발제한구역 추가조정원칙 반영

	다핵화, 대중교통활성화, 지역공동체의 공익성 제고, 기타 개발제한구역 존치지역 내의 부적격한 도시적 토지이용의 계획적 집단화 등 본 계획에서 제시된 공간구조 구상의 핵심취지를 적극 살릴 수 있는 방향에 우선적으로 활용한다.	기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생활 편의성 제고 등에 우선적으로 활용한다.	
36	5.1.44 개발제한구역 조정 가능지역은 기존 시가지의 과밀완화를 위해 저밀도 주거용지로 개발하거나, 환경친화적인 첨단산업용지, 공공시설용지 및 여가용도로 개발하되 녹지축 보전을 우선한다.	5.1.44 개발제한구역 중 훼손정도가 심각하고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별하여 서민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거용지 및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물류용지 등으로 활용하되, 개발시 녹지축 보전을 중시한다.	개발제한구역 추가 조정 원칙 반영
36	<신설>	5.1.45 과천은 수도권 중부지역의 여가·레저·쇼핑·첨단 R&D·문화기능 보완토록 하고, 저탄소 녹색주거단지로 계획하여 관악산과 청계산의 녹지축 보전을 우선한다.	시군별 개발방향 추가
36	<신설>	5.1.46 하남은 무계획적이고 개별 입지된 시설물로 인해 난개발 되고 훼손된 지역을 활용하여 서울의 물류기능이 계획적으로 흡수될 수 있도록 상업형 물류유통 거점기능을 강화하되, 녹지축의 체계적인 정비 및 한강 수변공간을 계획적으로 정비한다.	시군별 개발방향 추가
36	<신설>	5.1.47 부천·광명은 뉴타운 사업과 연계하여 인접지역의 순환재개발을 유도한다.	"
36	<신설>	5.1.49 경인운하 주변지역은 화물·여객 터미널 및 배후연계 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토지이용을 계획하되 수변공간의 생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되도록 한다.	시군별 개발방향 추가

37	<신설>	5.1.54 이 지역의 개발제한구역내 무계획적으로 입지된 물류창고, 소규모 제조형 공장 등을 계획적 입지로 유도하여 개발제한구역내 농업경영환경을 훼손하는 도시적 토지이용을 차단하고, 서남부지역의 공업형 물류·유통 거점지역으로 계획하여 인근 지역의 안산, 서울 구로, 수원, 인천의 산업배후지원 기능을 강화하되 토취장, 폐기물 재활용 공간 등으로 훼손된 지역은 체계적으로 정비한다.	시군별 개발방향 추가
39	5.1.64 남양주는 서울에 인접한 지역거점도시로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은 기반시설, 자연환경, 경관 등을 고려하여 저밀도 친환경적으로 개발한다.	5.1.69 남양주는 서울에 인접한 지역거점도시로 개발하되, 현재 추진되고 있는 택지개발지구와 도시여건이 열악한 기존 시가지의 계획적인 정비가 연계될 수 있도록 하며,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역은 기반시설, 자연환경, 경관 등을 고려하여 저밀도 친환경적으로 개발한다.	시군별 개발방향 추가
38	<신설>	5.1.70 하남·광주·이천지역은 개별적으로 입지해 있는 물류창고, 소규모 공장 등의 계획적 입지를 유도하여 물류·유통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비한다.	시군별 개발방향 추가
54	<그림 9>	<그림 9> - 광명-수원간 고속도로, 서울-포천간 고속도로 반영 등	신설 노선 반영
55	<표5>	<표 5> - 동서축중 인천-화천 노선을 삭제하고 남북축은 아래와 같이 일부변경한다.	신설 노선 반영

		<table><tr><th>구분</th><th>노선명</th><th>주요 경유지</th><th>노 선 특 성</th><th>비 고</th></tr><tr><td rowspan="5">남북축</td><td>① 강화·평택</td><td>강화·김포·서울의곡·안산·평택 (서해안고속도로)</td><td>· 전국 간선망 남북 1축 · 서해안지역 연결 고속도로 (시흥·평택간 민자고속도로 포함) · 인천국제공항·김포·파주 간 동서2축과 연결</td><td></td></tr><tr><td>② 문산·천안</td><td>파주·고양·광명·수원·평택</td><td>· 전국 간선망 남북 2축 · 광명·수원·평택간 연계 및 서해안, 경부축 보완 노선</td><td>수원·평택 보완</td></tr><tr><td>③ 연천·의정부·성남·오산 연천대전</td><td>(경부고속도로)</td><td>· 전국 간선망 남북 3축 · 경부고속도로</td><td></td></tr><tr><td>④ 철원·세종</td><td>철원·포천·남양주·광주·용인 (제2경부고속도로)</td><td>· 전국 간선망 남북 3축과 중부고속도로축을 보완하며, 남양주·광주·용인지역 통행축 보완 · 구리·용인·안성·세종 노선 신설</td><td>남북축 보완</td></tr><tr><td>⑤ 철원·충주</td><td>철원·포천·양평·여주 (중부내륙고속도로)</td><td>· 전국 간선망 남북 4축 · 여주·구미간 중부내륙과 연계</td><td></td></tr></table>	구분	노선명	주요 경유지	노 선 특 성	비 고	남북축	① 강화·평택	강화·김포·서울의곡·안산·평택 (서해안고속도로)	· 전국 간선망 남북 1축 · 서해안지역 연결 고속도로 (시흥·평택간 민자고속도로 포함) · 인천국제공항·김포·파주 간 동서2축과 연결		② 문산·천안	파주·고양·광명·수원·평택	· 전국 간선망 남북 2축 · 광명·수원·평택간 연계 및 서해안, 경부축 보완 노선	수원·평택 보완	③ 연천·의정부·성남·오산 연천대전	(경부고속도로)	· 전국 간선망 남북 3축 · 경부고속도로		④ 철원·세종	철원·포천·남양주·광주·용인 (제2경부고속도로)	· 전국 간선망 남북 3축과 중부고속도로축을 보완하며, 남양주·광주·용인지역 통행축 보완 · 구리·용인·안성·세종 노선 신설	남북축 보완	⑤ 철원·충주	철원·포천·양평·여주 (중부내륙고속도로)	· 전국 간선망 남북 4축 · 여주·구미간 중부내륙과 연계		
구분	노선명	주요 경유지	노 선 특 성	비 고																									
남북축	① 강화·평택	강화·김포·서울의곡·안산·평택 (서해안고속도로)	· 전국 간선망 남북 1축 · 서해안지역 연결 고속도로 (시흥·평택간 민자고속도로 포함) · 인천국제공항·김포·파주 간 동서2축과 연결																										
	② 문산·천안	파주·고양·광명·수원·평택	· 전국 간선망 남북 2축 · 광명·수원·평택간 연계 및 서해안, 경부축 보완 노선	수원·평택 보완																									
	③ 연천·의정부·성남·오산 연천대전	(경부고속도로)	· 전국 간선망 남북 3축 · 경부고속도로																										
	④ 철원·세종	철원·포천·남양주·광주·용인 (제2경부고속도로)	· 전국 간선망 남북 3축과 중부고속도로축을 보완하며, 남양주·광주·용인지역 통행축 보완 · 구리·용인·안성·세종 노선 신설	남북축 보완																									
	⑤ 철원·충주	철원·포천·양평·여주 (중부내륙고속도로)	· 전국 간선망 남북 4축 · 여주·구미간 중부내륙과 연계																										
57	<표6>	<table><tr><th colspan="3"><표6></th></tr><tr><th>구분</th><th>노 선 명</th><th>경유지 및 계획노선 특성</th></tr><tr><td rowspan="6">고속·간선철도</td><td>①경부고속철도</td><td>· 서울(광명역)·천안·아산·대전·대구·부산</td></tr><tr><td>②서남선 철도</td><td>· 수도권 서부와 아산만권 산업지대 연결</td></tr><tr><td>③인천국제공항철도</td><td>· 인천국제공항과 서울역 연결</td></tr><tr><td>④중부내륙선</td><td>· 성남(분당)·광주·이천·여주·문경</td></tr><tr><td>⑤제2공항철도</td><td>· 인천국제공항·인천·판교(경부고속철도)·분당 · 개항단계에서 기존철도로 환승하고, 수도권 서남부지역 인천국제공항과 고속철도역간 연계 강화를 위한 장기구상</td></tr><tr><td>⑥ 방사형 노선</td><td>· 경인선, 경부선, 경의선, 중앙선, 경춘선, 경원선, 수인선 등 복선전철화 사업</td></tr></table>	<표6>			구분	노 선 명	경유지 및 계획노선 특성	고속·간선철도	①경부고속철도	· 서울(광명역)·천안·아산·대전·대구·부산	②서남선 철도	· 수도권 서부와 아산만권 산업지대 연결	③인천국제공항철도	· 인천국제공항과 서울역 연결	④중부내륙선	· 성남(분당)·광주·이천·여주·문경	⑤제2공항철도	· 인천국제공항·인천·판교(경부고속철도)·분당 · 개항단계에서 기존철도로 환승하고, 수도권 서남부지역 인천국제공항과 고속철도역간 연계 강화를 위한 장기구상	⑥ 방사형 노선	· 경인선, 경부선, 경의선, 중앙선, 경춘선, 경원선, 수인선 등 복선전철화 사업	문구 수정							
<표6>																													
구분	노 선 명	경유지 및 계획노선 특성																											
고속·간선철도	①경부고속철도	· 서울(광명역)·천안·아산·대전·대구·부산																											
	②서남선 철도	· 수도권 서부와 아산만권 산업지대 연결																											
	③인천국제공항철도	· 인천국제공항과 서울역 연결																											
	④중부내륙선	· 성남(분당)·광주·이천·여주·문경																											
	⑤제2공항철도	· 인천국제공항·인천·판교(경부고속철도)·분당 · 개항단계에서 기존철도로 환승하고, 수도권 서남부지역 인천국제공항과 고속철도역간 연계 강화를 위한 장기구상																											
	⑥ 방사형 노선	· 경인선, 경부선, 경의선, 중앙선, 경춘선, 경원선, 수인선 등 복선전철화 사업																											
68	5.5.21 개발제한구역의 조정가능지역등 도시화예정용지의 개발시 종전의 물함유 기능을 유지하고 집중호우 때 발생가능한 우수유출량을 감소시켜 도시관거 및 하천에 미치는 부하를 최소	5.5.21 도시화예정용지 개발시 종전의 물함유 기능을 유지하고 집중호우 때 발생가능한 우수유출량을 감소시켜 도시관거 및 하천에 미치는 부하를 최소화하며, 개발로 인한 환경파괴의 문제를 극소화시킬 수 있도록 잔디도랑, 투수구덩이, 투수·저류연못, 투수구덩이·자갈층 조합시설, 투수	문구 수정																										

	<p>화하며, 개발로 인한 환경파괴의 문제를 극소화시킬 수 있도록 잔디도랑, 투수구덩이, 투수·저류연못, 투수구덩이·자갈층 조합시설, 투수조 등 친환경적 우수관리 시스템을 적극 도입한다.</p>	<p>조 등 친환경적 우수관리 시스템을 적극 도입한다.</p>	
78~82	<p><전면수정></p>	<p>6.1 개발제한구역 조정의 기본방향</p> <p>□ 기본방향</p> <p>6.1.1 개발제한구역으로 계속 보전할 가치가 낮은 지역은 부분적으로 산업용지 등 도시용지로 해제·활용을 허용하되, 지가상승이나 환경훼손 등의 부작용은 방지한다.</p> <p>6.1.2 지정·해제대상지의 선정과 제척, 그 경계선의 설정 등 개발제한구역의 지정·해제관련 기준 등 정부의 관련지침에 따라 추진한다.</p> <p>□ 해제가능규모</p> <p>6.1.3 해제 가능규모는 기존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해제예정총량 외에 기존 해제예정 총량의 30%에 상당하는 면적과 국정과제추진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면적 범위 내에 설정한다.</p> <p>6.1.4 우선 해제된 집단취락지역의 정비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면적에 대하여는 총량과 관계없이 관례지침에 따라 별도로 인정한다. 해제가능총량 중 현재까지 활용하지 않은 면적은 전환 해제한다.</p>	<p>기존 개발제한구역 조정방안내용을 신규방침내용을 반영하여 변경</p>

	<p>□ 해제가능지역</p> <p>6.1.5 토지 특성상 보존가치가 낮은 환경평가결과 3~5등급지로서, 그 면적 규모가 20만㎡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우량농지는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하여 포함하도록 한다.</p> <p>6.1.6 지역여건이 기존 시가지·공단·항만 등에 인접하고 간선도로·철도 등의 주요 기반시설이 구비되어 대규모 기반시설 설치소요가 적은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한다.</p> <p>□ 해제절차</p> <p>6.1.7 여건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광역도시계획에서는 별도의 조정대상지역 설정없이 시·도별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만 배분·제시하되, 도 지역내에서는 시·군 또는 일정권역을 설정하여 배분·제시한다., 다만, 국가계획(서민주택공급 건설계획 등)과 관련된 경우에는 권역전체에 대한 해제가능총량만 제시하도록 한다.</p> <p>6.1.8 최초로 수립된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조정가능지역 중 해제되지 않는 지역의 목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제시가 가능하다.</p> <p>6.1.9 구체적인 해제대상지에 관한 사항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단계에서 제시하며, 이때 도시성장 및 환경보전 측면에서 보전이 필요한지 여부, 개발수요가 명확하고 중요·시급한 사업인지 여부, 도심 재개발이나 기타 용지로 개발수요 충족이 불가능한지 등을 제</p>	
--	--	--

		<p>시한다.</p> <p>6.1.10 개발수요 등을 감안하여 광역도시 계획에서 제시한 목표연도내 실질적 개발·활용이 가능한 지역 중 도시관리계획 입안일 기준으로 향후 3년내 착공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p> <p>□ 개발방향</p> <p>6.1.11 해제되는 지역은 주변 자연환경에 조화되도록 친환경적으로 개발하고, 개발로 인한 혜택은 주로 서민 및 중소기업들에게 돌아가도록 유도한다.</p> <p>6.1.12 서민을 위한 보금자리 주택단지는 생태친화적(Eco-friendly) 개발, 그린홈 등으로 이루어진 에너지 절감형 저탄소 녹색 주거단지로 조성한다.</p> <p>6.1.13 연구단지에는 신재생 에너지 등 Green-Tech 관련 연구시설을 우선적으로 유치하도록 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p> <p>6.1.14 산업단지는 저공해 단지로 개발하되, 중소기업 전용단지를 조성하여 중소기업체들도 저렴한 임대료 등 적은 부담으로 입주토록 유도한다.</p> <p>6.2 시도별 및 국책사업 해제총량 설정 및 활용방안</p> <p>□ 해제가능총량 종합</p>	
--	--	--	--

<표 7> 해제가능총량의 종합

구 분	계(km ²)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국가
기존 해제계획총량	124.507	13.280	6.997	104.230	(46.804)
해제 잔여면적	26.520	1.183	1.336	24.001	(0.796)
추가 해제가능총량	114.496	1.328	2.099	32.269	79.8
향후 해제가능총량	141.016	2.511	3.435	55.270	79.8

* 해제 잔여물량은 '09.3 기준

* 국가부문 ()는 기존 2020수도권광역도시계획에 국책사업으로 반영된 총량, 물량임

<표 8> 경기도 권역별 물량배분(안)

(단위 : km²)

권역구분	해당시군	기존해제계획총량	잔여면적	추가해제가능총량	향후해제가능총량
남부권역	수원, 성남, 안양, 과천, 군포, 의왕, 용인	20.692	5.862	1.994~2.992	7.856~8.854
서남부권역	광명, 화성, 시흥, 안산, 부천	31.473	9.940	10.233~15.349	20.172~25.289
서북부권역	고양, 김포	15.162	1.107	3.241~4.862	4.348~6.968
동남부권역	하남, 광주, 양평	10.965	0.792	3.339~5.008	4.131~5.801
동북부권역	남양주, 의정부, 양주, 구리	25.938	6.301	6.208~9.312	12.509~15.613

<표 9> 서민주택 권역별 배분계획(안)

구 분	중부	서부·북부	동부·남부
면적(km ²)	40~60	20~40	20 이내

* 권역별 배분은 향후 개발시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 권역구분은 2003~2012 주택종합계획의 생활권역 구분에 따름

구 분	시 · 군
중부	서울특별시, 고양시, 의정부시, 구리시, 하남시, 성남시, 광명시, 과천시, 남양주시
서부·북부	인천광역시, 부천시, 김포시, 시흥시, 파주시, 연천군, 동두천시, 양주시, 포천시
동부·남부	가평군, 양평군, 광주시, 이천시, 여주군, 수원시, 안양시, 의왕시, 군포시, 안산시, 용인시, 오산시, 화성시, 평택시, 안성시

□ 서울특별시의 개발제한구역 활용방안

6.2.1 서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 및 물류공간으로 활용한다. 특히 서울의 신성장동력으로 서울의 전략산업과 비교우위산

	<p>업을 육성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한다.</p> <p>6.2.2 기성 시가지의 도시재생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완충공간으로 활용한다. 기성 시가지내 부적격 기능을 이전하기 위한 대체부지로 활용하고, 이전된 부지는 도시재생 촉진을 위한 용도로 복합개발 추진한다.</p> <p>□ 인천광역시의 개발제한구역 활용방안</p> <p>6.2.3 시가지 중심지 체계개편에 따른 도심 기능강화, 지역적 특성에 맞는 용도지역 지정 및 직주근접형 토지이용 등의 계획적 개발 유도에 활용한다. 한편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신창조산업육성 및 여가·관광인프라 구축 등 계획적인 지역개발을 도모한다.</p> <p>6.2.4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관련 시설부지로 활용한다. 주요 경기장 및 부대시설은 도시가 지향하는 발전 축에 배치하여 중심지가 활성화되도록 하고 주거지역 인접 또는 연접지역에 배치하여 대회 이후 활용도를 제고한다.</p> <p>□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활용방안</p> <p>6.2.5 주거·교육·문화·레저·산업·의료·공공체육시설 등 자족기능을 갖춘 친환경 녹색성장 복합단지로 조성한다. 서민주택단지와 연계하여 주거·산업·문화 등이 어우러진 복합개발 추진하며, 해제지역 개발시 불법용도변경된 시설물, 물류창고, 소규모 공장 등을 계획입지로 유도하여 기능을 흡수한다.</p> <p>6.2.6 그동안 시가화가 많이 진행된 경부</p>	
--	--	--

		<p>필요시 주변의 훼손된 지역을 녹지·공원 등으로 복구한다.</p> <p>6.2.11 개발되는 지역은 탄소저감계획, 그린홈 등을 통해 기존 국민임대단지와 차별화된 친환경 보금자리주택지구를 건설한다.</p> <p>6.2.12 경인운하 김포터미널 시설 중 마리나 및 항만친수시설과 물류단지 시설로 1km²를 활용한다.</p>	
--	--	---	--